ISSN 1228-291X

교육개발

Autumn_2010
Vol.37, No.3

특별기획 1
교육자치시대, 16개 신임 시 · 도교육감에게 듣는다 :
'주요 교육정책 및 현안에 대한 16개 시 · 도교육감들의 입장,
향후 4년간의 정책추진 플랜'

특별기획 2
제5회 한국교육개발원 · 중앙일보 교육포럼 지상중계 :
'교육기부 왜,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기획 3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기획위원회 집담회 지상중계 :
'글로벌 창의인재, 지식과 인성, 예지력 갖춰야'

이슈와 전망
스마트폰의 교육적 아이콘

초대석
대학 자율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역할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교육개발
Autumn
2010 Vol.37 No.3

「교육개발」은 한국도서잡지 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내용은 본원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

• **발행처** | 한국교육개발원
• **발행인** | 김태완
• **편집장** | 문성룡
• **출판심의위원** | 구자억(위원장), 김경애, 김미란, 문성룡, 박균열, 박종효, 안성훈, 윤종혁, 정미경, 최상덕, 현 주
• **편집실** | 이범진, 정경아, 정미영
• **디자인 · 인쇄** | (주)현대아트컴 02-2278-4482
• **홈페이지** | edu.kedi.re.kr
• **발행** | 2010년 9월 20일
• **계간 등록번호** | 서초바 00022
• **등록변경** | 2009년 5월 27년
• **값** | 6,500원
• **구독문의** | 02-3460-0472 keditor@kedi.re.kr

CONTENTS

04 **파워인터뷰**
사공일 서울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에게 듣는다

14 **특별기획 1 : 교육자치시대, 16개 신임 시 · 도교육감에게 듣는다 :**
'주요 교육정책 및 현안에 대한 16개 시 · 도교육감들의 입장, 향후 4년간의 정책추진 플랜'

57 **특별기획 2 : 제5회 한국교육개발원 · 중앙일보 교육포럼 지상중계 :**
'교육기부 왜, 어떻게 할 것인가'

63 **특별기획 3 :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기획위원회 집담회 지상중계 :**
'글로벌 창의인재, 지식과 인성, 예지력 갖춰야'

70 **세계의 교육**
EU : 유럽연합 국가들의 대학교육정책 변화 방향
오정은 | IOM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미국 : 오바마정부의 개혁의 핵심은 '대학교육'
류미경 | 미국 고등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

86 **초대석**
대학 자율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역할
이기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 고려대학교 총장

91 **이슈와 전망**
스마트폰의 교육적 아이콘
임 걸 |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98 **정책과 현장**
교육전문직 인사제도 개선, 전망과 과제
박영숙 | 한국교육개발원 학교컨설팅평가연구본부장 · 수석연구위원

103 **현장르포**
탈북학생들에게 맞춤교육 제공하는 디딤돌학교
안성 삼죽초등학교 · 한겨레중고등학교
신효숙 |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특임센터 학교지원팀장

교육전문 사회적 기업, 행복한학교재단의 방과후 수업
박관규 | 한국일보 정책사회부 기자

Power Interview

사공일 서울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

대담 _ 김태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INterview

“비G7 국가로는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 개최… 국격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지식함양하는 건 교육… 교육열 높은 한국, 지식기반경제시대 주도할 호기 맞아”

사공일 서울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에게 듣는다.

“우리나라가 UN에 가입한 것이 1991년입니다. 채 20년도 안돼 비G7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큰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입니다. 세계인의 이목이 우리나라로 집중되는 이 때에, 우리가 리더십을 잘 발휘해 서울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러낸다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우리 문화와 역사를 전 세계에 알리고 우리 국민 모두의 선진화된 시민의식을 보여주어 국격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사공일 위원장은 G20 정상회의의 의미와 우리나라의 역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사공일 위원장은 “정상회의를 세련되고 효율적으로 잘 진행해 오신 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내다 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우리 국민들은 각자 생활 속에서 남을 배려하고 법과 질서를 잘 지키며 예의범절을 갖춘 선진시민의식을 보여주어야 한다.”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김태완 한국교육개발원장이 지난 8월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준비위원장실에서 사공일 위원장을 만나 서울 G20 정상회의의 개최 의미와 한국의 역할, 경제적 효과, 주요 의제, 준비상황 등을 들어봤다.

김태완 원장 :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이상 가는 국제적인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과 역량을 다시 한번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겨지는데, G20은 무엇이며, 한국 개최가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경제적 · 사회적 효과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사공일 위원장 : G20의 G는 Group이라는 뜻입니다. G20은 192개 UN가입국 중 경제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있는 20개 나라의 모임입니다. 우리 지구촌의 유지 격 나라들만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죠. 국제사회에서 이름 있고 영향력을 가진 유지 격의 모임에 우리가 좌장으로서 새로운 세계 경제금융질서와 규범을 창출하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외교사적인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UN에 가입한 것이 1991년입니다. 채 20년도 안돼 비G7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큰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입니다. 이것은 그 동안 우리 국민 모두가 열심히 일해서 축적해온 국력의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습니다. G20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로는 정상회의 기간 동안 25여개국 정상들과 IMF, 세계은행 등 주요 국제기구의 장들을 포함해 35명 내외의 국가 원수급 인사들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공식수행원과 취재진, 경호요원 등을 합치면 1만 명 이상 방한이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숙박, 교통, 켄벤션 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직접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됩니다. 세계인의 이목이 우리나라로 집중되는 이 때에, 우리가 리더십을 잘 발휘해 서울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러낸다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우리 문화와 역사를 전 세계에 알리고 우리 국민 모두의 선진화된 시민의식을 보여주어 국격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우리나라 수출액이 약 4천400억달러로 예상되는데, 이중 코리아 프리미엄을 1%만 개선해도 44억달러, 약 5조원 정도의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똑같은 물량을 수출하고도 우리나라에 약 5조원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국격을 높이면 이런 경제적인 이득이 기대되고 이런 혜택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돌아갑니다.

■ 사공일
서울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

“G20은 192개 UN가입국 중 경제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있는 20개 나라의 모임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이름 있고 영향력을 가진 유지 격의 모임에 우리가 좌장으로서 새로운 세계 경제금융질서와 규범을 창출하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외교사적인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G20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로는 정상회의 기간 동안 25여개국 정상들과 IMF, 세계은행 등 주요 국제기구의 장들을 포함해 35명 내외의 국가 원수급 인사들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공식수행원과 취재진, 경호요원 등을 합치면 1만 명 이상 방한이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숙박, 교통, 켄벤션 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직접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됩니다.”

김태완 원장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울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인데요. 그러자면 G20 의장국으로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사공일 위원장 : 서울 G20 정상회의가 국제경제협력에 관한 Premier 포럼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G20 국가의 관심사항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모임인 OECD 회원국이지만 경제개발에 관한 1차적인 경험을 갖고 있으며, 또한 금융위기와 이를 극복한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개도국 및 신흥국과 선진국 간의 교량역할을 하는데 가장 유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들 나라의 주요 관심사인 경제개발과 글로벌 금융안전망 확충에 관한 추가 의제를 제안하고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의장국으로서 선진국과 신흥국이 동등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의제의 균형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정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는 물론, G20체제 자체의 정당성 제고와 G20의 제도화 기반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태완 원장 : 서울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는 어떤 것입니까. 개최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요.

사공일 위원장 : 서울 G20 정상회의의 의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동안 4차례에 걸쳐 합의된 사항들의 이행점검 및 추진입니다. 예를 들면 세계경제의 강하고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Framework의 이행을 위한 조치, 그리고 IMF 쿼터 조정, 은행자본 · 유동성 규제 등 금융개혁과제에 관한 합의 도출입니다. 이러한 팔로우 업(follow-up) 의제가 전체 의제 중에 60~70%를 차지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나머지 30~40%는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새롭게 추가한 의제들입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의제로는 주로 신흥경제국 및 개도국인 비G20 국가에게 도움이 될 경제개발과 글로벌 금융안전망 확충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의제들에 대한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쉐르파회의, 재무장(차)관 · 중앙은행총재(부총재)회의 등 서울 G20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실무회의에서 논의의 진전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 김태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이상 가는 국제적인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과 역량을 다시 한번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겨지는데, G20은 무엇이며, 한국 개최가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경제적 · 사회적 효과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

“세계 유수의 기업인 100여명을 초청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정상들에게 건의하고 또 자기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 CEO들은 ‘지속 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무역투자, 금융, 녹색성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4개 의제에 대해 토론을 통해 그들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입니다.”

INterview

실무그룹(WG) 회의, 컨퍼런스 콜, 양자면담 등 다양한 채널을 동원하여 G20 및 IMF, 세계은행, FSB 등 관련 국제기구와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태완 원장 : 서울 G20 정상회의 하루 전인 11월 10일에 비즈니스 서밋이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인사들이 참여하며, 주로 어떤 논의를 하게 되나요.

사공일 위원장 : 지금까지 G20 정상회의는 정부 차원의 모임이고, 거기에 일부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회의였습니다. 민간부문의 참여와 민간부문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비즈니스 서밋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유수의 기업인 100여명을 초청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정상들에게 건의하고 또 자기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 CEO들은 ‘지속 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무역투자, 금융, 녹색성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4개 의제에 대해 토론을 통해 그들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입니다. 참가자들은 주로 G20 국가의 최고 기업인 (1개국 당 평균) 4-5명씩 80-100명이 초청되고, 비G20 국가에서도 일부 초청을 해서, 100명 내외의 최고 기업인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초청한 일부 최고 기업인들은 일정상 부득히 참석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많은 기업들이 참가를 원하고 있으나 참가자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G20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러한 비즈니스 서밋이 G20 정상회의 과정의 중요한 일환으로서 계속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데 목표를 두고 비즈니스 서밋을 준비하고 있으며, 다음 의장국인 프랑스와도 비즈니스 서밋 제도화를 위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태완 원장 : 세계경제와 한국경제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공일 위원장 : 아직도 세계경제 앞날을 전망하기에는 많은 불확실한 요인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경험한 남유럽과 같은 위험요인이 상당히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새로이 탄생한 G20 정상회의에서 당면한 세계경제 문제가 계속 다루어지고 있고, 또한 국제경제 공조의 중요성을 금번 위기를 통해 인식한 주요국들이 G20을 중심으로 긴밀한 경제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긍정적 요인도 있습니다. 항상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확률적으로 세계경제의 더블딥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물론 개별 국가별로 더블딥 리세션을 면치 못하는 나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경제 전체의 더블딥 리세션은 피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세계경제의 강한 회복세는 당분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나 OECD 등 국제기구들이 지속적으로 한국의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상향조정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년에도 거의 6%에 가까운 경제성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 수출과 내수가 어느 정도 호조를 보일 것으로 내다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국경제의 회복저조, 중국경제의 출구전략 시행에 따른 성장세 둔화 가능성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 등 여러 가지 위험요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이러한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완 원장 : 서울 G20 정상회의를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와 국격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문이 각 계로부터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위원장으로서 이를 위해 어떤 복안이랄까,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사공일 위원장 : 서울 G20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 째는 정부가 해야 할 일로 G20 정상회의 자체를 내용과 행사면에서 잘 치러내는 것입니다. 당면한 지구촌의 경제 · 금융문제 해결과 위기이후 세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의제를 잘 설정하고 이에 대한 G20 회원국의 중지를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불릴 수 있는 새로운 의제, 즉 경제개발과 금융안전망 강화 등에 관한 G20 국가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회의 자체도 세련되고 안전하게 개최해야 합니다. 둘째는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서울 G20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고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로 활용될 때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 국민 모두의 몫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인격은 개개인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만, 한 나라의 국격은 그 나라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세계인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의 문화와 전통, 그리고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줄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국민 모두가 각자 생활 속에서 남을 배려하고 법과 질서를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예의범절이 있는 선진 시민의식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

Power Interview

국민 모두의 참여와 노력으로 우리의 국격이 향상되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다면 그에 따른 직 · 간접적인 혜택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김태완 원장 : 최근 들어 미국 내에서는 대기업 CEO들이 정부의 재정만 가지고는 좋은 교육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장학재단을 세우거나 사재 등을 털어 교육을 지원하는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대부분 정부에 교육을 맡겨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만 가지고는 좋은 교육을 하기 어렵습니다. 기업 차원에서도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공일 위원장 : 옳으신 말씀입니다. 기업들이 교육에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을 통해 인재를 길러내고 우리가 길러낸 인재들이 세계로 나아가 경제발전을 이루는 동력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OEC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교육예산이 사교육비를 포함하면 GDP 대비 8 - 9%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교육비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도 적지 않습니다. 교육에 투입될 수 있는 민간자본도 많습니다. 이것을 외국에 가서 쓰거나 하는데, 이것을 국내에서 제대로 활용하기만 하면, 우리 교육의 양과 질을 더 많이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자본을 교육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면밀히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여입학제도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GDP 대비 4%인 정부 교육예산을 초중등교육에 투자하고, 고등교육에 드는 예산은 민간자본을 늘려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예산 4%를 모두 초중등교육에 투자하면, 교육의 제반 환경은 물론, 교사의 질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 “최근 들어 미국 내에서는 대기업 CEO들이 정부의 재정만 가지고는 좋은 교육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장학재단을 세우거나 사재 등을 털어 교육을 지원하는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대부분 정부에 교육을 맡겨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태완 원장 : 정부가 부담하는 교육예산과 민간이 부담하는 교육예산을 합하면 OECD 최고수준이 될 것입니다. 다른 OECD 국가들은 민간이 부담하는 교육예산이 적은 편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나 시스코와 같은 대기업들이 학교에 첨단기술을 적용하고, 재정지원을 하며, 학교교육을 높은 수준에서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학부모들이 단위학교에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좋은 교육을 하기에는 부족한 편입니다. 사회 지도자들과 기업이 초중등과 고등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보다 더 많이 투자를 해야 합니다.

사공일 위원장 :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제도적으로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15년 전 얘기지만, 미국의 경우, 어느 갑부나 독지가가 5천만불 이상을 기부하면 아예 대학의 이름을 그 기부자의 이름을 따서 명명합니다. 3천만불 이상을 내겠다고 하면, 대학 내 건물 한 동의 이름을 그 기부자의 이름으로 합니다. 1천만불 이상을 내면 대학 강의실의 이름을 기부자의 이름으로 붙여주고, 또 몇백불 이상을 내겠다고 하면, 도서관 의자에 이름을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 기부자를 예우하고 교육기부에 대한 통로를 열어 놓고 있습니다.

앨빈 토플러가 얘기하는 세계 발전사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단군이래 오늘날과 같이 유

리한 고지에서 국제경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토플러가 얘기하는 제1물결시대는 농경시대로 땅이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던 시대인데, 이때 우리는 땅도 적고 부존자원도 적어 불리했습니다. 제2물결시대는 산업화시대로, 대량 자본축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본축적을 통해 대량생산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유리한 시대였는데, 우리나라는 이 역시 불리했습니다. 제3물결시대는 지식기반경제시대, 정보화시대입니다. 지식기반경제시대이기 때문에 국가발전에 전략적이면서 가장 생산적인 요소가 바로 지식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가 지금 국제경쟁에서 유리하게 되었는가? 지식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타고 나는 것도 있지만, 계속해서 지식을 길러주고 함양해 주는 것은 교육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IQ와 머리가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주장하지 않더라도 지식을 추구하는 다시말해 교육열 만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이상 더 좋은 여건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식기반경제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인데, 우리나라는 교육에 관해 초과수요가 문제가 되는 나라입니다. 초과수요라는 말이 약간 어색하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정부가 해줄 것은 (교육)공급만 잘 해주면 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김태완 원장 : 위원장님께서는 우리나라 교육이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사공일 위원장 : 교육에서도 Fast Track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유를 줘서 머리가 좋은 아이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라톤을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몇 천 명이 마라톤에 참가하는 데, 기록보유자와 아마추어를 같이 뛰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기록보유자들도 기록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대로 놔두면 결국 하향평준화되어 버릴 것입니다. 학교를 자율화, 다양화 해서 머리 좋은 아이들이나 잘 하는 아이들은 Fast Track으로 보내고, 조금 뒤처지는 아이들은 그들 나름대로 재능과 잠재력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 “기업들이 교육에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을 통해 인재를 길러내고 우리가 길러낸 인재들이 세계로 나아가 경제발전을 이루는 동력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GDP 대비 4%인 정부 교육예산을 초중등교육에 투자하고, 고등교육에 드는 예산은 민간자본을 늘려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예산 4%를 모두 초중등교육에 투자하면, 교육의 제반 환경은 물론, 교사의 질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김태완 원장 : 자녀들이 다 장성하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자녀들의 교육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평소 가지고 계신 교육관, 교육철학은 무엇입니까.

사공일 위원장 : 자녀교육 철학이라고 할 만큼 거창하게 내세울 것은 없지만, 평소 아이들에게 강조해 온 것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라.' 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은 태어날 때 한정된 능력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자기개발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모든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강조한 것은 '우리 모두는 '공동체'의 일원임을 잊어서는 안 되며, 가장 중요한 실천덕목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라는 것을 늘 강조해 왔습니다. 본인은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공적인 일로 늘 바빴던 탓에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 많은 대화를 못해 항상 아이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완 원장 : 1970년대 초 한국개발연구원(KDI)을 거쳐 산업연구원장, 재무부장관,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그리고 지난해 2월 한국무역협회장에 취임하셨고 현재의 서울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해 쉼없이 뛰어오셨는데, 40여 년의 기간동안 견지해온 신념이랄까 철학, 공직관, 좌우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공일 위원장 : 첫째는 우리 아이들에게 늘 당부한 것과 같이 제 스스로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능력계발을 위해 노력하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국제적 안목을 기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위치를 감안할 때 바깥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모르고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더욱이 오늘날과 같이 세계화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 하에서 남보다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대응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울러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에도 국제적 안목이나 식견을 가진 글로벌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Power Interview

김태완 원장 : 한국교육개발원이나 교육계에 대해 위원장께서 가지고 계신 바람이나 기대, 제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공일 위원장 : 우선 교육계에서 서울 G20 정상회의에 대해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G20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정부의 역할로, 아젠더를 잘 만들고, 행사를 안전하게 잘 치루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 국민 모두의 몫입니다.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에 세계의 모든 이목이 우리에게 집중됩니다. 이때 우리 국민 모두가 선진 시민의식을 갖고 제 역할을 다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우수한 국민이라는 것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참여해야 합니다. 사소하게는 일상생활 속에서 쓰레기 안 버리고, 교통법규 잘 지키고 하는 것이 선진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잘 설명해 주었으면 하며, 한국교육개발원이 이를 선도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어릴적부터 우리 모두가 공통체의 일원으로써 지켜야 할 덕목들을 잘 지키고 남을 배려하는 정신을 생활화하게 하는 우리 어린 2세들을 위한 교육방안이 꼭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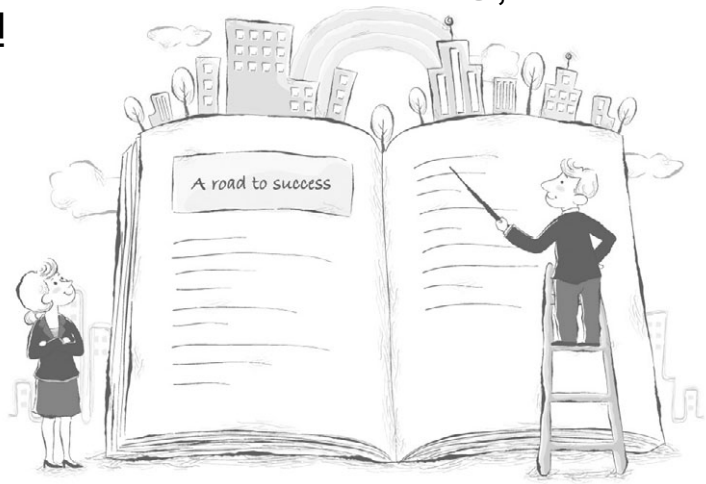
사공일 서울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1940년 경북 군위 출생, 경북고('58)를 나와 서울대 상대('64)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UCLA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 경제학박사학위('69)를 받았다. 미국 뉴욕대학교 교수('69~'73), 영국 셰필드대학교 초청교수('71)로 외국 대학에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와 한국개발연구원(KDI, '73~'82)에서 수석연구원, 연구위원, 부원장 등을 지냈다. 그 후, 산업연구원(KIET) 원장('83),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83~'87), 재무부장관('87~'88), 국제통화기금(IMF) 특별고문('89),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아시아 · 유럽비전그룹(AEVG) 의장('98~'00), 외교통상부 대외경제통상대사('00~'02),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08~'09), 대통령 경제특별보좌관('08~'09), 대통령직속 G20 기획조정위원회 위원장('09) 등을 역임했다. 지금은 서울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위원장('09~) 외에 한국무역협회 회장('09~), 산학협동재단 이사장('09~), 대한상사중재원 이사장('09~), 대통령 자문 통일고문회의 고문('09~), 한국수입업협회 고문('00~), 고려대 석좌교수('03~) 등을 맡고 있다. 국민훈장 모란장, 벨기에 왕관대관장, 중화민국 대수경성훈장, 청조근정훈장, 고려대정책인대상, 자랑스런 UCLA인상(07) 등을 수상했다. 주요 저서로 『경제개발과 정부 및 기업가』,『세계 속의 한국경제』,『세계는 기다리지 않는다 』외 다수가 있다.

긴급온라인인터뷰 :

교육자치시대, 16개 신임 시 · 도교육감에게 듣는다 :

주요 교육정책 및 현안에 대한 16개 시 · 도교육감들의 입장, 향후 4년간의 정책추진 플랜



6 · 2 지방선거에서 전국 첫 동시 직선제로 선출된 민선 교육감들이 9월 1일로 취임 두 달을 맞았다. 그동안 교육현장은 무상급식,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학생인권조례, 체벌금지, 교육비리, 학교안전 등 핫 이슈가 잇따라 터지면서 혼란스러웠고, 일선 학교는 학교대로, 지역교육청이나 시 · 도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정부 정책이나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일부 진보 교육감들은 학업성취도 평가나 자율형사립고 지정,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을 둘러싸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정책갈등을 빚기도 했다. 본지는 취임 두 달을 맞은 전국 16개 신임 시 · 도교육감들과의 긴급온라인인터뷰를 통해 시도교육감들이 현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및 현안에 대해 어떤 생각(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어떤 정책기조를 가지고 도(시)정을 펼쳐 나갈 것인지 앞으로 4년간의 정책추진 플랜을 들어봤다.

■ 주요 교육정책 및 현안에 대한 16개 신임 시 · 도 교육감들의 입장 ■

	곽 노 현 서울시교육감	임 혜 경 부산시교육감	우 동 기 대구시교육감	나 근 형 인천시교육감	김 신 호 대전시교육감	김 복 만 울산시교육감	김 상 곤 경기도교육감	민 병 희 강원도교육감
무상급식	내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중학교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	부산교육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 재원마련에 최선 다할 것	다른 해야 할 사업들이 많아 전면 시행은 어려움	선별적 급식은 학생들에게 상처 정부의 지원 필요	예산 상 어려움 국가나 지자체의 획기적 지원이 있어야 함	열악한 형편으로 전면 실시는 어려움 단계적 확대	2014년까지 초등학교~중학교까지 전면 실시 계획	2011년 유치원, 2012년 중학교, 2013년 고등학교까지 실시
학업성취도 평가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의 공감을 끌어낼 대안 강구	모든 학생 대상으로 하는 국가수준의 평가 필요	전수 평가 필요	서열 발표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는 반대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경쟁을 유도해서는 안 될 것	전국 및 지역별 서열화 등 민감한 부분 제거하고 안정된 시행해야	지역 특수성 고려하지 않아 서열화 조장 표집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함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 보장 필요, 표집방식 실시
교원능력 평가제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평가	연내 입법화 통해 갈등 최소화 필요	시행 후 문제점은 향후 보완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	급하게 진행하기보다는 의견을 모아 추진	교원 전문성 향상 위해 필요 법제화 필요	객관성 확보를 구실로 실적 위주의 전시적 행태를 유발해서는 안 됨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구성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함
학생인권 조례	찬성하며, 수위조절 필요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합의하에 합리적으로 제정해야 함	학생인권존중 풍토 조성이 바람직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 수렴	교원 보호에 대한 조례도 함께 제정 되어야함	교원 80%이상이 반대 학교풍토조성에 최선	9월에 전 도민 대상으로 의견 수렴	체벌 대신할 지도 대책 마련
학교 다양화	시경쟁과 사교육비 유발	입시 중심의 수업이 되지 않도록 행정지도 강화	지역의 인재육성과 지역교육의 불균형 해소	찬성하지만 부작용 조심	입시학원 전락이 아닌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미래인재육성을 위해 필요	공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보편성 원칙에 어긋남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바람직

	이 기 용 충북도교육감	김 종 성 충남도교육감	김 승 환 전북도교육감	장 만 채 전남도교육감	이 영 우 경북도교육감	고 영 진 경남도교육감	양 성 언 제주도교육감	장 휘 국 광주시교육감(당)
무상급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매칭펀드방식이 바람직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 지자체와의 협조가 절실	의무급식이라는 용어가 적절 2011년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 준비완료	복지차원을 넘어 그 자체가 교육 2013년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목표	원칙적으로 찬성 정부 및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해야 함	의무교육실현의 한 방편 그러나 교육과정 정상화 예산이 사용되어서는 안 됨	전체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은 자치단체 및 정부의 예산지원이 있어야 가능	초등학교와 중학교,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추진할 계획
학업성취도 평가	우수학교만 공개	지금처럼 전수평가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줄세우기식 공개는 금지 해야	평가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교사 교과부 평가는 바람직하지 않음	교육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부작용 최소화 방안이 관건	기초 학력 부진 학생 파악 위해 필요	근본취지에 찬성하지만 부작용 방지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학업성취도 파악 및 학력향상기초자료 위해 필요	일제고사식 학업성취도평가는 반대 표집평가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함
교원능력 평가제	평가 후 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맞춤형 연수등의 자료로 활용	필요하나 시행 방법은 개선의 여지가 있음	자발적인 수업평가 도입	평가항목이 객관적이지 못함	교원의 전문성 향상 위해 필요	교원의 전문성 향상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필요	교원의 전문성 향상 위해 필요	일방적인 평가 반대 구성원 의견 수렴해야
학생인권 조례	교육구성원들의 자유로운 협의로 제정 추진	인권 존중 해야 하지만 법제화는 반대	시도교육청의 조례로도 보장될 수 있음	올해 안에 공청회 열어 의견 수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교육공동체의 합의를 통해 추진	장기적 관점에서는 긍정적 검토	학교의 자율적 권한만으로도 학생인권 보장 가능	교권도 보장하는 조례도 추진
학교 다양화	외고 입학제도 방안에 적극 찬성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사교육 유발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	고교평준화정책과 충돌. 혁신학교 추진이 더 바람직	학생의 경제적 배경이 크게 작용하는 유형은 재고해야 함	입시를 위한 특목고라는 인식에 대한 개선 필요	학생, 학부모의 선택의 기회 확대	매우 바람직한 정책	명문대 입학통로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반대

▶ 질문, 하나 신임 교육감의 소회, 포부, 앞으로의 계획 등을 말씀해 주십시오.

곽노현 서울특별시교육감 : 취임 후 교육감 업무를 파악하고 기본 틀을 짜면서 보낸 두 달 동안 수도교육의 규모와 무게를 실감하였습니다. 그동안 서울교육 전반에 걸쳐 참여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버넌스 혁신과 투명한 행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외부인사가 중심이 되는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 구성, 개방형 감사담당관 공모, 교장 및 교육장 공모 등을 추진하였고, 학생 인권존중의 기틀로서 2학기부터 학교체벌을 전면 금지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반 위에 시민들과의 약속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뒤처진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 인권과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학교만들기, 다양한 방과후활동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인프라 구축, 혁신학교 운영, 무상급식의 단계적 실현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혜경 부산광역시교육감 : 전국 최초의 여성교육감으로 취임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유 · 초 · 중 · 고 51만 명의 학생들에게 최대한 좋은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의 섬세하고 깨끗한 특성을 살린 리더십과 강인하고 꼼꼼한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교육행정을 펼쳐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교육, 깨끗한 교육, 알찬 교육, 교육과 복지를 통합한 따뜻한 교육을 꼭 실현하고 싶습니다.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학력신장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으며, 사교육을 받지 않고 학교 교육만으로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일구고 키워갈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올바른 품성을 지닌 인재 육성을 위해 인성교육에 힘쓸 것이며 충 · 효 · 예절교육을 강화하고 친절, 배려, 협동, 봉사의 인간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활동에 힘을 쏟겠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을 위해 초등학교 전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점진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동기 대구광역시교육감 : 취임 후 쉼 없이 달리다 보니 무더운 여름도 금세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당선 후 기쁨도 잠시, 이후 군입대를 앞둔 사람처럼 앞으로 감당해야 할 막중한 책임감에 매일 매일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대구시민들이 대학총장 출신인 저에게 대구교육의 수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어주신 것은 대구교육이 처해있는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세계 수준의 일류교육으로 도약시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취임전 부터 학력신장, 사교육비 경감, 교육비리 해소 등에 초점을 맞춰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왔고, 9월 1일자로 대구교육청은 변신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공약사항을 이행하고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 구성한 정책기획단을 통해 곧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을 계획인데, 변화와 개혁으로 일선 교육현장을 새롭게 바꾸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근형 인천광역시교육감 : 45년 넘게 인천교육과 함께하면서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이고 희망이라는 생각으로 교육에 열정을 쏟았던 것에 대해 시민과 인천 교육가족이 인정해 준 것 같아 고맙게 생각합니다.

인천에서 태어나 인천에서 배우고 가르친 인천 토박이로서 누구보다 인천교육의 실상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인천 학부모님이나 시민들의 바람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각계각층에서 바라는 인천교육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한데 모아 글로벌 시대에 맞는 인재교육, 자율과 책무를 다하는 책임교육, 보람과 만족을 주는 감동교육, 모두가 함께하는 반듯한 교육을 실현하여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에서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에게는 꿈을, 학부모에게는 만족을 그리고 교사에게는 보람을 주는 인천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김신호 대전광역시교육감 : 교육감에 취임한 지 벌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 6.2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했기 때문에 기존에 수행했던 교육정책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심도 있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4년 동안 대전의 교육감직을 수행하면서 교단의 안정과 화합을 바탕으로 대전교육의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혼신의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 점이 유권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3선의 선택을 받은 것 같습니다. 대전시민과 교육가족에게 감사드리고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보답을 하려고 합니다.

대전교육청이 교육청평가 2년 연속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된 결과가 입증하듯이 현재 교육활동을 위한 기본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 4년은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의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비중을 두고 지원을 했기 때문에, 향후 4년은 학력신장과 영재교육, 영어교육 등 국제화 · 개방화 시대에 걸맞은 21세기를 이끌어갈 인재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김복만 울산광역시교육감 : 이번 선거에서 제6대 울산교육감으로 입성하기까지 나름대로 철저한 준비와 남다른 각오로 교육감이란 직책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임기동안 학생, 선생님, 학부모가 주체인 인간중심 교육으로 '희망과 감동을 주는 행복 울산교육' 이라는 교육비전을 실현해나갈 계획입니다. 울산은 우리나라의 산업수도이며, 전국에서도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풍요로운 도시지만, 아직 학생들의 학력수준은 낮은 편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울산의 경제수준만큼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바른 품성을 가진 울산인재를 키우는 것이 울산교육의 가장 큰 목표이고, 시민 모두의 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 이 자리를 빌려 저와 경기교육에 전폭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경기도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경기교육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시도했던 변화와 개혁의 정책을 완성해 달라는 도민의 뜻이기에 무거운 책무감을 느낍니다.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킨 입시종속의 경쟁과 서열중심

의 교육에 마침표를 찍고, 미래지향적인 선진교육을 실현해 달라는 도민의 기대와 염원을 동력으로 삼아, 4년 동안 경기교육 100년의 약속이행에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경기교육의 기본방향인 자아 가치교육, 학교 책임교육,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학력 대혁신, 혁신학교 확대, 무상급식 완성과 무상교육 확대, 국제화된 민주시민 육성, 사교육비 경감, 참여협육 등의 6대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 도민들께서 저를 선택하신 것은 정책에 대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공약사항을 반드시 이행할 것입니다. 저의 직책 앞에는 늘 진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저는 진보교육감보다는 강원도교육감이라고 불리고 싶습니다.

제가 취임한 후 강원도의 교육정책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정상적인 권한에 의한 정책시행이 마찰이나 갈등으로 부각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도되는가' 가 아니라, '교육을 위해 무엇을 시행하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교사로 교육계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지금도 제 마음의 뿌리는 선생님입니다. 다만 그 대상이 강원도 전체의 아이들이 되었다는 것만 다를 뿐입니다. 그만큼 진보와 보수의 입장이 아닌 '아이들' 이 제 정책시행의 지향점입니다.

이기용 충청북도교육감 : 분주함 속에서 참으로 긴 시간이 흐른 듯한 느낌입니다. 도민을 만나는 여러 자리에서 충북교육에 대한 저의 소신과 방향을 재삼 말씀드리면서, 제15대 충청북도교육감으로서의 책무를 다시금 다져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교육에서 속도도 중요하고, 방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악재가 됩니다.

앞으로 우리 충북교육 정책의 공과(功過)를 심도 있게 분석함은 물론 각계각층의 도민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면서, 오늘이 즐겁고 내일이 행복한 학교, 미래를 꿈꾸는 행복한 교육세상 의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김종성 충청남도교육감 : 이번 교육감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지지해주신 200만 도민과 교육가족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거를 치르며 유권자들이 얼마나 현명한가를 새삼 느낍니다. 늘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하고 깨끗한 자세로 도민의 열망과 뜻을 받들겠습니다.

학생들이 바른 품성을 지닐 수 있도록 키우고 알찬 실력을 지닐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부적응 학생이나 위기의 학생을 보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학교의 르네상스를 이루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어촌학교의 교육환경을 바꾸고 우수한 선생님도 모시겠습니다. 공교육을 강화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도 줄이겠습니다. 끝으로 맑고 깨끗한 교육계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 : 전북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도민들의 요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는 개혁을 위한 진통과 같은 것으로, 저를 믿고 조금만 지켜봐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북교육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앞으로 도민들의 기대는 채워나가고, 우려는 씻어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경쟁과 불신, 불통이 아닌 협력과 상호 신뢰, 의사소통이 학교현장에 자리 잡도록 저에게 부여된 교육감의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겠습니다.

장만채 전라남도교육감 : 그동안 우리 교육과 관련하여 제기되어 온 문제는 주로 교직사회의 경직성, 학교문화의 폐쇄성,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 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통과 협력'을 기치로 하여 창의성과 개방성, 그리고 신뢰회복을 추구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간의 인사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 주민 추천 교육장 공모제를 5개 지역교육청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혁신학교를 만들기 위해 공약사업인 '무지개 학교'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 제정, 친환경 무상급식을 포함한 무상 의무교육 실현 등도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이영우 경상북도교육감 : 교육감선거가 주민 직선으로 치러졌는데,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교육감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거가 마무리되고 다시 생각하니 주민 직선이 국민 모두가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느껴집니다. 명실상부한 교육자치의 시작이라는 뜻에서 이번 교육감선거가 주는 의미는 대단히 큽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요, 그 사람을 키우는 것은 교육입니다. 특히 우리 경북은 예로부터 학문을 숭상하고 인재를 길러온 교육의 본고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수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 또한 선생님, 학부모님 그리고 도민 여러분과 함께 명품 경북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올바른 인성 함양, 학력 향상, 사교육비 부담 경감, 안전한 학교, 잘 가르치는 교직원 우대, 최상의 교육복지 실현 등을 통해 학생에게는 희망을, 학부모에게는 만족을, 교직원에게는 보람을, 도민에게는 감동을 주는 경북교육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도민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명품 경북교육 실현을 위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영진 경상남도교육감 : 13대 도교육감을 지내고 2년 6개월 만에 다시 교육감에 당선되어 도교육청으로 돌아왔습니다. 으뜸 경남교육을 만들어 가겠다고 도민들과 약속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각기 자기능력과 소질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 자기 분야에서 모두가 1등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인재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경남교육은 존경과 신뢰, 능력과 봉사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도약해 나갈 것입니다. 경남의 최우선 과제인 학력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학생들의 교육복지정책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한 재단 설립, 교육기회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교육자산 형성 프로그램 도입을 시행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공동체와의 소통을 통해 희망을 여는 미래교육, 경쟁력 있는 으뜸경남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성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 책임감이 막중함을 느낍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있는 힘을 다해 잘해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번의 선택을 해준 도민들의 기대가 얼마나 큰 지 잘 알기에 제주교육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전국 최고의 학력향상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고 소외계층, 농어촌, 어려운 사람들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교육복지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제주교육계의 모든 종사자가 낮은 자세와 따뜻한 마음으로 무한책임과 무한친절을 베푸는 생활로 청렴도를 높여 우리 교육청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당선자) : 주민직선제로 시행된 지방교육자치 원년 선거에서 교육감으로 당선시켜 주신 광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주시민의 정의로운 선택과 판단으로 최초 민선 교육감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교육민주화와 참교육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한결같이 노력해 왔던 점을 광주시민들이 높이 평가해 주시고, 광주교육을 책임지고 이끌어 보라는 막중한 숙제를 주신 듯합니다. 그러하기에 무한한 자긍심과 함께 책임감이 엄습해 오는 요즘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주시민들은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이 '특권교육', '경쟁교육' 이라는 판단 하에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고 목소리 높여 이야기합니다. 즉, 교육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위한 보편적 정책이 녹아있어야 한다는 당부의 목소리도 전해져 옵니다.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면서도 잘못된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애정 어린 충고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 및 무상교육, 광주형 혁신학교 추진, 교육비리 척결 등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공약들을 반드시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질문, 둘 —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과 그에 따른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이에 대한 제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곽노현 :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이면 당연히 누려야 하는 학생들의 권리이며 아이들이 받아야 했던 낙인감을 없애기 위한 기본적 복지의 문제입니다. 학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해서 교육계만의 문제가 아니며, 응당 시민이 함께 해야 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을 분담하여 실현해야 하는 공동의 과제입니다.

그간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시 · 도의 의견차이가 많았으나, 이제는 모든 교육감들이 뜻을 함께 하고 있으며, 지난 8월 11일에 있었던 전국시 · 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국가차원의 무상급식 실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 교육청, 구청, 시민단체로 구성된 무상급식 거버넌스를 통해 무상급식의 실효성

을 확보하고, 내년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중학교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임혜경 : 학교급식은 학생의 영양과 건강을 관리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법적 요건이 미비하여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급식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의 학생이 많이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무상급식을 부산교육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교육청의 가용재원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절감 등을 통해 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무상급식 실현이 부산의 교육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부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 확대의 수단이 됨을 강조하여 부산시와 기초자치단체의 공감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무상급식은 2011년부터 초등학교 1-3학년과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농어촌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겠으며, 2012년부터는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고, 중 · 고등학교는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을 15%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부산시와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교육행정협의회 등을 적극 활용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4(교육청) : 3(부산시) : 3(기초자치단체) 형태로 부담하는 방법 등 다각도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 할 것입니다.

「헌법」제31조 제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급식은 학생의 영양과 건강을 관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필요가 있지만,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인 자세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므로 무상급식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 또는 의무화를 위한 학교급식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동기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 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학생 등 교육수요자뿐만 아니라 나아가 대구시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대구교육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해야 할 사업이 너무나 많기에, 무상급식에 있어 전면시행은 힘들다고 보며 취임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체 학생수의 11.2% 수준인 무상급식 지원 비율을 2012년까지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저소득층 자녀와 농산어촌지역 학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여 전체 학생수의 22% 수준으로 확대하고, 2013년에 30%, 2014년에 40%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당초 구상과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점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확보로 대구시와 원칙적으로는 합의가 된 상태이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있어 진정 필요한 것은 당장의 무상급식보다는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 방과후 학습 등, 교육적인 부분에서 제공할 수 있는 부분에 더 치중할 생각이며, 이에 대해 시민들의 많은 이해가 요구됩니다.

나근형 : 현행 학교급식법에는 저소득층 자녀, 도서 · 벽지 학교 학생들에게 급식비 일부 및 전부를 지원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으나, 일부 학생에 대한 선별적 급식비

지원이 노출되어 아이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됩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무상급식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정이 문제인데 교육청, 시청(도청), 시 · 군 · 구청이 분담해도 그것은 국민 부담이므로 학교급식법에 '의무교육 대상자에는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초 · 중학교 무상급식을 법제화하여 정부가 무상급식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신호 :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몇 차례 밝혔듯이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추진하기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선거공약에서 전면 무상급식이 아닌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급식지원의 점진적 확대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2010년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율은 전체 학생 수 대비 13.8%인 33,172명에게 130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법정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확대해 임기 내 20% 범위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가나 지자체의 획기적 지원책이 선행되어야 해결될 사안으로 보며, 다행히 이번 선거에서 자치단체장들이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 공약을 내세운 분이 많기 때문에 지자체장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급식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복만 : 의무교육기관에서 소요되는 일체의 교육경비는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의존수입이 70% 이상인 열악한 교육재정의 형편으로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무상급식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으나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며 예산의 효율적 사용 측면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무상급식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지자체의 지원과 협조를 통해 단계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자녀, 농산어촌학교부터 실시하면서 점진적으로 예산과 대상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김상곤 : 현재 무상급식은 농어촌 전체 초등학교와 9월부터 도시지역 5~6학년에게 실시하고, 2012년에는 초등학교 전체를, 2014년에는 초 · 중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내 모든 초 · 중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면 1년에 6,600억 원이 필요합니다. 올해 시작한 초 · 중학교 저소득층 차상위 130% 자녀까지 지원하는 데 1,200억 정도 들었으므로 전체를 대상으로 하려면 5,400억 원 가량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어촌지역 초등학교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도시지역 초 · 중학교는 자치단체와 대응지원 형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내부적으로 협의단계인데, 수원, 안산, 화성은 이미 확대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보편적 무상급식을 전국적으로 의제화한 당사자로서 더 큰 책임의식을 갖고 단체장들과 긴밀히 협의해 차별 없는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병희 : 현선거 당시 강원도교육감 후보 전원이 '친환경 무상급식' 에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누가 교육감에 당선되었어도 시행을 할 정책이었습니다. 무상급식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는 시각보다, 학생

들의 건강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책임진다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는 급식의 문제만이 아니라 2세들에 대한 사회의 책임과 보호의 의무를 일깨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산은 도교육청 50%, 강원도 25%, 시 · 군 지자체 25% 부담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조만간 6-7개 시 · 군 지자체와 협약을 맺을 예정이며, 나머지 시 · 군 지자체와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11년 유치원(공립)과 초등학교, 2012년 중학교, 2013년 고등학교까지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내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바로 실시하겠다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계획을 앞당긴 지자체에도 50%를 지원할 것입니다.

이기용 : 저는 13 · 14대 충북교육감으로 재임하면서 무상급식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꾸준히 확대 · 추진해왔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는 의무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질 높은 친환경 무상급식은 교육의 공공성과 복지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도민과 교육가족에게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2005년부터 급식비지원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국가에서 지원할 근거는 없으나, 앞으로 관계법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칭펀드방식으로 무상급식을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성 : 무상급식은 학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굶는 학생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모두가 바라는 바입니다. 충남은 무상급식에 있어서 타 시 · 도보다 가장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는 읍 지역까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확대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의무교육 대상인 모든 초 · 중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고등학생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사회적 배려대상자,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지자체와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새로 당선된 도지사도 무상급식을 약속한 만큼 대화와 소통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도의원들과도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김승환 : 무상급식은 권리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식과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무상' 급식이라는 용어는 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학생이 가지고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 제31조 제1항)와 의무교육 무상화(헌법 제31조 제3항)에 비추어 보면 학생들에 대한 급식은 학생이 국가권력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각도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무상' 급식이라는 용어보다는 '의무' 급식이라는 용어가 적절합니다.

현재 무상급식은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50 : 50으로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무상급식의 실현은 교육감의 정책적 의지만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 전북지역에서는 2011년에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현하는 데는 현재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문제는 중 · 고등학교인데, 저는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예산은 당장 2011년부터 부담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만채 : 학교 무상급식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첫째, 헌법에서 규정한 것처럼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무상급식은 복지차원을 넘어 그 자체가 곧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무상급식을 포함하여 초 · 중학교 완전 무상교육 실현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2013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1단계로 우선 읍지역 이하의 학교에 실시하고, 제2단계는 고교와 도시지역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3단계로 2013년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코자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재정은 우선 확보해 나가겠지만, 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산 지원, 조례 제 · 개정 등의 제도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영우 : 무상급식은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임기 동안 전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교생 100명 이하의 소규모 초등학교 및 특수교육대상자, 그리고 저소득층 초 · 중 · 고교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하고 있으며, 경북 군위군과 울진군에서는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교육재정을 감안할 때 재원충당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내년부터 소요예산의 50%를 부담하는 시 · 군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현재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개 내외의 시 · 군이 동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상급식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관련 법률의 개정 및 예산 지원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고영진 : 무상급식을 의무교육 실현의 한 방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지사와 18개 시,군 단체장들이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사용되는 예산이, 무상급식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한 급식센터 건립 등으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해 농촌경제도 살리고 무상급식도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8월초 도지사와 무상급식 예산확보에 대한 협의를 거쳤으며 향후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양성언 : 우리 도내 전체 학생의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400억 여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저소득층 학생들 만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생활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지역 병설 유 · 초 · 중학교 전 학생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해 전체 학생 대비 27.5%인 26,300여명의 학생에게 150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은 교육청 예산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에서의 예산지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무상급식 확대 시행에 있어 저소득층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생활환경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학교 전 학생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등 소득수준 및 생활환경을 고려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장휘국 :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무상교육 실현과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저소득층만의 선별 급식이 아닌 전면 무상급식을 반드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고등학교는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현재 10%에서 30%까지 무상급식 비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2010년도는 초등학교, 2011년도는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 · 실시하겠으며, 필요한 재원은 광주광역시와 무상급식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응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광주지역 5개구의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각 해당 지역별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함으로써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청과 지자체는 각각 무상급식 실현과(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라는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기에 매우 긍정적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지원 미비로 매년 방학중에 발생하는 결식학생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마련도 적극 나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질문, 셋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입장, 계획,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곽노현 : 학업성취도 평가와 진단평가 등의 일제고사에 대한 취지는 공감합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가려내 원인을 진단하고, 처방을 제시하는 것은 공교육의 기본책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교현장에서는 경쟁이 과열되어 학생과 교사가 모두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개선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행법 상 학업성취도 평가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권한사항이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감과 학교가 거부할 수는 없지만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이러한 평가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선별함에 있어서 부진학생 판별 프로그램 개발 등 일제고사가 아닌 다른 효율적이고 교육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 니다.

임혜경 : 학습결과는 평가되어야 하며, 학업성취도 평가는 초 · 중등교육법에 따라 시 · 도교육청이 실시 의무를 갖는 국가위임사항입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물론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IEA)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업성취도 평가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평가 자체가 지닌 문제점이라기보다는 평가결과 활용과 관련한 시도교육청 간, 학교 간 과도한 경쟁으로 학교 교육과정의 파행 운영 등의 문제점 때문일 것입니다.

학업성취는 진로지도나 취업선택과 곧바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한 각 지역의 정확한 학력수준을 파악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교육정책을 개발 · 수립하는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특히 국가차원에서 결과를 분석해 제공해 주는 국가의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해 단위학교에서 학습부진학생의 파악을 통한 학력책임지도 등 학력신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따라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인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필요합니다.

앞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미래교육의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학업성취도 평가를 비롯한 주요 교육정책들을 새롭게 재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동기 :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 개개인의 학업성취 수준을 확인하고 분석하여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학력수준을 높이기 위한 평가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에 효율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고 따라서 전수평가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평가 거부 학생에 대한 출석 인정이나, 그들을 위한 대체 프로그램 운영은 학부모나 학생에게 오히려 혼선만 더 키우고, 성취도 평가의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교과부의 방침을 존중할 것입니다.

나근형 :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얻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교별 실시보다는 전문 평가기관에서 제작한 신뢰도 높은 평가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평가결과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학습결손을 보충해 주고 교육과정 개선 및 행 · 재정적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학력우수자와 지역별 우수 집단의 서열 발표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김신호 :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의 목적은 학생 개개인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학습결손을 보충하는데 있습니다. 또 교육과정 개선 및 행 · 재정적인 지원의 기초자료로도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교육청은 공교육을 받는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평가 시행을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결과 처리에 있어서 지나치게 경쟁을 유도한다거나 학교 간, 교육청 간, 지역 간의 차이를 서열화하여 평가 본연의 목적을 상실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 본연의 목적을 살릴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 우리 교육에서 더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김복만 :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하여 지원이 필요한 지역과 학교를 선정해 교육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초 · 중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고, 개인적으로는 적정한 학업수준을 갖추게 하며, 학교와 학생에게 기초적인 교육정보 및 자료제공을 해주고자 함입니다. 그러나 결과처리에 있어서 학교정보 공시, 지상공개 등에 있어 전국

및 지역별 서열화 등 민감한 부분들을 제외시켜 언론의 집중된 조명과 관심을 없애고 안정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상곤 : 원론적인 차원에서 평가는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개별적 특성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학생과 학교,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일제고사 형태의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방식은 학생의 학습부담과 교육과정의 파행 운영은 물론, 학교별 서열화를 조장할 것입니다. 따라서 표집방식으로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 사업을 축소해 중학교 3학년의 희망하는 학교와 학생을 대상으로 고입모의평가 형태의 시험만 치르고 있습니다. 또 교과학습진단평가도 학교별 선택권을 존중해 희망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해 교수 · 학습 지도 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정부차원에서 공교육의 건강한 역할을 강화하고, 교육사회 내부의 무한경쟁과 구조적 양극화를 넘어서는 방향으로 바람직한 평가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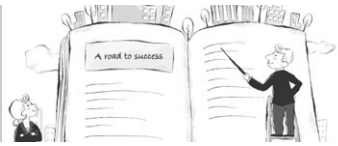
민병희 :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교현장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파행을 불러일으키는, 부작용이 매우 심한 제도입니다. 일례로 작년에 일부 초등학교에선 4,5,6학년들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비해 야간자율학습이나 0교시 수업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전국의 학교를 획일적인 도구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학교와 지역 경쟁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시행하는 것은 교육적인 파행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초등학생부터 자율학습과 문제풀이식 수업을 하는 것은 제대로 된 경쟁력 확보도, 교육도 모두 포기하는 일입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이미 도 단위 일제고사는 폐지했습니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 학업성취도 평가는 유지하되 이로 인한 파행적인 운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에게 배운 것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도 문제풀이 방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일제고사 형태 대신 학업성취도를 다양하게 평가할 수 있는 자체 평가도구 개발을 적극 장려할 것입니다.

이기용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하는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의 본질과 목적에 맞게 실시하여 학습부진 학생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교육현장에서 나타나는 부분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방안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성적 공개를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을 줄인 우수 학교만 공개하고, 학교별 성적은 공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교사의 업무경감을 위해 서답형 채점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온라인으로 채점하거나 전체 문항을 객관식으로 출제해야 합니다.

김종성 : 학업성취도 평가는 세계적으로, 그리고 교육학적으로 인정된 교육과정의 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평가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전수평가로 실시함



이 바람직합니다. 일부만을 뽑아서 평가하는 것은 전체적은 큰 맥락은 파악할 수 있어도 개별학생에 대한 수준 파악은 어렵습니다.

앞으로 교육의 방향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을 더욱 존중하고 개인에 대한 맞춤교육이 필요합니다. 다만 개선해야 될 점은 있습니다. 줄세우기식 공개는 금지해야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 지도교사만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승환 : 초중등교육법 제9조가 규정하고 있는 전국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전국의 초6, 중3, 고2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소위 일제고사)은 아닙니다. 법 제9조 제1항에 담겨 있는 입법자의 의사는 '전수평가'가 아니라 '표집평가'라는 것입니다. 입법자의 의사를 곡해하면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갖가지 부작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번 일제고사를 통해 우리가 익히 경험하였습니다.

입법자가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얻고자 하는 입법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표집평가를 통해 나타나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의 분포와 원인을 분석한 후, 그러한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또는 학교)을 지원하는 대책을 세워 모든 학생들이 최소한 기초학력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는 일제고사를 통해 학교 간 과도한 경쟁을 부추겼고, 그것은 학생들의 건강권 침해, 교과과정의 정상적 운영 방해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였습니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학생을 직접 가르치고 있는 교사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들의 평가에까지 직접적으로 나서겠다는 발상 자체가 교육의 본질이나 지방교육자치의 정신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9월 치러지는 중학생 대상 도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내년부터는 '기초학력 및 적성진단 프로그램'을 실시해 학력 상향평준화를 실현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장만채 : 학업성취도 평가 역시 교육의 과정입니다. 특히, 기초학력 부진 학생과 학교, 교육 소외지역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제도입니다.

다만, 부작용 최소화 방안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부작용은 대부분 평가결과의 활용 및 공개 범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를 교과부, 타 시도교육청과 적극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교육과정 파행 운영, 평가 대비 수업 등을 예방하는 데 전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하여 학생 결석처리 방식, 교사 징계양형 등의 교과부 지침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사안은 교육청이나 학교 자체적으로 판단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영우 : 학생 개개인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학습결손을 보충하며, 교수 · 학습의 강화로 학력을 신장하여 교육과정 개선 및 행 · 재정적인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공하는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의 시도별, 지역별, 학교별 공개에 따른 과열경쟁으로 창의 · 인성교육의 위축, 교육과정 파행 운영 등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이의 해결을 위해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로 실시하되 결과의 공개는 신중히 하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은 학교와 지역을 파악해 이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평가결과에 따라 학력향상중점학교의 시도교육청별 지원총액을 결정하고, 도교육청은 지역특성과 학력실태를 고려해 행 ·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영진 :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초 · 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법정국가시험입니다. 따라서 그 시행 및 평가 거부에 대한 처리방침 또한 시행권자인 교과부장관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의 근본취지(기초학력 미달 학생 책임지도 자료, 교육과정이나 행정지원의 자료로 활용)에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평가 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교육청 서열 위주의 발표보다는, 학력향상도 위주의 발표로 학력증진 환류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합니다.

양성언 :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의 교과별 4단계 학업성취수준(우수, 보통,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을 정확히 진단, 분석해 학생에게는 스스로 자기주도학습 방향을 제시해 주고, 교사에게는 학생 개인에게 맞는 수업지도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며, 교육청은 이런 자료를 토대로 장학지도 계획과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라 교과별로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하고 보정교육은 방과후학교 운영 등을 통해 해소하겠습니다. 특히,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해서는 책임지도체제를 구축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최소화 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장휘국 : 현재와 같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날짜와 시간, 장소, 평가 문항 등으로 실시되는 일제고사식 학업성취도평가는 반대의 입장입니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 일제고사로 인하여 창의성 교육이 아닌 평가 대비 암기식 교육이 성행하고, 교과 위주의 보충수업 형태의 방과후 교육이 확대되는 등 교육과정이 파행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부터 정보공시를 통하여 학업성취도평가 결과가 공개되면 학교간, 지역간 교육격차가 드러나면서 학교 서열화 현상이 나타나고 교육격차는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업성취도평가가 표집평가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앞으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하여 학업성취도평가가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 질문, 넷 교원능력평가제에 대한 입장, 계획, 제언을 말씀해 주십시오.

곽노현 : 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법률적 근거 하에 엄격하게 시행되어야 하나 아직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이고,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교사의 수업을 제대로 관찰할 기회조차 없는 학부모들을 무리하게 만족도조사에 참가시킨다든지, 인기영합식의 학생 만족도조사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곤란합니다. 교사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건의사항을 서술식으로 적도록 하는 방식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에게 자기성찰과 자신의 부족함을 보충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청은 이에 대해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현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법적 근거 마련과 평가방법에 대한 각계의 의견수렴 및 시도 자율성 부여 등에 대한 안건을 교과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임혜경 :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자기개발과 전문성 신장, 수업력 제고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10여년의 논의와 5년에 걸친 시범 선도학교 운영, 그리고 3년 전부터 입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제도로 국민의 86.4%가 찬성하고 있는, 국민적 지지도가 높은 교육정책입니다.

교원은 공무를 담당하는 공복입니다. 따라서 국민을 위한 교육서비스 결과에 대한 평가를 받아 공무담당능력을 배양하고 부족한 점은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평가방법 등 시행 상의 문제점이 있으면 이를 보완해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 연내 입법화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교육청은 현재 학생만족도조사와 관리자에 대한 동료교원평가를 실시하였으며, 9-10월에는 학부모만족도조사와 동료교원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생지도 중심의 평가" 즉, 교사의 학생지도력 향상 및 학생과의 소통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교사 스스로가 수업능력과 학생지도능력에 대하여 수시로 평가할 수 있는 자기진단 평가문항의 개발과 학생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서술형 평가문항을 평가요소별로 개발, 적용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우동기 : 평가에 대해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원평가는 교권침해와 다른 차원의 문제로 학교는 교사만의 전유물이 아님을 인식하고 자연스럽게 평가를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교원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질 향상 및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시행을 앞두고 학교부담이 커지는 것은 이해하나, 올해 처음으로 전면시행이 되는 만큼 부족한 부분은 향후 의견개진을 통해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일선 학교현장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근형 : 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교원의 전문성을 진단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원전문성을 신장시켜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교원능력개발평가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우리 인천은 관내 국 · 공 · 사립 전 학교에서 동료평가, 학생 만족도조사, 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 시행하다보니 방법 및 절차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학생 및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신호 : 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교원의 전문성을 높여 학교교육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고 교육에 대한 학교와 교사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봅니다. 누구나 평가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이든 우리는 평가를 받고 또 평가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이 교육수요자로부터 평가를 받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본 제도는 이제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그동안 시범운영과정을 거쳤다고는 하지만 이 제도가 교직사회에 완벽하게 연착륙하기까지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원들을 지나치게 서열화하거나 가르치는 일보다는 이에 대한 과중한 잡무가 발생하게 되어 본래의 취지가 변질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급하게 진행하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본래 취지에 맞도록 의견을 모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김복만 : 교원평가는 수업의 질 개선과 생활지도능력 신장, 학교경영관리 등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운영상 문제가 되는 것은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평가결과를 인사나 보수와 연계하지 않고 맞춤형연수 자료로만 활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평가에 대한 국가정책 추진 및 책무성 부여를 위한 법률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며, 전국적인 부분은 공통기준을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해야 할 부분은 시도의 자율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부모 만족도조사는 개별교사 평가보다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만족도조사 방식 등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김상곤 : 기본적으로 교원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존 지표 외에 수요자 중심의 지표를 자체 개발했으며, 전국 최초로 교육전문직 평가를 포함했습니다. 아울러 교원, 학생, 학부모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연구할 계획입니다.

교직사회를 움직이는 힘은 교직사회 내부의 자기성찰과 발전을 위한 자발적인 상호작용에서 우러납니다. 그

러므로 통제적인 방식이나 교원 간의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객관성 확보를 구실로 내실보다는 실적 위주의 전시적 행태를 유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기존의 근무성적 평정이나 성과급 등을 포함하여, 교육주체가 함께 동의하는 합리적이고 통합적인 제도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교육자치의 특성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평가의 방식이나 적용에 있어서도 시 · 도교육청의 자율성을 충분히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민병희 : 교원능력은 당연히 개발해야 합니다. 작년에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일반인과 교사 모두 찬성비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이 정책을 시행하는 목적은 교원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공교육의 신뢰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현실은 이같은 정책이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실행될 때가 많습니다. 학업성취도 평가도 시행의 목적이 초등학생들에게 야간자율학습을 시키는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파행적인 교육과정을 불렀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도구의 개발과정에 현장에서 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교육 구성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선생님들의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고, 전문성을 신장시키기는 도구로만 활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기용 : 교원평가는 교원의 기본 자질을 포함한 교육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른 능력개발을 지원하여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충북 학부모 및 교원의 설문조사 결과 일반 학부모 90%, 교원 67%가 교원평가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도민들이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5년 3개교로 시작하여 2009년에 189개교, 올해부터는 도내 모든 학교에서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가 후 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맞춤형 연수 등의 자료로 활용하며, 우수교원에 대한 우대방안으로 학습연구년제를 운영하며, 미흡 교원에 대한 단계별 연수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시행결과를 토대로 모형개선 등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 교원평가는 학부모의 지지와 세계적인 추세 속에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교원평가가 교사들을 줄세우기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사들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데에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교원평가제의 근본취지는 유지하되 실행방법은 개선할 여지가 있습니다. 학부모 등 평가자들이 아직 평가방법에 익숙지 않고 평가를 할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며, 맞벌이 등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김승환 : 교육영역에서 평가는 필요한 것이고, 어느 누구도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특히 교사의

수업에 대한 평가는 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학생들의 수업만족도를 높이며,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도를 높이는 기능을 합니다. 평가결과를 교사들의 급여나 인사에 연계시키면 교사들 사이에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게 되고, 평가제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평가모델입니다. 그 동안 교과부는 단 하나의 평가모델을 상정한 후, 그것을 전국의 모든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더욱 문제였던 것은 국회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들을 압박해 시도교육감이 발령하는 규칙으로 교원평가를 밀어붙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과부의 의사, 시도교육감의 규칙이 국회의 입법권을 훼손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법치국가의 기반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사태입니다.

이 때문에 저는 '자율적인' 방식의 수업평가를 주장해 온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평가는 법 이론상 교육규칙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가는 단 하나의 모델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시 · 군 교육청별로 또는 각 급 학교별로 다양한 모델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전북의 현실에 맞는 수업평가 모델을 올해 안에 만들어낼 생각입니다.

장만채 : 교원의 전문성과 학교의 책무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 시행에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처음 전면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비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체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치밀하게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학생과 학부모 대상의 만족도조사가 보다 타당성을 갖도록 하고, 익명성 보장과 참여율 제고 등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법률적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차세대 NEIS에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교과부의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특히 그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대응처방으로 보완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시간과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침으로써 안정적 정착을 도모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우 : 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이므로 존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전면시행되어 7월말까지 이미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조사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시행과정상에 다소 개선할 점이 있더라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업무추진 일정에 따라 10월 초에 동료교원 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작성, 이를 분석하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추진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현행 방법상에 제기되는 각종 문제는 교원, 학생, 학부모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과정을 통해 매뉴얼 마련 및 세부적인 시행방법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부모의 만족도조사에서 참여비율을 50% 이상으로 하는 것은 농산어촌지역이 많은 본도의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30% 내외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영진 : 교원의 전문성 신장은 교육경쟁력 강화의 세계적, 시대적 흐름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그 결과를 인사와 연계하지 않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만 활용할 경우,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평가결과는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학교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 방안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교원평가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원들의 상시수업에 대한 평가제도 개선과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 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를 위한 '담임과의 학부모 시간 예약 상담제도' 실시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성언 :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3월부터 제주도내 모든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면시행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 우수 교원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함과 아울러, 미흡한 교원에게는 전문성 신장의 기회를 갖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교원능력개발평가가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휘국 :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근본 취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 법적 근거도 마련하지 않고, 학교 현장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반대합니다.

특히 우리 교육이 국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교육 실패의 책임을 교원에게 몰아가면서 교원능력개발평가만 이루어지면 교육이 달라질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학교 구성원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모두가 공감하고 동의하는 상황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추진해 나갈 것이며, 교원뿐만 아니라 교육정책을 입안 · 추진하는 교육전문직에 대해서도 평가를 실시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국회에서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추진을 위한 협의체가 정상 운영되어 법적 근거도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질문, 다섯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입장, 계획, 제언을 말씀해 주십시오.

곽노현 : 학교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살아 있는 체험장이어야 하며,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 교육입니다. 인권조례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필수적 가치들을 권리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현장에서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며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정신입니다.

제정 시기나 조례에 담길 내용에 대해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 내용은 자유, 안전, 평등, 복지, 참여 이 다섯 가지를 권리로 보장하는 것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누구나 반길 것들입니다.

하지만 주위에서 우려하는 것들에 대한 수위조절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충분한 기간을 두고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연구 및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협의하고 조율하는 등 치밀한 작업을 거쳐 가장 이상적인 조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혜경 : 학생의 개성은 인정되고, 인권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며, 또한 학생의 인권은 학생 스스로 찾아야 하는 동시에 교육공동체가 함께 지켜주어야 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가지며, 그 의무와 권리는 개별학교에서 학칙으로 규정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타 시 · 도에서 추진 중인 인권조례안은 체벌금지, 두발 복장 규제 금지 등 학생인권 관련 내용과 학생인권 진흥, 학생인권 침해 구제 관련 내용으로 되어 있는 바, 이러한 내용의 상당 부분들은 단위학교 교칙으로 각 학교 실정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어 별도의 학생인권조례안을 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체벌은 무엇이 진정 학생을 위하는 것인지 생각해야 하며, 학교에서 교사들이 지도하는 상황에 따라 교육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체벌을 금지하는 것은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해야 하는 교사의 교육권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체벌금지 및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공동체의 합의하에 구체적으로 각 학교의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학칙을 제정하여 운용해야 할 것이며, 학생들의 자율적인 교칙준수를 통해 인권, 자율, 책임의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단위학교 생활지도 책임능력 제고를 위한 연수 지원도 강화할 것입니다.

우동기 : 학생인권은 학교 공동체 구성원(학생 · 학부모 · 교직원)들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합의와 절차를 통해 교칙을 제 · 개정하여 침해를 막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실정에 따라 달리 적용할 문제로 조례 제정 문제보다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생생활지도 시 학생자치능력 향상 및 학생인권존중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나근형 : 학생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학생들은 아직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를 교육청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학교별로 학생생활지도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가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신호 : 학생인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보호받을 가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인권 존중을 실현하기 위해 조례라는 형식화된 절차가 필수요건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육계 일각에선 최근 학생지도 과정에

서 일어나는 학생과 학부모로부터의 폭력과 사이버테러 등을 당하는 교권침해 사례가 빈번이 발생하면서 교원보호에 대한 목소리도 높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결국은 학생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바르게 성장시키겠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학생을 위하고 올바르게 교육시키는 것인지 함께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면 교원 보호에 대한 조례도 함께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사의 교권확립과 학생의 인권보호에 있어서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형태가 되어야 또 다른 갈등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관련 문제는 법보다는 교육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복만 :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해 조사(한국교총)한 바에 의하면 교원의 80% 이상이 반대하는 입장이며, 우리 교육청은 현재로선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은 조례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보호가 최대한 존중받을 수 있는 학교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김상곤 : 학생인권조례의 근본정신은 학생을 그 자체로 인격을 가진 배움의 주체로 보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동안 학생을 바라보는 전통적 관점이 이른바 학생다움의 논리를 앞세워 기성세대의 눈높이에 그저 순응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되어 온 것은 요즘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학생들이 마음으로 따를 수 없는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가 학생들을 학교와 공부로부터 멀어지게 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마련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8월까지 '찾아가는 홍보' 에 주력하고, 9월에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를 거쳐 새로 개원한 의회에 최종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새로운 학교문화 속에서 학생과 교사 간에, 또는 기성세대 간에 활기차고 풍부한 상호작용을 통한 전인적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 인권과 교권을 보장하는 학교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병희 : 학생인권조례의 기반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입니다. 성숙한 사회는 나이나 성별, 인종에 관계없이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입니다. 유독 학생들만 예외일 수 없습니다. 학생들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는, 인권을 지닌 소중한 인간이라는 철학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학생인권조례에서 가장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체벌과 표현의 자유입니다. 체벌은 전통적으로 어른이 아이를 지도하는 방식이라는 생각으로 그동안 용인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아무리 효과가 있다고 해도 법이 금하고 있는 행위를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실행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과 달리 이제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체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가 높아지고, 오히려 교사의 위험부담이 매우 큽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자는 게 학생이 교권을 침해하거나 교칙을 위반해도 그대로 두자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학생의 인권만큼이나 교사의 교권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체벌을 대

신할 학생지도 대책을 동시에 마련하고, 교권도 더욱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기용 :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76.4%의 교원이 학생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다며 반대하고, 93.4%가 학교질서와 학교기강이 무너졌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다양성 존중과 학교운영 개선은 '학교규칙' 을 통해 교육구성원들의 자유로운 협의로 제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북에서는 학생들에게 학교 내의 각종 규정 준수 생활화와 비인권적 '학교규칙' 내용을 수정 ·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 인간의 존엄성은 천부적인 것으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모든 사람의 인권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인권존중과 체벌금지를 조례로 제정하여 법제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체벌은 학생과 교사가 함께 공감하고 최소화해야 합니다.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이 함께 존중되어야 합니다. 학생의 인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교육의 본질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항상 교육의 출발점은 미래인재인 학생들에게 무엇이 도움이 되겠는가라는 근본물음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김승환 : 학생도 인권의 주체입니다. 학생은 인권의 주체로서 인간존엄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자기결정권,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인격의 미완성자' 라는 라벨은 학생인격에 대한 모독입니다.

학생시절 인권인식을 높이는 교육을 받고, 인권생활을 잘 거친 학생들일수록 타인의 인권도 존중할 줄 아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생인권은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의 형식으로만 보장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도교육청의 조례로도 보장될 수 있습니다. 만약 국회가 법률로 학생인권을 규정한다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선언적인 성격을 갖는 데 그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으로 저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TF팀을 구성할 계획이며,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장만채 :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은 학생들에게 '인권의 감수성' 을 길러주고,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일입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그러한 차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금년 안에 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문위원회도 구성하고, 공청회도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교권신장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조례제정 과정에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 조례는 일본에서도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하였고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선진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지름길이며, 학생들이 자율과 책임을 동시에 배우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의 권위주의 문화를 변모

시키는 계기가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영우 :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필요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학생인권 조례 제정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원, 학부모, 학교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교육적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와 교육공동체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학생을 지도함에 있어서 인권과 자율은 최대한 보호하고 · 존중하되, 자신의 언행에 대한 책임도 철저하게 요구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단위학교에서 구성원들의 민주적인 합의과정을 통해 학칙 및 규정을 제정하고, 제정된 학칙이나 규정을 엄정하게 준수하고 적용하도록 지도할 것입니다.

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체벌금지, 두발 · 복장의 자유, 야간학습 · 보충수업 선택권, 휴대폰 소지 등은 단위학교의 학생 · 교사 · 학부모 등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정한 학칙 등에 반영하여 해결할 것이며, 집회의 자유는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오히려 오해와 혼동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논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것입니다.

학교와 지역의 특성을 무시한 교육청 차원의 획일적인 조례제정으로 학생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교사의 교육권 또한 보호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교 공동체에서 학생인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조화롭게 존중되고 보호되는 교육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영진 : 우리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는 긍정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지역 시민단체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안)을 교육위원회에 청원한 상태이며, 이는 학생인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증가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학생인권과 교권 간의 상호 충돌로 교단 갈등과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다음 조건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첫째 인권교육 관련 상위 법령이 우선적으로 제정되어야 하고, 둘째, 시민사회와 교육공동체 구성원 간의 토론회, 공청회, 여론조사를 통한 숙고와 합의과정을 거쳐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여론과 성숙된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셋째, 단위학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학계와 전문가집단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도교육청은 학교현장에서 학생과 교원이 공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학생인권의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장기적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접근할 것입니다.

양성언 : 초 · 중등교육법 제8조에 학생의 자치활동 및 학교의 규칙을 제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학교의 자율적 권한으로 얼마든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규정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학생인권 조례를 별도로 제정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제시한 학교생활 규정 속에 학생의 특성에 따른 권리보장 등의 내용을 학교 자율적으로 보다 민주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휘국 : 급격하게 변화하는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 학교와 교실은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상생과 배려의 공간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정규교육과정을 경험하는 학생들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으로 성장하여 사회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일선 학교 현장은 교복 및 두발 단속, 체벌 등으로 교사와 학생간의 마찰과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학생과 학생간의 학교폭력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광주학생인권조례를 제정, 교사와 학생이 인권을 지닌 하나의 인격체로 인식하고 존중하는 자세와 태도 등을 확립시켜 나갈 것입니다. 특히 이 조례에는 교사의 가르칠 수 있는 교권도 보장함으로써 학생의 인권과 상호 조화를 이루어 나갈 계획입니다.

▶ 질문, 여섯 학교다양화에 대한 입장, 계획, 제언을 말씀해 주십시오.

곽노현 : 학생들의 다양성에 기초한 미래사회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학교 다양화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본래의 취지가 실종된 채, 특목고나 자사고 진학이 대학진학을 위한 준비단계로 이용되는 성격이 강하고 과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비를 유발하며 교육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설립취지에 맞게 학생을 선발하고 적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철저하고 종합적인 관리를 통해 존속, 전환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 과정에서 학부모와 학생이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임혜경 : 고교다양화 정책은 학교운영의 자율권 확대와 수월성 교육을 통해 공교육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수월성교육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교과별 특성화, 집중이수제 등 특색 있는 교육이 가능하며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확대되고 경쟁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외고의 경우, 우리 교육청에는 현재 국제고 1개교, 외고 3개교가 있지만 공급과잉의 우려 있기 때문에 국가정책의 변화가 없는 한 학생 수 감소 추세 등을 반영하여 추가설립 추진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향후 학급당 학생수는 35~40명(2010) → 34명(2011) → 30명(2012~2014) → 25명(2015)으로 감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외고의 설립목적에 부합되게 운영할 것이며, 2011학년도 외국어고 신입생 선발부터는 중학교 영어 내신성적과 출결만으로 1단계 선발 후 학생이 제출하는 학습계획서를 중심으로 입학사정관이 학생을 선발하는 '자기주도 학습전형' 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에 참여할 입학사정관 56명에 대한 특별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관리자 · 교사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교육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어고 입시전형이 끝나는 대로 '사교육 영향평가' 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후년도 입시개선에 반영

하는 등 외국어고 입시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향후 5년 단위 평가 및 학교운영 성과 등을 엄정하게 검토하여 특목고 지정기간 연장(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그 외에도 본래 취지에 벗어나지 않고 목적에 맞게 교육과정을 편성 · 운영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입시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수업이 파행 운영되지 않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강화할 것입니다.

우동기 : 다양화 되어가는 사회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선 학교 역시 그러한 흐름에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교육이 직면한 위기 역시 그 흐름에 따라 가지 못했기에 학교의 다양화 정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외고, 과학고 등의 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대구교육의 위기를 가지고 온 지역 인재유출, 제2의 강남이라 불리는 대구 수성구 학군의 쏠림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외고와 자사고는 학생에게는 학교선택권이 확대되고,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운영 등에 있어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자율적인 학교경영을 가능케 합니다. 따라서 지역의 인재육성과 지역교육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대구교육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사업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근형 : 학생들이 다양하므로 학교도 다양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고가 당초 설립취지에 맞지 않게 명문대 입시를 위해 우수학생들이 들어가는 준비학교가 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본래 설립목적에 적합한 교육이 되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고교다양화가 사교육을 부채질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김신호 : 교육은 이제 공급자의 입장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교육과정 및 교육환경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형태의 학교인 일반고, 특목고, 자율형 학교, 전문계고, 마이스터고 등이 본래 설립취지와 교육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과정 · 학사운영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학교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개성 있는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글로벌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육성 및 학생 ·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수요 충족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름만 다양한 학교 형태를 유지하고 설립목적과는 다른 입시학원으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각 학교별 제도의 도입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과 지도감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김복만 : 지금까지 고교평준화의 틀을 유지해온 것은 교육평등의 실현을 위한 것이었으나 지식정보사회의 도래, 사회의 다양화, 개성과 자율을 중시하는 사회풍토 등으로 교육수요자의 욕구가 증대되고 학교다양화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현실은 우수한 사람과 뒤처진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정책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따라서 외고, 과학고, 특목고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귀족학교의 부활이라는 일부 시각도 있지만 다방면에서 유능하고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시스템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상곤 : 고교다양화 정책에 의거 추진되는 특목고는 공정하지 못한 경쟁과 줄 세우기 교육을 조장하는 것으로, 공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보편성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또 초·중등교육 전체를 과도한 입시경쟁교육에 예속시킬 뿐만 아니라, 교육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목고 전형을 일부 바꾸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수업과 평가 방식을 혁신하고, 학교별, 교사별로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해 어느 학교에 가더라도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학교들이 교육경쟁력을 갖추게 되고 모든 학교에서 골고루 인재가 양성될 것입니다. 앞으로 교육정책의 기조는 교육의 기회균등과 상호 협력적 문화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병희 : 학생들이 능력과 자질, 선호도에 따라 다양한 교육과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급을 다양화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급 학교는 설립의 취지와 교육목표에 맞는 교육과정을 실행해야 합니다. 강원도의 경우 특목고가 대체로 설립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론적인 얘기지만 학교설립의 취지와 다르게 교육과정이 운영된다면 그 때는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목고 외에 학교다양화를 위해 혁신학교를 추진할 것입니다. 혁신학교의 출발점은 학교현장입니다. 혁신학교는 교육과정, 학사, 교원인사 등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활동을 보장받습니다. 신청서를 낸 학교를 심사하여 내년부터 초등 5개교, 중등 5개교를 시작으로, 2012년엔 36개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혁신학교는 이기적인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한 경쟁을 강조함으로써 공교육의 새 모델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기용 : 우리 충북에는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 학교는 청주외고와 중산외고가 있습니다. 사교육 없이 스스로 공부한 학생이 외고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교과부의 '외고 입학제도 개선방안' 에 적극 찬성합니다.

이에 2011학년도 청주외고 신입생은 '자기주도 학습전형' 을 통해 7개학과 8학급 200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중산외고는 고교체제 개편에 따라 내년에 일반고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도입하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은 사교육 유발의 원인이 되었던 외고 학생선발을 사교육의 도움 없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와 학습문화도 바꿀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역에 따라 외고의 실정이 다르므로 전국 외고에 단일화된 외고 입학제도를 실시하는 것보다는 지역의 특성을 일부 반영할 수 있는 '외고 입학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성 : 학생들의 적성을 고려하고 뛰어난 언어능력을 지닌 학생들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차별화된 맞춤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우수한 언어인재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외고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다만 사회 일각에서 제기된 외고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진학 진로 문제와 불필요한 사교육 유발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충남교육청은 전공교과를 60% 이상 이수하고 전공외국어교육에 집중하여 전국 최초로 베트남어과를 신설, 내년부터 전국단위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등 외고 설립 본연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어고 입학전형을 100% 자기주도 학습전형으로 실시하여 사교육 유발 요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김승환 : 외고, 과학고, 자립형사립고 등 특수목적을 띤 고등학교는 본질적으로 고교평준화정책과 충돌하는 학교형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교들은 이미 매우 오랜 세월 우리 사회에서 그 뿌리를 내려왔고, 그에 따른 이해관계도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특수목적고들은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아이의 교육기회가 차별받을 뿐 아리나 입시위주 교육, 사교육 광풍의 단초가 되고 있습니다. 고교평준화의 틀을 깨지 않는 선에서 현 공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해 '혁신학교' 추진 등 학교다양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만채 : 학교다양화 정책은 필요한 것이지만 학생의 사회적 · 경제적 배경이 크게 작용하는 학교유형에 대해서는 재고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외국어고는 그동안 입시 명문고, 사교육비 증가의 주범 등의 지적을 받아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교육청은 자율형 사립고나 소수 우수학생들에게 특혜가 한정된 특목고는 현행 수준에서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반학생들의 수월성교육 기회확대를 위해 일반계 고교 특성화 방안을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학력향상과 인성함양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자율적인 혁신학교를 '무지개학교' 라는 이름으로 육성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역마다 교육의 여건과 요구가 각기 다릅니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인 교육활동,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학교체제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학교다양화를 위한 법적 · 제도적 원칙을 제시하고, 시도교육청은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다양한 학교운영의 모델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영우 : 세계화시대에 부응하는 외국어 수월성교육이 절실히 요망되는 시점에서,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 · 운영하여 수준 높은 외국어 구사능력을 지닌 글로벌 리더를 육성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외국어분야의 전문교육기관인 외국어고등학교는 처음 출발과 달리 대학입시를 위한 특목고라는 인식이 짙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에 부합하는 교육방향을 추구하고 학생들과 학부모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지역민의 외국어교

육에 대한 관심과 학습풍토 조성에 힘쓸 계획입니다.

고영진 : 고등학교 교육의 다양화와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의 기회를 확대할 것입니다.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에 의거한 것으로 특수분야의 전문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경남의 도세에 걸맞는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경남지역 학생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인재육성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래사회의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 학교교육의 다양화는 필요합니다. 교육은 평등성 교육과 수월성 교육이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 산, 어촌의 비율이 높고 학력격차가 큰 경남의 경우, 기숙형 고교의 확대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립형 사립고 뿐만 아니라 자립형 공립고의 비율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수월성과 평등성을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경남의 경우 지자체와 협의 하에 외고를 설립하였으며 지방의 명문고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양성언 : 고교평준화제도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획일화된 교육과정의 운영, 학교선택권의 제한이라는 심각한 문제점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학교 다양화정책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외고 문제 해결을 위해 「고교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개선 및 고등학교 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고가 명문대 진학을 위한 학교가 아니라, 외국어 인재 양성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는 학교로 거듭나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입니다. 그에 걸맞은 인재양성을 위한 외고 육성이 필요합니다. 올해부터 제주외고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이를 위해 입학사정관들에 대한 연수와 워크숍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보다는 진정으로 외국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을 선발하여 제주외고를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외고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장휘국 : 학교다양화란 이름으로 외고, 자사고 등을 확대시키는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대합니다. 이러한 학교들은 본래의 목적 및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면서 명문대 입학 통로로 변질되었으며, 초등학교부터 사교육비 증가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육양극화 현상이 확대 · 심화되면서 사회경제적 배경이 좋은 부모의 자녀가 외고, 자사고 등에 입학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입니다. 사실상 현재 대한민국 고등학교는 외고, 자사고 등의 귀족학교와 일반 · 전문계고 등의 서민학교로 재편되면서 평준화가 급속히 해체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매우 안타깝습니다.

결국 학교다양화란 이름으로 특정 계층의 이해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외고, 자사고 등이 확대되면서 오히려 교육 불평등이 조장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외고, 자사고 설립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입니다.

▶ 질문, 일곱 **임기동안 추진할 주요 정책 및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곽노현 : 시민들과 약속한 『꿈의 학교, 행복한 서울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꿈을 키우는 『희망교육』', '포기없는 『책임교육』', '인간존중의 『혁신교육』', '참여하는 『소통교육』' 에 서울교육의 정책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임기 중 추진할 역점과제로 첫째,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이 될 서울형 혁신학교를 도입하겠습니다. 혁신학교는 창의성과 인성교육 및 적성 · 진로교육을 전면화하는 학교로, 낙후지역 중학교부터 우선적으로 지정해 일반학교 전체로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수업혁신과 교육복지를 통해 혁신을 창출하는 학교로 운영함과 더불어 대안형 혁신학교 모델 개발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입니다. 현재 혁신학교 이해를 위한 교원연수가 진행 중이며, 혁신학교추진단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둘째,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하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2011년부터 초등학교부터 실시해 연차적으로 중학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학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해서 교육계만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지난 11일 전국 시 · 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감들이 무상급식에 대한 국가지원을 합의하고 교과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 무상급식 소요예산 편성 및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셋째, 교육비리 근절을 통해 투명한 행정의 기초를 탄탄히 하겠습니다. 시민의 신뢰 및 교육계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비리근절입니다.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비리연루자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현재 감사담당관을 개방형으로 공모 중입니다. 그밖에 학부모 부담 공교육비 경감과 영어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임혜경 : 부산시교육청은 교육감 공약이행을 위해 정책협의회, 세출예산사업종합검토회 등을 통해 내부 조율 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학력신장을 통해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을 최소화(2010년 초 1.0%, 중 6.6%, 고 3.8% · 2014년 초 0.5%, 중 5%, 고 3%)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초등 학습멘토 교사 배치, 기초학력 향상 지원시스템(CANDI) 운영 확대, 지역간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학습기술컨설팅단 운영, EBS교재 활용 및 권역별 수리영역 토요특강 운영, 영어수업능력 인증제 확대 운영,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확대 배치 등의 세부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학교안전을 통해 학교폭력 · 성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초중고 배움터지킴이 전 학교 배치, 상황관찰기(CCTV) 설치, 초등학교 안심알리미 사용 전 학교 실시, 놀이지도를 통한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 도모, 또래 멘토링을 통한 재능나눔운동 전개, 한자교육을 통한 충 효 예절 교육강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부산교육의 청렴도를 상위권으로 올려 놓겠습니다. 이를 위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부조리신고 시스템의 민간업체 아웃소싱제 운영, 부패 취약분야 감찰활동 강화, 청렴 마일리지제 도입 · 운영 및 반부패 청렴교육 강화 등을 시행하겠습니

다. 2012년까지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시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9월부터 무상급식추진단 구성 운영, 학교급식법 개정 추진 건의,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학교장의 책무성 강화 및 교직원의 사기진작을 통한 현장변화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자율권 부여(20%), 학교장의 교사 초빙권 부여 및 계약제교원 임용권 확대, 학교장의 자율경영 지원을 위한 학교장 연수 강화, 교장-교감 다채널 평과결과 활용방법 개선, 수업공개 적정화(학기당 3회 이상 · 1회 이상), UP스쿨 시행, 교육성과 우수학교 및 교원 표창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밖에 학부모가 주도하는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부산 고교 희망 인재 양성 프로젝트 운영, 학교-지역아동센터 연계 돌봄교실 운영, 학교내 영재학급 단계적 설치 확대, 장애학생 재활-취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강화,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실 운영, 입학사정관제 대비 학교상담활동 확대,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 등의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동기 : "꿈과 행복을 주는 일류 대구교육"을 비전으로 하여 "인성과 실력을 갖춘 미래 주도 인재육성을 지표로 해 품성과 예절을 겸비한 인간교육, 창의와 소질을 지닌 인재양성, 신뢰와 보람의 교육공동체 건설, 배려와 나눔의 교육복지 구현,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등을 앞으로 4년 동안 추진할 주요 시책으로 정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미래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인성과 실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저의 철학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정신이 반영된 것입니다. 첫째, 학력향상 및 창의-인성교육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 창의-인성교육 지원단의 역할 강화, 다양한 동아리활동의 활성화, 창의적 체험활동 결과의 누가기록 관리, 범시민 독서운동 전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일반계고 기숙사 미설치교에 대해 2011년 공립자율학교 5개교를 시작으로 기숙사 건립 및 돌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 남녀공학고의 단성고 전환을 위해 TF팀을 운영, 학교별 전환 시 배정 대책을 면밀히 시행하고 특목고, 자율고를 행정구역별로 균등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학력향상을 위해 자기주도 학습 중점학교를 운영하고,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학력향상 기반을 구축하도록 맞춤형 서비스는 물론 e-스터디를 활성화하며, Wee센터를 통한 심리-정서적 지원 등 맞춤식 진로 진학지도를 꾀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가칭 '대구교육권리헌장' 마련을 통해 학교별 생활지도규정을 재정비하고 안전한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역단체는 물론 공공기관까지 업무협약을 맺고 학생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유아무상교육의 단계적 확대, 5, 6학년 교과담당제 실시, 초등수학보조교사 배치, 영어 친화적 환경 및 영어노출 기회 확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U-러닝 환경을 구축하고, 스타강사의 강의콘텐츠를 제공하며, 선택과 맞춤의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셋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을 통해 교육비리를 척결하고 청정대구교육의 이미지를 재확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감사담당관을 외부에 공모하여 운영함으로써 제식구감싸기식 감사를 막겠습니다. 단가계약 및 구매대행 기관을 통한 시장 물품 구입으로 청렴은 물론 예산절감 효과까지 꾀하겠습니다. 교육전문직 선발 시 외부위원을 위촉하고, 우수교원

전보 유예 및 초빙제를 활성화하며, 본청 사무관의 공모제를 확대하고 지방공무원의 중앙부처 등의 교환근무를 확대하며, 장학관 및 지방공무원의 순환근무제를 도입, 조직의 건강과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넷째, 교육복지 · 시설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를 위해 급식비 지원을 2014년까지 40%까지 확대해 추진하고, 교육취약계층 자녀 학비 지원 및 정보화 지원을 확대하며, 다문화 북한 이탈가정 자녀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교직원 영 · 유아 보육수당 지급, 보결전담 강사풀제 운영, 기간제강사 채용업무 간소화, 우수교원 해외연수 기회 확대 등 교직원 복지 증진 및 교직원업무 경감과 근무여건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근형 : 향후 4년간 인천 교육가족과 시민들이 힘을 합하여 "학생에게는 꿈과 희망을, 선생님에게는 긍지와 보람을, 학부모에게는 신뢰와 만족" 을 주는 인천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점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첫째, 학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학력을 신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 개개인의 학력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알맞은 처방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업성취목표관리제를 도입,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효를 중심으로『사람됨 교육』을 하겠습니다. 사람됨은『효』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별로『효』체험교육을 실시하고, 가정과 연계한『효』교육을 통해 인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사랑과 믿음이 있는 행복한 학교를 만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학교폭력 예방과 부적응 학생 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성교육, 양성평등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또 진로 및 진학 지도를 위한 진학상담실을 운영하고, 진로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하겠습니다. 넷째, 자율성 · 책무성이 있는 학교 책임경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율성과 책무성을 갖는 학교경영을 위해 학교장의 자율과 책임경영권을 확대하겠으며, 이에 따른 경영평가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강화하고 학교별로는 특색 있는 학교문화를 창조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교육복지지원종합센터를 설치 · 운영하겠습니다. 센터 설립 및 운영과 함께 인천시청과 협력하여 초 · 중학생들의 무상급식과 급식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다문화 가정과 새터민 학생들을 위해 실질적인 체험위주의 교육을 확대 실시하며, 만학도를 위한 학력인정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시설을 증설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교육공동체 구성

6대 분야, 60개 과제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학생진로를 책임지는 뚝뚝한 교육 부문에는 모두 13개의 과제가 수립되었습니다. 주로 학력향상 및 인성교육 제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창의-인성교육, 학력신장, 기초부진학생 눈높이교육, 영재교육, 방과후학교 운영, 사이버교육, 맞춤형 진로지도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둘째, 교육가족을 섬기는 따뜻한 교육 부문에는 모두 9개의 과제가 선정되었습니다.

원 모두가 참여하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정책평가 및 예방감사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제도 개선, 영양사 · 조리종사원 등 각종 비정규직의 호봉제 운영 및 근무여건도 개선하겠습니다. 이 밖에 다목적실, 특별실 등 최첨단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자연친화적 학교환경 조성에 힘을 쏟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학교 이전 재배치 등 시대의 변화에 맞는 교육여건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신호 : 올해 우리 교육청이 교육청 평가 2년 연속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된 결과가 입증하듯이 현재 교육활동을 위한 기본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 4년은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의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비중을 두고 지원을 했기 때문에, 향후 4년은 학력신장과 영재교육, 영어교육 등 국제화 · 개방화 시대에 걸맞은 21세기를 이끌어갈 인재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공교육 강화를 통해 인성교육과 학력신장에 힘 쓰겠으며, 무상급식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및 특수교육 · 유아교육 지원사업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학교에 교육업무 스탭을 배치해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우리 교육청의 트레이드 마크인 '청렴'을 활성화하기 위해 투명한 교육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형 사립고와 공립고, 기숙형 고등학교, 외국어교육원, 유아체험학습원 등을 임기 내에 설립하겠습니다.

김복만 : 6대 분야, 60개 과제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학생진로를 책임지는 똑똑한 교육 부문에는 모두 13개의 과제가 수립되었습니다. 주로 학력향상 및 인성교육 제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창의-인성교육, 학력신장, 기초부진학생 눈높이교육, 영재교육, 방과후학교 운영, 사이버교육, 맞춤형 진로지도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둘째, 교육가족을 섬기는 따뜻한 교육 부문에는 모두 9개의 과제가 선정되었습니다. 학생복지와 교직원 복지에 관한 것으로,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학교안전지킴이 운영, 교원능력개발 기회 확대, 교원업무 획기적 경감, 교무실 환경개선, 권역별 교직원 육아보육시설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교육만족을 높이는 행복한 교육 부문은 모두 11개의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사교육비 경감, 교육비 지원을 확대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선택권 확대, 무상급식 단계적 실시, 중고교 신입생 교복 무상 지급, 현장체험학습 교통비 지원, 저소득층 수학여행비 지원, 유아 및 특수교육 강화, 외국학교와 1대1 자매결연을 통한 학생과 교사 교류 등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다 같이 참여하는 깨끗한 교육 부문에는 모두 6개의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것으로, 학교시설관리공단 설치, 식재료 공동구매 추진, 개방형 직위 감사관제 도입, 명예시민감사관제 운영, 이동교육감실 운영, 자기혁신제안제 운영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째, 소통과 효율중심의 알뜰한 교육 부문에는 모두 9개의 과제가 채택되었습니다. 교육 행 · 재정적 지원을 위한 것으로, 기초자치단체별 교육지원팀 설치, 대외기관과의 협력 강화, 교육행정 품질경영시스

템 도입, 학교시설 주민이용 활성화, 교육발전기금 조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교육인프라를 다지는 튼튼한 교육 부문에는 모두 12개의 과제가 설정되었습니다.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한 것으로,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포함한 에너지마이스터고 설립, 스포츠과학고등학교 및 국제고등학교 설립, 울산서부지역 일반계고 설립, 기숙형학교 설치 확대, 울산영어빌리지 조성, 수도권 울산학사 설립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상곤 : 첫째,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민주시민을 육성하겠습니다. '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경기교육 '의 지표는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 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나눔과 배려의 인성교육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교육과정과 학생 인권조례 제정을 통해 인권 · 책임 교육, 생명존중 교육, 준법질서의식 등 민주적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참여와 자치의 학생문화 정착, 봉사활동 강화 등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실천을 강조하고, 평화 · 공존 교육과 국제이해교육을 더욱 활성화해 세계시민으로서의 소양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자아가치교육, 학교 책임교육, 보편적 교육복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창의적 지성교육을 통한 학력 대혁신으로 미래지향적인 삶과 공공의 가치를 중시하는 자아 가치교육과, 혁신교육을 통해 학력과 인성이 조화롭게 발달된 전인적 성장을 학교가 모두 책임지는 학교 책임교육, 무상교육을 확대해 누구나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는 공공성, 역동성, 민주성, 국제성 등 4대 정신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혁신학교 확대, 학력 대혁신, 교원역량 강화, 친환경 무상급식 및 무상교육 확대, 사교육비 경감, 참여협육 등 6대 과제를 통해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혁신학교를 확대해 공교육을 정상화 하겠습니다. 2010년 9월 1일 기준 43개교로 운영되는 혁신학교를 2013년까지 200개교로 확대하고, 4개 권역에 혁신학교 벨트를 구축하며, 혁신학교 아카데미를 설치해 혁신학교 교수학습 모델을 개발 · 보급하고 교원연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지자단체와의 MOU 체결로 혁신교육지구를 지정해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혁신교육방안을 우선 추진하는 등 혁신교육 확대를 통해 '활기찬 학교, 행복한 교실' 의 공교육 정상화 모델이 도내 모든 학교에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학교는 교육과정의 다양화 · 특성화, 생산적인 학교문화 형성,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 교수-학습 중심의 학교 운영 시스템, 권한위임 체제 구축, 대외협력 · 참여 확대 등 6대 핵심과제를 수행해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미래형 선진교육을 주도할 것입니다. 넷째, 창의적 지성교육으로 학력을 크게 혁신하겠습니다.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핵심역량을 기르기 위해 교육과정과 수업 및 평가 방법을 혁신할 계획입니다. 학교 및 교사별로 특성화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편성 · 운영하고, 토의 · 토론 · 탐구 · 프로젝트 등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확대하며, 평가 방법 역시 과정 중심의 평가(상시평가) 위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위해 과학적 진단 프로그램과 맞춤형 처방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창의적 학력 혁신 종합

계획' 에 담아 기초학력이 보장된 가운데 창의력과 자기주도 학습능력 등 미래의 핵심역량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교원의 역량을 크게 강화하겠습니다.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교원역량 강화 종합계획' (NTTP, New Teacher Training Program 창의적 학력혁신을 위해 교육과정 · 수업 · 평가 방식의 개선능력을 신장시키는 새로운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수립, 실행하여, 교원이 학생지도에 전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교육연구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교육과정과 수업의 변화에 중점을 둔 장학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직급별 인사제도를 다양화해 수업 잘하는 교원이 우대받는 교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업무 지원 인력을 배치하고, 정책추진에 있어서 '교육활동 침해 영향 평가제' 를 실시하며, 수업 중심으로 학교조직을 리모델링하고, 공문서를 50% 감축해 교원의 행정업무를 대폭 줄이겠습니다. 여섯째, 친환경 무상급식 및 무상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선진형 교육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초 · 중학교 무상급식을 완성하고, 무상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무상급식 5개년 계획에 의거 지자체와의 협력 하에 2012년까지는 초등학교, 2014년까지는 중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며, 경기도 G마크 농산물 등 친환경농산물 및 지역농산물 사용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기본운영비를 2014년까지 표준교육비 대비 122%로 증액하고, 초등학교 학습준비물비는 전액, 중학교 학습준비물비는 학생 1인당 연 2만 원 이상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확대, 공립 유치원 170개원 신설 및 병설유치원 50학급 증설,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개선 등 유아 무상교육도 확대하겠습니다. 일곱째, 사교육비를 경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 자체 지정 '공교육 내실화 선도학교' 를 운영하고,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을 포함 26개의 방과후학교 종합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하겠습니다. 고교평준화 확대를 포함한 고교 입시제도 개선으로 입시로 인한 사교육 수요를 줄이겠습니다. 또한 학원의 심야교습시간을 유 · 초 · 중 · 고교생 모두 밤 10시로 제한하는 '경기도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여덟째, 참여협육을 통해 미래형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하는 참여협육의 학교공동체 문화를 통해 소통과 협력의 미래형 선진학교를 실현하겠습니다. 학부모의 학교교육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학기별로 2회 이상 학부모의 날을 운영하며, 맞춤형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각 급 학교 학부모회에 대한 지원도 2010년 전체 학교 수 대비 27%에서 2014년 70%로 매년 10% 이상 확대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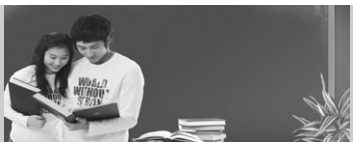
민병희 : 향후 4년간 주요 정책 추진은 5대 공약의 이행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5대 핵심공약은 1. 친환경 무상급식, 2. 고교평준화 추진, 3. 혁신학교 설립, 4. 학생인권조례 제정, 5. 교원전문성 향상입니다. 첫째,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하겠습니다. 유(공립), 초, 중,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 연차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겠습니다. 연도별 · 단계적 실시를 원칙으로 할 것이며, 2011년에는 유(공립), 초등학교, 2012년에는 중학교 포함, 2013년에는 고등학교까지 포함하여 모든 학생이 무상급식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예상되는 소요액은(단위 백만 원) 2011년 51,204원, 2012년 30,166원, 2013년 27,388원입니다. 예산

은 교육청 50% 강원도 25%, 각 지자체 25% 분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둘째, 고교평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7월 전문직, 일선 학교 관리자, 교사 등이 주축이 된 고교평준화 실무 추진단(T/F)을 구성했으며, 2011년 2월까지 고교평준화제도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11년 3월에 고시하여, 2012학년도 고교입시(2012년 2월 배정)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평준화 찬성여부는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아무런 조건 없이 의뢰를 맡기고, 여기서 찬성비율이 50%를 넘기면 시행을 할 것입니다. 셋째, 혁신학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학급당 인원 25명, 학년당 6학급 내외 규모의 각 급 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유형은 농산어촌형, 도시형, 도농복합형 등을 공모 · 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운영기간은 4년이며 평가 후 연속 지정이 가능합니다. 학교 선정 조건은 학교장의 자율 · 책임 경영 의지와, 학교 구성원과 지역 사회 간 협력 및 동참 의지, 추진계획의 학교여건 부합 정도 및 실천 가능성 등입니다. 2011년 혁신학교 공무는 춘천권 2개교, 원주권 2개교, 강릉권 2개교, 동해권 2개교, 속초권 2개교로 권역별 초1, 중1을 기준으로 하되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넷째,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헌법과 교육 관련 법령 및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등의 국제인권 규범이 보장하는 학생의 인권을 구체화하고, 그것의 구현을 기본철학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에 앞서 학교생활 규정을 점검 · 개정하여 인권(학생, 교원) 침해적 요소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섯째,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문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과, 지역교육청이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학교업무를 행정실 업무와 교무실 업무로 구분하고, 교무실 업무를 교육업무와 교육지원업무로 명확히 구분, 행정실 업무는 행정실 직원이 담당하며, 교육업무는 교수-학습과 학생생활지도와 관련된 일로 한정하여 부장교사 책임으로 교사들이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 업무는 교감의 책임으로 지원업무 전담 직원을 학교 규모에 따라 1-3명 배치해 담당하도록 할 것입니다. 5대 핵심공약의 추진을 위해 5대 정책의 기본방향을 함께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5대 정책의 기본방향은 '질 높은 공교육, 차별 없는 강원교육 실현', '무상교육 실현, 교육비 부담 제로', '지역격차 없는 쾌적한 교육환경', '인권이 살아 있는 행복한 학교 문화', '밝고 투명한 청정 교육행정 구현' 입니다.

이기용 : 첫째, 우리 충북을 '책 읽는 사회'가 되도록 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초 · 중 · 고 입학생에게 책을 선물하는 북스타트 책날개 운동, 부모와 함께 손잡고 찾아가는 학교마을도서관 만들기, 사제동행 책읽기 '2080, 2030운동' 등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둘째, 인성과 학력의 조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하여 가슴이 따뜻한 글로벌 인재육성에 매진하겠습니다. 셋째, 학력신장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 학력향상 중점학교 등을 운영하여 공교육을 견실히 다지겠습니다. 넷째, 우리 선생님들이 창의와 슬기가 넘치는 수업설계를 할 수 있도록 교실수업지원 컨설팅을 강화하고 교실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행정지원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섯째, 기숙형 중 · 고등학교 확대, 녹색학교 건립, 지역별 맞춤형 학교 등 21세기형 명품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성 : 「바른 품성 알찬 실력 미래 여는 충남교육」이라는 지표를 구현하고 교육가족 모두가 공감하는 행복한 충남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5개 기본방향을 정해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남과 더불어 사는 바른 품성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칭찬 · 질서 · 공경 · 봉사 · 나라사랑의 '바른 품성 5운동'을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운동으로 확산시켜 전 도민과 교육가족의 공감대 속에서 바르게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해 배움터지킴이와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체육 · 보건, 문화 · 예술교육을 강화하며, 농어촌 체험학습과 청소년 단체 활동을 활성화하여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문화 정착으로 학생의 올바른 심성이 길러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창의적이고 실력 있는 인재 육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충남학력 전국 상위권 도약을 위해 '충남학력 NEW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준별 교과교실제 확대와 토론 및 독서교육의 강화, 탐구중심 과학교육과 영재교육 강화로 미래 경쟁력 있는 인재를 기르겠습니다. 또한 전문계고 직업교육을 강화해 21세기 산업 전략에 맞춘 학과개편과 선진화된 특성화고 운영으로 취업률 100% 달성의 기반을 확실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성취와 보람의 교직문화를 이루겠습니다. 교원의 능력개발을 통해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인턴 · 수습교사제 실시와 업무경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갖고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낙후지역의 교직원 공동주택 마련,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책 마련 등으로 교육력 제고는 물론 교직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모두가 행복한 선진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농산어촌에 무료 통학버스와 마을공부방 학습서비스 확대, 유아 · 특수교육 지원 강화와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 사회적 배려 계층 자녀를 위한 돌봄서비스 확대와 기숙형 중학교 운영 등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학부모 교육경비 경감을 위해 원어민교사를 전면 배치하고, 학부모 및 대학생 교육도우미제를 확대 운영하며, 방과후 돌봄 교육서비스와 맞춤형 입시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학교 무료급식 점진적 확대와 지역 농수축산물 학교급식 활용 확대, 지역노인 일자리 창출 및 교육시설 개방, 지역교육발전지원단 운영 등 지자체와 함께하는 교육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저탄소 친환경 교육시설의 구축과 유비쿼터스 교수 · 학습 시스템 및 화상영어 학습 시스템 구축, 환경미화 전담인력 확대 배치 등 미래형 선진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교육공동체의 만족도를 높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비리없는 청정한 교육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비리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소한 부조리라도 엄정하고 단호한 처벌을 통해 온정주의 관행을 타파할 것입니다. 감사책임자의 개방형 공모, 전자입찰제도의 확대, 시설공사의 학부모감독제 실시 등 제도와 규정을 정비하겠습니다. 컨설팅 중심의 장학을 강화하고, 교육현장을 적극 지원하는 서비스행정 중심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능력과 실적 중심의 선진 인사행정을 추진함으로써 교육가족 모두가 만족하고 감동하는 교육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김승환 : 우선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초등학교부터 전



면 실시하고, 2012년부터는 고등학교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불필요한 예산을 조정하고 향후 지자체 지원과 교육재정 확보를 통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위탁급식학교를 직영으로 전환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급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까지 나머지 30개교에 대한 직영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농산어촌교육지원 특별법' 제정 운동을 통해 농산어촌의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이며, 농산어촌 학교가 많은 전북의 의견이 특별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정부 건의에 나서겠습니다. 셋째, 학생들의 능률적 학습활동과 합리적 소비습관 형성을 위해 학습준비물 지원 경비를 연차적으로 증액, 2012년부터는 학생 1인당 5만 원 이상 지원이 가능토록 할 것입니다. 넷째, 학교의 질적인 변화도 꾀하겠습니다. 학교교육의 당면 문제를 극복하고 학교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해 2014년까지 전원형 · 도시형 · 미래형 · 대안형 등 4가지 유형의 '공립형 혁신학교' 100곳을 지정 · 운영하겠습니다. 공교육 혁신을 위해 일제고사 대신 '기초학력 및 적성 진단프로그램' 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섯째, 0교시와 우월반 편성, 강제보충수업, 강제심야학습 등도 모두 폐지하겠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자유롭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두발 자율화는 물론, 학교자치제 도입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교육청렴도를 확연하게 높여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의 회계 및 운영에 관한 '외부감사제' 를 도입하고 불법찬조금, 부교재 리베이트, 계약비리 등을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교복 공동구매, 참고서 값의 거품을 빼고 사학재단 운영의 문제점을 교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여섯째, 교원들의 잡무를 제로화하고,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며, 교사회 · 학생회 · 학부모회의 법정기구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일곱째, 교육감부터 평가받는 교육평가 시스템의 도입은 물론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지원 확대로 학력상향평준화를 꾀함은 물론 장애인, 다문화 가정과 이주노동자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강화, 유아교육 지원확대를 통해 유아공교육 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장만채 : '열정 있는 교원과 지원하는 행정으로 학생이 행복한 전남교육' 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통해 전남의 교육가족들이 '소통과 협력으로 신뢰받는 전남교육' 을 만들고, 궁극적으로 '모두에게 질 높은 공교육을 실현'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시책으로학생중심의 학교운영을 실현하고, 수업혁신과 기본학력 정착에 최선을 다하며, 학생 · 학부모 · 교사가 소통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차별 없는 교육복지를 확대해 나가며, 지원중심의 교육행정을 구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행복한 전남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역점사업으로 첫째, 미래형 전남 공교육 모델인 무지개학교를 운영하고, 둘째, 보편적 복지 실현의 차원에서 추진할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하며, 셋째, 부패와 부조리를 타파하고 교육주체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장만채신문고를 설치 · 운영하고, 넷째, 농어촌 교육 살리기의 일환으로 추진할 예정인 농어촌 방과후학교 강사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다섯째,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사가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공문 50%

줄이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4년간 "소통과 협력으로 신뢰받는 전남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크게 네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육여건 개선 사업이며, 둘째는 질 높은 학교교육 실현이고, 셋째는 지원하는 교육행정의 구현이며, 넷째는 행복한 학생과 교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기초자치단체별 '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협의를 통한 친환경 무상급식비 지원 요청과 내 고장 생산 먹거리 지원을 통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생의 학습준비물 지원, 중학생들이 납부하는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추진하고, 수학여행비, 체험학습비, 야영수련활동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전남학교의 60%를 차지하는 농어촌교육을 살리기 위해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무분별한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지양하며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농어촌 인구감소 등으로 교원정원이 매년 감축됨에 따른 교육력 저하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교원정원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 친환경 무상급식 및 지역공부방 지원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협조를 구해야 할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전남교육발전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자발성과 지역적 특수성, 창의성, 공공성을 갖춘 미래형 전남 공교육 모델인 무지개학교 운영으로 활기차고 창의적인 학교, 배움과 협력이 있는 학교를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둘째, 질 높은 학교교육을 위해 수준별 이동 수업 활성화, 선택형 보충수업 실시, 심화 학습자료 개발·보급 등을 통해 지역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질 높은 학교 교육은 질 높은 교실 수업을 통해 이뤄진다는 원칙에 따라 수업의 질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학교 현장의 요구와 특성에 적합한 컨설팅 장학 지원, 권역별 진학지도 컨설팅 강화 등으로 교실 수업의 질을 높여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모두에게 질 높은 공교육"을 실현하고자 학습의욕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심리 학습 클리닉 운영을 통해 기초학력 부진학생 없는 학교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지역단위 행사가 지나치게 빈번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행사 총량제를 실시하고 지역단위 행사를 축소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입니다. 전남 학생들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사립학교 교육 내실화를 통해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민주성 확보와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교원들이 과원에 따른 신분불안정으로 교육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심각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인 간 교류를 권장하고 인사 수급을 고려한 공립 특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에 따라 전문계고가 특성화될 것을 감안하여 전문계고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또 유아교육을 개선하여 공교육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특수교사 정원 확보와 자격 소지자가 특수학교(급)에 배치되어 특수교육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강화할 예정이며, 보건교사 배치 확대를 추진하여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반부패 청렴교육, 평화·인권교육, 노동 존중과 사회적 약자 배려 등 학생·학부모·교사들의 가치교육을 실시하고 차별금지 교육과 평등교육을 실시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가치를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

다. 또한 진학에만 편중되어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진로 교육 시간을 확보하고, 전문상담교사 확보와 학교 상담을 내실화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교 도서관 활용을 활성화하고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디지털 도서관 활용과 독서 교육을 강화할 것입니다. 셋째, 지원하는 교육행정은 교육 본래의 가치를 찾아간다는 의미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연중 돌봄 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3,000여명의 전남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며, 지역공부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별 '청소년교육복지 문화센터' 를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연간 2,000여명의 부적응 학생들이 발생하는 전남에서 이 학생들을 위한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교 내 비정규직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법률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전남교육계의 청렴도를 제고하고, 교육주체간의 직접적 소통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교육감이 직접 챙기고자 하는 장만채신문고를 운영할 것이며, 한정된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편성 · 집행하고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 예산제를 도입할 것이며,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며 공정한 인사를 위한 도민참여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금품수수, 성폭력, 성적조작, 상습적 폭력행사, 학생차별(인종, 장애, 성적, 성별)등 학교교육의 불신을 조장하는 부적격교원에 대해 엄중 처벌하고, 징계위원회 · 인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적극 참여시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행정을 이룰 것입니다.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인사권 중의 하나인 교육장 임명권을 주민 중심의 인사행정, 능력 중심의 인재 발굴 및 인사의 객관성, 투명성,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지역 주민에게 돌려주는 주민추천 교육장 공모제를 실시할 것입니다. 넷째, 교직원이 긍지를 가지고 학부모가 만족하며 학생들이 행복해하는 전남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학생인권과 교권이 함께 존중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것입니다. 또한 학생자치활동 강화를 통해 학생이 중심이 되는 자발적이고 건강한 학교문화를 형성하고, 학생회 및 동아리 활동에 행 ·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것이며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대폭 경감하여 수업, 학생생활, 진로 상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 공문을 50% 줄이고, 전자결재시스템을 조기 도입하여 교원들의 행정업무를 대폭 줄일 예정입니다. 또한 교원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연수 프로그램의 질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원연수제도를 개선코자 합니다. 그리고 학년별 공동학급운영이라든가 학교 문화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학교변화를 이끌 수 있는 다양한 교사모임을 대폭 지원함으로써 자율적인 교사 협력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원)장 전보 관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기준을 개정하고, 교(원)감의 근무평정 방법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롭게 개선하겠습니다.

이영우 : 학력향상과 사교육비 절감 그리고 안전한 학교만들기 등은 시급한 문제들입니다. 저는 임기동안 교육가족을 비롯한 전 도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모든 문제들과 교육현안을 풀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생에게는 희망을, 학부모에게는 만족을, 교직원에게는 보람을, 도민에게는 감동을 주는 경북교육을 실현하

기 위해 몇 가지 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육의 핵심은 올바른 인성과 학력 향상입니다. 첫째, 올바른 인성을 기르기 위해 도시와 농촌 학교의 결연을 통한 나눔과 배품 활동을 전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청소년 봉사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야영시설의 현대화로 학생들에게 호연지기를 길러주고 현장체험 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 모든 교육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글로벌시대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실력입니다. 고도로 발달된 정보화사회를 앞장 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실력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데 인적 · 물적 자원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력책임제를 도입하여 교실수업을 개선하고 부진아 없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세계화시대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해 영어를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영어체험교실을 활성화하며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확대 배치하여 읽고 쓰기의 영어에서 듣고 말하기 중심으로 영어교육의 방향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든 교육의 인프라를 교실수업과 접목시켜 학력신장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공교육의 기능을 회복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모든 학생에게 사이버 가정학습을 지원하겠으며, 맞춤형 방과후학교 및 스타강사 인력풀제와 유 · 초등학교에 온종일 돌봄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EBS 및 IPTV를 확대 지원하여 누구나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계발하여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귀여운 자녀들을 기본이 바로 된 인물로 키우겠습니다. 넷째, 학교폭력이나 따돌림, 사고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배움터 지킴이 및 CCTV를 확대 설치하고 등하교 안전을 위한 '안심 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교육시설을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 친환경 급식학교를 확대하여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열심히 일하는 교직원을 우대하겠습니다. 교육의 성공은 무엇보다도 교직원들의 열정과 헌신이 필수적입니다. 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우수 교직원에 대한 인사 우대책을 강구하고, 전문성 계발을 위한 연수비용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교원복지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의 운영으로 인사행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에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최상의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및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복지 실현과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고영진 : 학교가 살아야 교육이 살고, 교육이 살아야 희망찬 경남의 미래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교육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함께할 때 일선 교육현장은 활기차게 돌아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인성과 창의력을 키우고 자질을 익힐 수 있는 곳이 학교가 되도록 기본부터 충실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독서교육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책 읽는 경남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 청소년 가장을 비롯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한 부모가정과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도 각종 지원을 강화하는 등 교육복지를 큰 폭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

다.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 이제 경남에서는 돈이 없어 공부를 못했고 공부를 하지 못해 가난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교육평등권을 보장하고 평생교육학교를 설치하여 고등학교 졸업 후 직업훈련과정까지 경남도교육청에서 전담할 방침입니다. 그리하여, 장애학생의 학부모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다소 나마 덜어 드리겠습니다. 곧 설립될 "경남 인재 미래재단"을 통해 제2의 김연아, 박지성, 빌게이츠도 이곳 경남에서 길러 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등록금 1천만원 시대에 대비한 "교육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전국 최초로 우리 경남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수요를 학교 안으로 끌어들여 공교육을 더욱 알차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학교마다 안전지킴이를 배치하여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교가 꿈을 키우고 가꾸는 즐거운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원들의 잡무를 줄여 선생님은 수업에만 전념하도록 하여 그 혜택이 학생에게 돌아가도록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밖에 교육정보 공개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양성언 : 첫째, 바른 품성을 가진 학생들을 길러내겠습니다. 실천중심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구축 및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청소년 선도활동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학교문화를 형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의 특성을 살리는 4대 특색교육으로 평화의 섬 · 제주 4 · 3 관련 평화 · 상생교육, 세계자연문화유산 관련 관광교육, 저탄소 녹생성장 관련 환경교육, 김만덕의 나눔 · 봉사정신 관련 배려교육을 전개하겠습니다. 둘째, 전국 최고의 학력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실수업 개선을 지원하는 장학행정과 학력향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 결과 2009년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도내 중 · 고생들의 학력수준이 2008년에 이어 전국 상위, 2010년 대학수학능력 시험에서도 도내 일반계 고등학교 수능 4개 영역 성적이 전국 최고로 밝혀짐에 따라 향후 4년간 전국 최고의 학력을 유지하기 위해 학교단위 '학력향상책임제' 운영 및 학교급별 다양한 자율학교 확대 지정,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정착 등을 통해 학력향상을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나눔과 배려의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소규모학교 학교운영비 증액 지원 등으로 지역 · 학교간 교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다문화교육센터' 건립과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 지원 대상학생 확대 등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설립, 모든 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로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신뢰와 섬김의 교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제도개선을 통한 깨끗하고 공정한 제주교육문화 정착을 위해 「클린 제주교육 추진단」을 운영하고 각종 제도개선과 청렴 홍보활동 등에 주력한 결과 200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6개 시 · 도교육청 중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뢰와 섬김의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학습환경을 구축하고 전국 최고의 청렴도 유지 및 '도민과의 열린 대화' 확대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문화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왼쪽부터 이진규 과장, 김태완 원장, 김윤정 단장, 강성태 대표, 노무종 상무, 조남기 교육장, 이준석 대표)

제5회 한국교육개발원 · 중앙일보 교육포럼 지상중계

'교육기부 왜, 어떻게 할 것인가'

정리_ 박유미 중앙일보 기자

최근 사회적으로 '교육기부' 에 대한 관심이 많다. 개인이나 단체 등에서 자신들의 재능과 자원을 이용해 초 · 중 · 고교생들의 학습을 돕는 교육기부 활동은 한국사회의 뜨거운 교육열을 반영하듯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중앙일보가 초 · 중 · 고교생의 공부를 돕기 위해 올해부터 시작한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공부의 신' 에는 3만5000명의 지원자가 몰리기도 했다.

정부에서도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교육기부를 활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와 이공계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손잡고 교육기부 운동에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과학창의재단, 교육과학강국실천연합과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기부 협약' 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에 한국교육개발원과 중앙일보는 지난 9월 1일 '교육기부 왜, 어떻게 할 것인가' 를 주제로 '제5회 교육포럼' 을 공동 주최했다. 두 시간이 넘게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육기부 관련 사회단체와 기업, 교육계 인사, 정부와 산하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교육기부가 필요하다" 고 입을 모았다.

1900년대 초 학교설립운동에서부터 시작해 우리나라 선각자들은 교육에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이러한 학교설립 운동은 광복 이후에도 이어져 우리나라 초 · 중등, 고등 교육이 단기간에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한 측면이 있습니다.

■ 토론 참가자 ■

강성태 사회적 기업 '공부의 신' 대표
김윤정 한국과학창의재단 창의인재기획단장
김태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사회)
노무종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상무
이준석 교육봉사모임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대표
이진규 교육과학기술부 창의인재육성과장
조남기 서울 동작교육지원청 교육장 · 신림지역교육복지 네트워크 공동대표

마을 인재 키우려면 마을 사람 모두 나서야

김태완(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사회) : 1900년대 초 학교설립운동에서부터 시작해 우리나라 선각자들은 교육에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이러한 학교설립 운동은 광복 이후에도 이어져 우리나라 초 · 중등, 고등 교육이 단기간에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한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교육기부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을 지 논의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선 교육기부운동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러한 활동들이 공교육을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을지 이야기해주십시오.

이진규(교육과학기술부 창의인재육성과장) : 기업이나 연구소, 대학 등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 인력, 지식재산을 학생이나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제공하거나 자체적으로 교육활동의 일부를 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체험활동 등 학교교육을 내실화하려면 상당히 많은 자원이 필요합니다. 연구시설, 기업의 생산시설, 현장경험이 풍부한 고급인력은 사교육기관에서 넘볼 수 없는 귀중한 자원입니다. 그러한 자원들이 학교에 투입되면 공교육 강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을 인재를 키우려면 마을 사람 모두가 나서야 한다' 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국가, 사회 구성원 모두가 나서야 하는 것이 교육기부입니다.

김윤정(한국과학창의재단 창의인재기획단장) : 앞으로는 교육기부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기부 개념이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위해 돈이나 물건을 대가없이 내놓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대학에 내놓았다' 는 식으로 큰 마음을 먹어야 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교육기부는 엄청나게 큰 것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재능이나 재산의 일부라도 교육을 위해 쓰여지도록 내놓는 것입니다. 누군가 일부를 내고 정부가 지원해서 완성한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춤형 기부가 중요

김태완 : 현재 교육기부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이나 단체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고,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까?

강성태('공부의 신' 대표) : 2006년 서울대생을 주축으로 하는 대학생 교육봉사동아리로 시작했습니다. 고교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은 안 오르고, 집에서 첫째다 보니 공부방법을 물어볼 형이 없었습니다. 그런 경험

대학생 봉사자들이 인터넷사이트 '공신닷컴' 을 통해 자기 주도 학습법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공부에 대한 압박보다는 친형, 친누나처럼 격려하고 도와준다는 의미로 '친형 멘토링' 이라고 부릅니다.

때문에 대학생이 되고 나서 동생과 함께 모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공신(공부의 신)' 이라는 이름이 알려졌는데, 처음에는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이 '공부를 신나게' 하기를 바라는 의미였습니다.

대학생 봉사자들이 인터넷사이트 '공신닷컴' 을 통해 자기 주도 학습법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공부에 대한 압박보다는 친형, 친누나처럼 격려하고 도와준다는 의미로 '친형 멘토링' 이라고 부릅니다. 운영과정에서 광고수입이나 콘텐츠로 인한 수입이 발생하는데, 그 수익으로 저소득층 멘토링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청소년 권장사이트로 선정됐고, 서울시에서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돼 있습니다. 현재 회원 수는 20만 명입니다.

이준석('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대표) : 2007년 서울과학고 동문들을 중심으로 저소득층, 소외계층 학생들에 대한 봉사활동 차원에서 시작했습니다. 용산지역에서 출발했는데, 지금은 서울 시내 4곳을 비롯해 전국에 7개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 영어 · 과학을 주 6회 교육합니다. 교재를 개발하고 과학실험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학부(하버드 졸업)를 나와 주변에 'TFA(Teach for America, 미국의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단체)'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TFA를 모델로 삼았지만 이 단체도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배나사' 는 학생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무종(한국항공우주산업 상무)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국산 비행기 완제품을 개발하는 유일한 업체입니다. 신입사원에게 수학 · 과학을 재교육시키는데 3D자료 등 고급 소프트웨어를 이용했더니, "학교에서 배울 때보다 재밌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 · 중 · 고 수학, 과학 원리를 가르칠 때 이 자료들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48가지의 동영상 교구와 교재를 개발했습니다. 교사들을 초청해 연수도 해줍니다. 예를 들어 중등과정에서 힘과 에너지 단원을 가르칠 때 '무거운 비행기가 승객을 태우고 어떻게 뜰 수 있는지' 를 동영상과 공장 견학 등을 통해 생생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연수가 끝나면 활용했던 교구 · 재를 제공합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해 127명의 교사들이 연수를 받았습니다. 향후 2년 간 교사 3000명을 연수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남기(서울 동작교육지원청 교육장 · 신림지역교육복지네트워크 공동대표) : 신림지역에는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2008년 원신초 교장(관악구 신림동)으로 재직할 당시 빈곤 · 위기 가정을 돕기 위해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힘을 빌렸습니다. 구청 · 교육청 · 병원 등 28개 기관 · 단체가 모였고, 인근 대학 교수들이 자문단으로 참여했습니다. 청년회의소와 굿네이버스에서 빈곤층 자녀에게 식사를 제공했고, 학교는 오후 6~9시까지 문을 열었습니다. 대학생들은 늦게까지 공부하는 아이들을 위해 자원봉사에 나섰습니다. 복지재단에서는 독서운동을 펼쳤고, 시민단체에서는 영어캠프를 열었습니다. 교육기부는 학교에서 필요한 맞춤형 기부를 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학교 담당자와 기부자의 의사소통이 우선입니다.

일본 도요타 자동차는 전국 과학관에 직원을 파견해 '놀라운 과학상자 프로그램' 을 운영했습니다. 지멘스도 '작은 과학자의 집' 을 상시적으로 운영해 체험학습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교육기부가 무궁무진하게 많은 형태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선진국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육기부, 외국에서는

김윤정 :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창의성과 인성교육입니다. 학교 안에서 단순하게 선생님 강의만 받아서는 다양한 자극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양한 학습경험을 위해서라도 교육기부는 필요합니다. 일본 도요타 자동차는 전국 과학관에 직원을 파견해 '놀라운 과학상자 프로그램' 을 운영했습니다. 지멘스도 '작은 과학자의 집' 을 상시적으로 운영해 체험학습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영국은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십' 을 통해 예술가와 건축가들이 학교수업에 참여합니다. 교육기부가 무궁무진하게 많은 형태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선진국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노무종 : 이공계 진학율이 크게 떨어져 미래에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기부는 필요합니다. 미국 보잉사의 경우, NASA(미 항공우주국)와 협력해 체험관을 운영합니다. 전세계 과학교사들이 방문해 우주복을 입고 달과 동일한 기압과 중력을 느낀 뒤 돌아가 학생들에게 설명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보잉사와 항공우주산업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보잉은 그런 과정을 통해 전세계 인재를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 공장을 학습현장으로 개방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교육기부인 것입니다.

김태완 : 미국 필라델피아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만든 '스쿨 오브 더 퓨처(미래의 학교)' 를 방문했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도시가 많이 슬럼화 돼있어 고교의 중도탈락율이 50%가 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이 지역 교육청과 손 잡고 새로운 형태의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학교는 돔 형태로 설계부터 달랐습니다. 가운데 공간에서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쉬고 먹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공부도 프로젝트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학습공동체 느낌입니다. 올해 첫 졸업생이 나오는데 대부분이 중도탈락하지 않고 대학에 입학 허가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고객을 교육할 수 있는 기업은 성공한다' 는 말이 있습니다. '미래의 고객' 을 교육할 수 있는 기업은 당연히 성공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에 익

■ 외국의 교육기부 사례 ■

- 도요타자동차(일본) = 전국 과학관에 직원 파견해 '놀라운 과학상자' 프로그램 운영
- 지멘스(독일) = 교육기부 재단 세워 과학실험 체험할 수 있는 '작은 과학자의 집' 상시 운영
- 보잉사(미국) = 사회공헌비의 47%를 교육분야에 투입. NASA(미 항공우주국) 시설로 세계 수학 · 과학 교사 초청해 체험학습, 교수법 강의
- 마이크로소프트(미국) : 미국 · 독일 · 싱가포르 등에 학습공동체 '스쿨 오브 더 퓨처(미래의 학교)' 설립 운영
- 시스코(미국) : 10년 간 150개국 50만 명 저소득층, 저교육층 학생 위한 1만개 네트워크 아카데미 설립
-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십' 운영(영국) : 예술가, 건축가 등 전문가들이 학교 수업 강사로 참여

※ 자료=교육포럼, 한국과학창의재단

"학교는 재밌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교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솜사탕 · 팝콘 기계를 들여놨었습니다. 노래방 · 도서실을 만들고, 컴퓨터 게임도 마음껏 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학교는 즐거운 공간이 되어야 하고 그러한 공간으로 만드는데 교육기부자들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

숙한 교육환경에서 생활하면 당연히 졸업 후에도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기기들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기업들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라도 교육에 투자해야 합니다.

교육기부 단체, 인증제 도입 필요

김태완 : 교육기부 활동 중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이준석 : 대부분의 교육기부 활동이 정기성을 띄지 않다보니 교육봉사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가 낮은 편입니다. 일선 학원들과 경쟁도 벌어지기 때문에 저소득층 외에는 가르치지 않겠다고 지역학원연합회와 협정을 맺기도 했습니다. 이런 갈등이 발생했을 때 조정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체의 품질관리도 필요합니다. 봉사활동 단체의 이름을 내걸고도 교재비로 20만원이나 받는 단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관리, 감독 강화 뿐 아니라 우수한 단체를 정부에서 인가해 주는 형태의 인증제 도입도 필요합니다.

교육기부단체의 법적지위 확보 문제도 있습니다. 장학재단 형태는 기부금 3억이라는 기준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교육법인은 교과부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연구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지만 그러면 교육 관련 법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사라집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와 사단법인의 중간 성격을 띄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강성태 : 처음 동아리 활동을 시작했을 때는 이런 저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강연회를 열었는데 무단으로 강의실을 썼다고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지역아동복지센터나 청소년센터, 일선 학교 등을 이용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공간을 운영하려면 안전문제도 있고 대관료 마련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등의 장소 기부가 필요합니다.

또 학습법을 습관화하는 프로그램이 일선학교의 방과 후 교실과 연계된다면 활동이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대학생 멘토링은 학생들이 역할모델로 삼을 수 있어 효과가 큽니다. 대학생들의 열정을 한 곳에 모으고 멘토링 교육을 해주는 등의 지원도 필요합니다.

노무종 : 연구자들이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사들을 가르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학생과 교사들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을 만들고, 강의기법을 배우는데 과학창의재단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 개발한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비가 추가로 발생해 주주를 설득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인센티브를 준다면 교육기부 활동에 자긍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정부에서 교육기부를 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종합 관리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조남기 : 학교는 재밌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교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솜사탕 · 팝콘 기계를 들여놨었습니다. 노래방 · 도서실을 만들고, 컴퓨터 게임도 마음껏 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학교는 즐거운 공간이 되어야 하고 그러한

"우선은 교육기부 자체가 하나의 사회적 운동이 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교육기부를 하는 기관이나 기업에 교육기부 마크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단계적으로는 기부하는 것들이 학교현장에 실제 필요한 내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간으로 만드는데 교육기부자들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교육기부자들은 학생들이 실험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학생들이 봉사하고 사회적 기업이 학교에 들어와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게 조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어떤 성향이 있는지 검증이 안됐고 학생들의 발달단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어떤 봉사를 할 것인지 검증하고 투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교육기부 종합 DB 구축

김태완 : 정부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이진규 : 정부의 개입은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좋은 일에 개입해도 형식화, 제도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교육기부 자체가 하나의 사회적 운동이 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교육기부를 하는 기관이나 기업에 교육기부 마크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단계적으로는 기부하는 것들이 학교현장에 실제 필요한 내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윤정 : 교육기부가 사회적으로 많이 확산되기까지 일정 정도 실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를 초청하려면 수십 만원이 들지만 그런 분들에게 교통비 정도라도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또 공공기관에서 교육용 장소를 개방해주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육기부를 하려는 사람과 도움을 받으려하는 사람들의 정보가 다 모일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재단에서는 창의체험 정보 등 기부 관련 종합 DB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박물관, 과학관처럼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곳들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아리나 전문가 등 인적기부에 대한 자원을 등록하면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을 연결시켜줄 계획입니다. 내년 3월에 정식 개통합니다.

김태완 : 요즘 '공정한 사회'가 화두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사회로 가자는 의미입니다.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공정한 기회를 얻고 능력발휘를 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노력하고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글로벌 창의인재, 지식과 인성, 예지력 갖춰야"

정리_ 한국교육개발원 홍보국제협력실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기획위원회 집담회 지상중계

지난 8월 17일 한국교육개발원 제1회의실에서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교육의 방향' 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2회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기획위원회 집담회' 에 참석한 위원들은 "진정한 창의력의 발현은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가능하다", "주입식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과 자기주도적 목표와 필요에 의해 학습된 기억에는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에서부터 문제의식을 키우는 창의성 교육이 필요하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면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 집담회 참석자 ■

김영길	한동대학교 총장	원광연	KAIST 문화기술대학원장
김태완	한국교육개발원장	이배용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교수
김현기	육군3사관학교장	이정모	성균관대학교 인지과학협동과정 명예교수
박문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종각	강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조장희	가천의과대학교 뇌과학연구소장(무순)

김영길 (한동대학교 총장, 위원장) : 최근 들어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의성' 교육이 무엇이며, 어떻게 교육해야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창의교육의 개념과 방향을 포함해 보다 폭넓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먼저 이배용 위원님부터 시작해 주시지요.

이배용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교수, 위원) : 저는 그동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과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위원장을 거치면서 대학 관계자들은 물론 교육감, 초중고 교장선생님과 교사, 학부모 등 많은 분들을 만나 협의하고 여기저기서 강연도 했습니다. '창의성'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은 그 때마다 화두가 되었으며, 국가수준의 교육목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창의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창의성의 개념이 기발한 발상이나 기존 지식을 벗어난 역발상, 고정 질서 파괴 등 도식적인 부분에 치우쳐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창의성 교육을 내세울 때 항상 암기위주의 교육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따릅니다. 하지만 암기를 통해 축적된 지식이 있어야 역발상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창의성 교육을 현장에 접목시킬 때, 공교육이 강조하고 있는 인성(질서)교육과 배치되는 측면은 없는 지를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류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지식과 인성, 국제적 감각, 더 나아가서는 예지력까지 갖춘 인재의 양성.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글로벌 창의인재 육성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김영길 : 이 위원님께서 잘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은 어떤 새로운 목표가 정해지면 기존의 것은 모두 버려야하는 것 또는 낡은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화로운 접목의 방법에 대해 오늘 참여하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 있으시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귀한 분을 한 분 새 위원님으로 모셨는데요. 육군 3사관학교의 김현기 교장선생님이십니다. 인생의 공백기라는 군대를 미래의 징검다리로 만드는 정말 창의적 교육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김현기 (육군3사관학교장, 위원) : 과분한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아마도 군을 책임지고, 또 사회의 일부를 담당하게 될 청년 장교를 잘 교육해 주길 바라셔서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많이 배우고 가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1968년 개교한 육군 3사관학교는 사관생도와 사관후보생 과정이 있습니다. 사관생도는 대학교 2년 이상을 졸업한 인원을 모집해서 3, 4학년의 대학교육을 시켜 복수학위를 줍니다. 군사학사라는 전문학사 전공 학사학위를 주고 육군 소위로 임관시켜 내보내는데 1년에 1,000명 정도를 임관 시킵니다. 사관후보생과정은 학사장교를 뽑아 일정 기간 군사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연간 임관되는 장교는 8,000여명입니다. 이 중 학군 장교와 육사에서 나오는 200명 육사장교를 빼고는 모두 3사관학교에서 임관되는 장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밖에 군복무를 3사관학교에서 하는 사병과 법무, 군의, 군종, 교수 사관 등의 초급 장교 등이 있습니다.

김영길 : 구성이 다양하군요. 3사관학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목표지향적 자기계발 교육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현기 : 군(軍)은 그동안 많은 변화를 거쳤습니다. 주5일제가 도입되고 저녁 6시 이후는 대부분 자유시간입니다. 그 많은 시간을 PX나 노래방, 컴퓨터게임. TV시청 등으로 허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징집되어 왔다는 군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이 프로그

램을 계발했습니다. 부정적 사고를 긍정적 사고로 전환시키는 핵심 포인트를 저는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기화가 되지 않는 지식교육은 조직 속에 스며들 수 없음을 그동안의 교육을 통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인생의 목표대로 지식을 습득하도록 체계화한 것입니다. 방법은 먼저 인생 목표를 설정하게 하고, 로드맵을 작성, 목표에 따른 군 생활을 계획하고 실천 가능한 중간 목표, 주간계획서를 작성해 스스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뚜렷했습니다. 인생 목표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없는 병사들도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나서부터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3사관학교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재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서로 도와주고 이끌어주며 학습을 하게 되니 자신감이 쌓이고 인생목표를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게 까지 됩니다. 23만 명이라는 인원이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곳이 군대입니다. 이들만 잘 교육시키면 선진 병역문화 정착은 물론 인재대국으로의 길도 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길 : 감사합니다. 김 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대학에서도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없이 대학에 들어와 취업준비 하다가 졸업하는 대학생이 많은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1학년 때부터 정말 이런 목표지향적 자기 계발을 한다면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요. 교수와 학생의 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요.

박문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위원) : 김 위원님의 목표지향적 교육과 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암기(기억)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의 동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필요성을 깨달은 병사에게 목표가 주어지면 학습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동물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움직인다는 전제에는 방향성,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지구상에 많은 처세술 책이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목표를 설정해서 달성했다, 그 말 밖에 없거든요. 이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교육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저 역시 이 위원님의 말씀처럼 암기교육이 창의성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는 창의성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인간의 정신현상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암기, 즉 기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억은 여러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절차 기억.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고 있는 것, 즉 대소변 가리기, 옷 입고 걷기 등이 절차기억입니다. 그 다음에 형성되는 것이 신념기억입니다. 특히 종교적, 정치적 상황에서 형성되기 쉬우며, 강력한 감정을 동반합니다. 다음에 형성되는 기억이 교육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학습기억입니다. 학습기억은 언어학습부터 시작해 25살까지 주로 형성됩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연령별로 보았을 때 이 세 가지 기억의 비율입니다. 18살이라면 70%가 학습기억이 될 것입니다 대학생 쯤 되면. 절차기억, 신념기억, 학습기억이 구조화 됩니

인류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지식과 인성, 국제적 감각, 더 나아가서는 예지력까지 갖춘 인재의 양성.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글로벌 창의인재 육성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가면서부터는 학습 최소형, 현실 주도형 인간이냐, 학습 주도형 인간이냐에 따라 기억의 비율은 크게 달라집니다. 신념기억과 절차기억의 양은 한번 형성되면 거의 그대로 유지됩니다. 흔히 우리가 나이 들면 고지식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학습량이 줄어 학습기억의 양이 신념기억과 동일해져 오는 현상입니다. 학습기억의 양이 줄어들지 않도록 목표를 가지고 꾸준한 학습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학습기억이야말로 창의성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김영길 :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인간의 기억과 목표 지향성을 살펴보니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이 발견되는 군요. 뇌과학을 연구하고 계신 조장희 위원님의 의견도 여기서 들어보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조장희 (가천의과대학교 뇌과학연구소장, 위원) : 박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대학까지는 지식을 쌓는 공부를 해야 그것을 토대로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창조적인 일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리서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적 경쟁에서 이기려면 세계 최초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우물 안 개구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대학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 집중하는 교육중심 대학과 연구중심 대학으로 나눠 차별화하는 것이 창의성 교육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중심 대학에선 학사과정까지만 두고 교수도 잘 가르치는 것이 교수평가의 척도가 됩니다. 반면 연구중심 대학에는 석 · 박사 과정을 둡니다. 세계적인 연구가 무엇인지 방향을 아는 교수와 충분한 지식의 축적으로 준비가 된 학생이 만났을 때, 그 때 창의적인, 세계적인 연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덮어놓고 초등학교에서부터 창의, 창의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보여집니다. 창피한 얘기지만 한국에는 세계 100대 기술이 하나도 없어요. 일본에서 나라별 과학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종합과학보고서를 2007년에 발간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미국 90점, 일본 82점, 한국은 7점이에요. 대학교육을 빨리 개편하지 않으면 국제경쟁에서 한국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한국의 일부 연구원들은 연구보다 연구비 따는데 더 힘을 쏟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연구비 따오지 말고 연구만 하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연구비 따오는 연습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방향이 잘못 잡힌 겁니다. 연구를 제대로 해서 창의적이고 세계적인 논문을 쓰는 것이 연구원이 할 일인 것입니다.

김영길 : 오랜 경험에서 나온 조 위원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희가 창의적 교육의 방향을 잡는 데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교육계에 계신 이종각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종각 (강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위원) : 창의성이란 게 결국은 대학교 이상 대학원 교육에서 발현될 수 있다는 조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지적 결과물로서의 창의성이라면 특히 더욱 그러하겠지요.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의 상태, 지식을 탐구하는 태도, 지적인 탐구의 과정, 뭐 이런 의미에서의 창의성 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미국 유학생들의 박사학위 과정 중 탈락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한국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유대인이 13%로 제일 낮았고 45%인 한국이 제일 높았습니다. 연구자는 부모와 학교가 다 가르쳐주는, 먹여주는 학습에 의해 만들어진 수동적 학습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해설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교육에 부족한 것이 문제의식을 갖는 것. 이런 면에서 창의성이 부족한 게 아닌가하는 생각입니다. 주어진 질문에 답할 줄 아는 교육에서 질문 자체를 만들어낼 줄 아는 능력, 상황을 새롭게 읽을 줄 아는 능력을 키우는 창의교육이 초등학교에

입시가 모든 것을 좌우하는 우리나라에서 창의교육 대책의 핵심도 입시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의 관문을 창의력을 가진 학생이 유리하게 통과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돼야 초중고에서도 창의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서부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기억과 암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주입식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과 자기주도적 목표와 필요에 의해 학습된 기억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우리의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지식의 암기 교육과 수업, 평가 방식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창의교육이 요즘 다시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만, 20여 년 전부터 창의교육은 강조와 실패를 반복해왔습니다. 즉 학교에서 수업방법과 같은 테크닉을 바꾸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전반적 대환경이 창의성을 인정하고 투자하는 분위기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 외적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교육계 안에서만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발표된 5급 행정고시 선발제도의 변화는 창의교육 면에서도 상당히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어렸을 때 창의성을 보였다고 해서 어른이 되어 창의적 성과를 이뤄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식과 문제의식, 인내와 끈기, 열정과 같은 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 환경이 바뀔 수 있는 복합적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입시가 모든 것을 좌우하는 우리나라에서 창의교육 대책의 핵심도 입시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의 관문을 창의력을 가진 학생이 유리하게 통과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돼야 초중고에서도 창의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사교육대책입니다.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한 사교육대책의 일부(EBS 강의에서 70% 출제 등)는 단순 암기 혹은 반복학습을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의교육이라는 간판을 걸더라도 사실상 창의성 교육은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원선발 및 양상과정 또한 창의적이라고 이야기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선발의 객관성에 대한 요구가 강하다보니 창의적인 부분보다는 규격화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양성과정에서도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하며, 임용채널의 다양화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독서를 가장 하지 않는 직업군이 교사라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책을 읽지 않으면 창의교육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앞에서도 여러분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전인교육 회복, 독서교육 강화, 자기주도적 교육이라는 창의교육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교사도 학부모도 정부도 버릴 것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버리지 않고서는 새 것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김영길 : 이 위원님께서는 교육학자답게 교육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정모 위원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주실지 궁금합니다.

이정모 (성균관대학교 인지과학협동과정 명예교수, 위원) : 앞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미래교육기획위원회라는 이 기구에서 논의하는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교육이 일회적 프로젝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 정부를 넘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기구화해야

창의성이 왜 요구되느냐하는 점을 짚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돌발적이고 우발적 상황이 입력되면 인간의 뇌는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존의 학습된 기억을 새롭고 독특하게 조합해야 합니다. 이때 요구는 되는 것이 창의성입니다. 기억에 의지하되 옛날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기억을 조합하는 것, 이것이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본 창의성의 정의입니다.

한다는 것입니다. 창의성에 대한 모든 자료와 데이터가 집대성된 세계적 창의센터를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구에는 창의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개념화되고 변화되어 가는 지를 과학적,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부서, 연구를 토대로 정책적 제안을 하는 부서, 창의성 교육 전문가를 트레이닝 하는 부서, 학생들의 창의성을 키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서 등이 포함돼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창의성의 개념이 지금까지는 개인의 창의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앞으로는 개개인의 창의성이 잘 발현될 수 있는 사회, 문화,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것까지 창의성의 개념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저는 이 프로젝트가 창의성 교육을 집대성할 수 있도록 꾸준히 이어지길 바랍니다.

김영길 : 중요한 부분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김태완 원장님께서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원광연 위원님의 경험담을 한 번 들어보도록 하지요.

원광연 (KAIST 문화기술대학원장, 위원) : 이공계 측면에서 보면 창의성은 문제를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문제를 푸는 것은 누구나 노력을 하면 가능하지만 만들어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는 대학원 내에 문화기술대학원을 설립해 5년간 운영을 해왔습니다. 최근 하고 있는 실험은 우주를 소재로 한 뮤지컬입니다. 학생들이 뮤지컬을 하면서 예술적 성향도 키우고 실제 프로덕션으로 올리면서 기술적인 측면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예술과 영상, 과학, 기술이 융복합적인 분위기를 아이들은 어떻게 경험하는 지, 또 경험한 결과가 어떻게 발현되는 지를 실험하는 것입니다. 곧 뮤지컬이 무대에 올려지는데, 결과가 나오게 되면 위원회를 통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실험을 해오면서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은 창의성에는 도구적 측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좋은 도구가 주어지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창의성이 폭발하는 상황도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믿어지지 않으시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빌 게이츠가 했다면, 어떠세요. 믿음이 가실 겁니다. 1주일 전 빌 게이츠는 미래 인터넷의 제일 큰 시장은 교육시장일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인터넷은 정말 잘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인터넷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는 창의성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모티베이션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길 : 자, 그럼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배용 : 기억과 암기, 창의성이 오늘 화두가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가슴도 맞닿고 눈도 마주치면서, 이메일이 아닌 언어로서 전달되는 피드백의 교육현장도 우리가 파괴하거나 버리지 말고 지켜

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게 된 것도 백성들을 향해서 뭔가 해주고 싶은, 소통하고 싶은 사랑과 배려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런 역지사지의 봉사정신이 한글이라는 창조적 결과물로 발현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계문화와 첨단과학에만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쏠리지 않고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인문학자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고, 이렇게 균형 잡힌 판단을 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가 미래문명 발달에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박문호 : 창의성이 왜 요구되느냐하는 점을 짚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돌발적이고 우발적 상황이 입력되면 인간의 뇌는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존의 학습된 기억을 새롭고 독특하게 조합해야 합니다. 이때 요구는 되는 것이 창의성입니다. 기억에 의지하되 옛날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기억을 조합하는 것, 이것이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본 창의성의 정의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왜 이 시대는 창의적 인재를 필요로 할까요. IMF, 천안함사태, 지구온난화 같은 돌발적 상황은 한두 가지 변수로 컨트롤될 문제가 아닙니다. 엄청난, 창의적 지성인들이 모여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판단력의 뿌리는 감정이라는 것이 신경과학계의 이론입니다. 감성지향적 교육이 극대화되면 고령화, 저출산, 사회적 갈등과 같은 현실적 사회문제도 통합적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창업도 요구됩니다. 대량 청년실업이라든지 하는 삶의 질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구상에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스타일, 새로운 방향의 벤처붐이 일어나야한다고 봅니다. 물질을 만드는, 도구를 만드는 벤처가 아닌 삶의 총체적 디자인이 가능한 문화적 벤처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김영길 : 마무리를 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미래교육의 방향이 인력교육에서 인간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포괄적으로 인력교육이라는 것은 맨파워의 개념입니다. 이는 어찌 보면 사람보다 기업이나 재정이 우위가 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세계는 경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가 되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 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입시를 뛰어넘는 창의성 교육이 정말 필요할 것입니다. 이정모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창의성 연구소, 아시안 인스티튜트 크리에이티비티(Asian Institute for Creativity)도 구체화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완 원장님께서 마무리 해 주시지요.

김태완 (KEDI 원장) : 저는 이 위원회가 집현전과 같은 역할을 담당했으면 합니다. 전공분야를 넘어 자유롭게 토론하고 정리해 사회에 전달하는 역할 말입니다. 보다 다양한 분야로 위원을 보강해 나가면서 창의성 교육을 논하다보면 창의교육에 대한 이론과 방향이 잡히고, 우리사회 전체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긴 시간 좋은 의견 주신 김영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한국교육개발원(KEDI) 미래교육기획위원회**는 선진일류교육 · 인재대국 실현이라는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부응하고,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이라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책무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학계 및 정부 · 민간의 사회인사 18인으로 구성했다. 워크숍, 월례특강, 집담회 등을 통해 논의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미래교육기획위원회는 선진일류교육 ·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아젠더 발굴 및 대안 제시, 한국의 중 · 장기적 교육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해 나갈 예정이다.

유럽연합 국가들의 대학교육정책 변화 방향

글_ 오정은 IOM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유럽 대학 사이에 대대적인 변혁이 시작되었다. 이미 1980년대부터 유럽 대학가에선 오랜 전통을 자랑하던 유럽 대학들이 세계무대에서 미국 대학들과의 경쟁에 뒤처지고, 대학 경쟁력 약화가 유럽의 두뇌유출을 심화시킨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불안감이 21세기를 맞이하면서 대학을 개혁하자는 주장으로 발전되었기 때문이다.

I. 유럽 공동의 대학교육정책 등장

20세기 말까지 유럽에서 대학교육은 공공재의 성격이 강했다. 미국과 앵글로-색슨의 학풍을 공유하는 섬나라 영국을 제외하면,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학 운영비용의 대부분을 국고로 지원하였다. 미국의 대학들이 민간 기업과 산학협력을 통해 학교 재정을 확충하고, 시장의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교육과 연구 활동을 할 때, 유럽 대학들은 정부 보조금에 의지하면서 상아탑 속에서 이른바 '순수학문' 에 열중하였다. 동시에 저렴한 등록금을 유지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유럽 대학 사이에 대대적인 변혁이 시작되었다. 이미 1980년대부터 유럽 대학가에선 오랜 전통을 자랑하던 유럽 대학들이 세계무대에서 미국 대학들과의 경쟁에 뒤처지고, 대학 경쟁력 약화가 유럽의 두뇌유출을 심화시킨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불안감이 21세기를 맞이하면서 대학을 개혁하자는 주장으로 발전되었기 때문이다. 21세기의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럽 대학들이 세계무대에서 인정받는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해외의 우수 학생을 끌어들일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변해야 한다는 여론은 설득력이 있었다. 나아가 세계무대에서 라이벌인 미국 대학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개별국가

대학 개혁을 위한 유럽 차원의 구체적인 공동 행동은 1998년부터 시작되었다. 1998년 5월 파리 소르본 대학 개교기념식2)에 참석한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고등교육담당 장관들이 세계무대에서 유럽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럽 대학들이 국경을 초월하여 긴밀하게 협력하자고 합의하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차원이 아닌, 유럽 공동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에 유럽 지도층은 동의했다. 요컨대, 21세기를 앞두고 유럽 각국은 대학에 유럽화[1] 논리와 시장 논리를 도입하였다.

대학 개혁을 위한 유럽 차원의 구체적인 공동 행동은 1998년부터 시작되었다. 1998년 5월 파리 소르본 대학 개교기념식[2]에 참석한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고등교육담당 장관들이 세계무대에서 유럽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럽 대학들이 국경을 초월하여 긴밀하게 협력하자고 합의하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소르본선언이라 불리는 이 선언문은 유럽 대학들의 긴밀한 협력이 가능하도록, 유럽에 '비교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유럽 차원의 학제를 도입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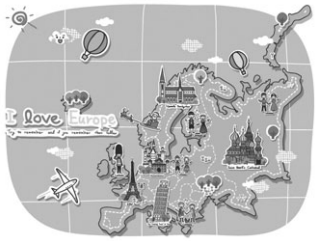
소르본선언 이전까지는 유럽에서 대학의 수업연한이나 학위명이 나라마다 달랐다. 각국 정부가 교육이 과거 세대가 이룩한 전통을 현재와 미래에 전달하여 국민들에게 국가 정체성을 형성, 유지, 발전시키는 데에 기여한다는 점과, 국가 구성원이 직업을 구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면서 나라의 경제 · 사회 발전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주요 수단이라는 사실에 집착했기 때문이다. 즉, 교육을 한 나라의 존립과 번영에 직결되는 민감한 분야로 간주하면서 교육의 제도와 내용에서 자국만의 고유한 특징을 유지하려 했었다. 그러나 서로 다른 학제로는 교육의 내용과 수준을 비교하기 힘들었고, 대학의 국제교류와 협력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외국 학생들에게 유럽 각국의 독특한 학제는 복잡해 보였고, 이미 학부과정에서 일정기간 학업을 이수하고 석 · 박사 과정 진학을 고려하는 우수 학생들은 자신이 기존에 이수한 교육과정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염려했기 때문에, 유럽 각국의 상이한 대학제도는 외국학생들이 유럽에서 석 · 박사 과정에 진학하는 것을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였다. 따라서 유럽에서 각 국의 대학제도를 통일시키는 것은 매우 시급한 당면과제였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나온 소르본선언은 다음의 네 가지 목표를 표명했다:

- 유럽 내 대학생 교류를 촉진하여 유럽 대학졸업자가 통합된 유럽 노동시장에 쉽게 흡수될 수 있도록 한다.
- 유럽 고등교육기관 사이의 협력을 증진한다.
- 각국 대학에서 이수한 수업에 대한 비교 인증을 수월하게 한다.
- 유럽 이외 지역에서 유럽 대학 제도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여 세계의 우수한 인재를 적극 유럽으로 유치한다.

1) 유럽화의 정의 대해서는 Jarle Trondal, "The Europeanisation of Research and Higher Education policies: some reflections," European integration online papers, Vol. 6, No. 12(2002), http://eiop.or.at/eiop/texte/2002-012.htm(2010년 7월 30일 검색) 참조.
2) 볼로냐 프로세스를 소개하는 다수의 논문들이 1998년 행사를 소르본 대학 개교 800주년 기념식이라고 기술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 기술된 글을 계속적으로 재인용하면서 일어난 현상으로 보인다. 파리의 소르본 대학의 공식적인 개교는 1253년 로베르 드 소르본(Robert de Sorbonne)신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당시 행사는 745주년 기념식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볼로냐 프로세스는 유럽 대학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소위 순수과학이라 불리는 기초학문을 존중하던 학풍은 시장에서 즉시 사용될 수 있는 실용적인 응용과학을 우대하는 분위기로 변했다. 특정 주제를 정해 독서, 토론 및 논술과정을 거쳐 진지하게 답을 찾아가던 수업 중 상당부분이 강의와 필기시험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영미식 수업방식으로 대체되었다. 무엇보다도 볼로냐 학제에 따라 유럽고등교육지역 전역에서 대학 1년 과정이 60ECTS5) 로 규격화 되어, 국가별로 다양하게 운영되던 대학과정에 유럽 차원의 통일성이 나타나게 되었다.



소르본선언 발표 이후 소르본 정신에 공감하는 유럽 국가들이 늘어났다. 그리고 이듬해인 1999년에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소르본선언이 추구하는 유럽차원의 대학협력에 동참의사를 표시한 유럽 29개국[3] 고등교육담당 장관들이 모여 2010년까지 유럽에 통일된 대학제도를 도입하고 각국의 협력을 공고히 하여 유럽에 하나의 유럽고등교육지역(European Higher Education Area: EHEA)을 형성하면서 유럽 대학 개혁을 완성한다는 볼로냐선언을 발표했다. 볼로냐선언은 단순한 학제 변경을 넘어 대학의 교육내용과 경영방식에 대한 전면적이고 장기적인 개혁을 추구했다. 그런 의미에서 볼로냐선언에 따라 시작된 유럽의 대학개혁운동은 흔히 '볼로냐 개혁' 혹은 '볼로냐 프로세스' 라고 불린다.

Ⅱ. 볼로냐 프로세스

볼로냐선언은 소르본선언의 목적을 계승하면서 이전의 발표문 내용을 확대 · 발전시켜, 유럽 대학제도의 '매력(attractiveness)' 과 '경쟁력(competitiveness)' 을 향상시키는 것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리고 유럽의 통일된 대학학제의 형태도 밝혔다. 볼로냐선언이 밝힌 유럽 대학의 개혁목표는 다음의 6가지이다:

- 나라마다 다른 학위명칭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한다.
- 2단계로 구성된 유럽대학 학제를 도입한다.
- 볼로냐체제에 가입한 국가의 모든 대학들 사이에 통용될 수 있는 대학 학점제도를 도입한다.
- 대학생, 교수, 연구자들의 유럽대학 간 이동을 활성화한다.
- 대학교육의 질적 기준 마련을 위한 협력을 촉진하다.
- 유럽차원의 대학교육을 촉진한다.

이 목표 중 2단계로 구성된 대학학제 부분이 특히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학사 3년, 석사 2년을 기본으로 하는 3+2 학제의 도입은 유럽인들이 개혁의 영향을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실감하게 하는 부분이다. 볼로냐 프로세스 시작 당시 유럽의 일반 대중들 중에는 볼로냐 개혁을 새로운 대학 학제의 도입으로 단순화하여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볼로냐선언 이후, 유럽 각국의 장관들은 볼로냐 개혁의 성과를 진단하면서 개혁의 진행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매 2년마다 모임을 가졌다. 2001, 2003, 2005, 2007, 2009년의 유럽 고등교육장관회의를 거치면서 볼로냐 개혁의 참가자, 개혁의 목표 및 내용이 지속적으로 확대 · 발전했다. 예를 들면, 2001년 체코 프라하 고등교육장관회의에서는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터키가 새로이 볼로냐 프로세스에 가입하여 회원국이 32개국으로 증가했

3)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덴마크, 스페인,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노르웨이,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영국, 체코,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위스.

고, 더불어 유럽 고등교육분야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인 UNESCO 산하 유럽고등교육센터(European Center for Higher Education), 유럽대학협회(European University Association: EUA), 유럽고등교육기관협회(European Association of Institutions in Higher Education: EURASHE), 유럽 학생연합(National Unions students in Europe),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그리고 EU집행위원회에게 조언자 자격이 부여되어 이들 단체가 볼로냐 개혁에 공식적으로 동참하게 되었다.[4] 2003년 독일 베를린회의에서는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연방공화국, 안도라, 러시아, 교황청 등 8개국이 새로이 볼로냐 프로세스에 가입하여 볼로냐체제 가입국이 40개국으로 늘어났고, 학사 3년, 석사 2년의 볼로냐 학제에 박사과정이 추가되었다. 박사과정은 연구원을 양성하는 과정으로, 유럽 고등교육정책은 연구개발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도되었다. 2005년 노르웨이 베르겐회의에서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아, 몰도바, 우크라이나가 새로이 볼로냐체제에 합류하여 볼로냐 개혁에 동참하는 나라는 45개국으로 늘었다. 그리고 EU집행위원회가 기존에 조언자 자격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식 회원의 자격을 얻게 되어 그동안 각국 정부가 중심이 되어 정부간주의 원칙으로 운영되던 볼로냐 프로세스가 유럽연합(EU)이라는 초국가기구가 이끌어가는 효율적인 개혁운동으로 변모되었다. 2007년 영국 런던회의에서는 세르비아로부터 분리 독립한 몬테네그로가 가입하여 회원국이 46개국으로 늘었으며, 볼로냐체제의 세계화 전략이 핵심목표로 강조되었다. 2010년 볼로냐 프로세스 완성을 앞두고 개최된 마지막 정례 장관회담이었던 2009년 벨기에 뢰벤/루벵회의에서는 2010년 이후 볼로냐 개혁에 따라 통일된 대학정책을 공유하는 유럽국가들로 구성된 유럽고등교육지역에서의 2020년 미래상을 밝히며 평생교육, 학생중심 교육, 학생교류 증진, 취업률 향상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Ⅲ. 볼로냐 프로세스의 효과

볼로냐 프로세스는 유럽 대학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소위 순수과학이라 불리는 기초학문을 존중하던 학풍은 시장에서 즉시 사용될 수 있는 실용적인 응용과학을 우대하는 분위기로 변했다. 특정 주제를 정해 독서, 토론 및 논술과정을 거쳐 진지하게 답을 찾아가던 수업 중 상당부분이 강의와 필기시험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영미식 수업방식으로 대체되었다. 무엇보다도 볼로냐 학제에 따라 유럽고등교육지역 전역에서 대학 1년 과정이 60ECTS[5] 로 규격화 되어, 국가별로 다양하게 운영되던 대학과정에 유럽 차원의 통일성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유럽 지도자들이 합의하고 의도한 바였지만, 변화를 접하는 유럽 각국에서는 볼로냐 프로세스 기간 내내 볼로냐 개혁 반대운동이 끊이지 않았다. 볼로냐 개혁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크게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교육분야에 무리하게 경제원리를 적용하였다는 것이다. Lorenz(2006)는 볼로냐 프로세스의 아이디어가 기본적으로 대학교육에 규모의 경제 논리를 도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WTO가 효율성을 내세워 각국 경제정책에 세계적인 통일된 규칙을 적용하려 하듯, 볼로냐 프로세스 참가국들이 유럽에서 대학을 효율적으로 경영한다

4) "Towards the European Higher Education Area," Prague Communiqué(2001년 5월 19일).
5) European Credit Transfer System의 약자로 유럽 대학 간 학점 상호 인증의 기준이 되는 수업시간을 의미한다. 볼로냐 학제를 공유하는 유럽고등교육지역에서 1년 과정은 60ECTS에 해당한다. 1 ECTS는 약 25~30시간의 노력이 요구되는 수업으로, 해당 시간에는 교실 강의뿐만 아니라 도서관에서의 자료 수집, 세미나 참석, 실험실 혹은 외부 기관에서의 실습 등이 모두 포함된다.

는 미명하에 다양한 각국 대학을 유럽차원에서 규격화 시켰고, 이 과정에서 각국 대학사회의 특수한 입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신자유주의 논리로 개혁이 진행되었기에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이 비판의 요지다.

둘째, 유럽의 교육은 전통적으로 청소년기부터 직업훈련과 이론탐색을 철저히 구분하였는데, 그러한 오랜 전통을 무시하고 급작스럽게 고등교육 단계에서 훈련과 이론학습의 상호 교차수업을 허용하여, 각 영역에서 일대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볼로냐 학제는 학사 3년, 석사 2년 과정을 설정했는데, 직업훈련 과정은 학사에 해당하는 3년 과정 이수 후, 사실상 더 이상의 수업과정이 불필요한 반면, 이론탐색을 하는 학문영역에서는 3년 과정이 매우 짧다고 생각하여 이수 후 석사과정에 진학하는 학생이 많다. 그런데 볼로냐 프로세스를 통해 과거 직업훈련에 해당하는 과정이 대학의 교육과정에 포함되고, 볼로냐 학제가 전공에 해당되는 3년 과정 이수 후 전공을 바꾸어 석사과정에 진학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대학에서 직업훈련에 해당하는 3년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곧바로 취업을 하는 대신 석사과정 진학을 고민하는 상황에 처했다.

셋째, 1년 과정을 60ECTS로 편성하면서 과거 교육제도에서 2년에 걸쳐 배우던 수업이 1년 과정으로, 혹은 1학기 과목이 2학기로 늘어나는 등 변화가 왔는데, 오랜 기간 휴학을 하고 학교에 돌아온 학생들은 과거 이수한 과목에 대해 일관된 원칙으로 학점 인정을 받지 못해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넷째, 볼로냐 개혁 시행 이후 유럽 대륙의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볼로냐 개혁이 영미식 대학문화를 지향하면서, 무료에 가까운 저렴한 등록금 정책을 펴던 대학들이 영미권 대학처럼 등록금을 높게 책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유럽에서 공공재로 간주되던 대학교육이 머지않아 부자들에게만 접근이 허용되는 성역처럼 변할 것이라는 우려는 볼로냐 프로세스가 비난받는 주된 원인이다.

다섯째, 볼로냐 개혁 참가국의 정부가 국내 여론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유럽차원의 개혁운동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볼로냐선언은 국제법상 조약이나 협정과 같이 법적 구속력을 갖춘 것이 아니므로 볼로냐 개혁은 각국 정부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진행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각국 정부는 국내 여론 수렴과정이라는 민주적 절차를 따라야 하는 의무가 없었고, top-down 방식으로 대학개혁을 추진하곤 했다. 각국 정부는 국제화시대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유럽지역 소속 국가로서, 유럽차원의 개혁에 동참하는 것이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행위자라는 명분으로 국내 반론을 무마시켰다.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볼로냐 프로세스는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2010년 현재 볼로냐 프로세스 참가국 고등교육기관의 약 95%가 학사, 석사로 구분되는 볼로냐 학제를 도입한 상태다. 볼로냐 프로세스가 참가국의 고등교육의 질을 향상시켰다는 믿음도 확산되고 있다. EU 27개 회원국과 크로아티아,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터키의 고등교육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2007년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의 조사에 의하면, 이들의 약 절반정도인 44%가 새로 도입된 볼로냐 학제가 고등교육의 질을 향상시켰고, 또 앞으로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6]

Ⅳ. 유럽연합 국가들의 대학교육정책 전망

2009년 뢰벤/루벵회의에서 유럽 고등교육장관들은

6) The Gallup Organization, Survey on Higher Education Reforms: Survey among teaching professionals i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n the 27 Member States, and Croatia, Iceland, Norway and Turkey, Flash Eurobarometer Series No. 198(Luxembourg: European Commission, 2007), p. 5.

2010년 종료를 앞둔 볼로냐 프로세스의 정신을 계승하여, 2020년까지 지속되는 유럽 차원의 대학교육정책의 장기 목표를 새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2010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다시 모인 유럽의 고등교육장관들은 유럽에서 학문의 자유 보장, 유럽차원의 대학교육 질 보장, 대학교육 기회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다페스트-비엔나 선언을 발표했다. 1999년 볼로냐선언 이후 지난 10년간의 볼로냐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10년간 유럽의 고등교육장관들은 매 2년마다 모임을 갖고 유럽차원에서 대학교육정책을 조율할 예정이다. 2012년 루마니아 부쿠레슈티회담에서 2020년까지의 유럽고등교육지역 대학교육 장기계획 구체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차기 10년의 유럽 대학정책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앞으로 유럽 각국의 대학정책의 방향이 유럽차원에서 결정된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1950년대부터 계속되었던 유럽통합 과정에서, 교육은 민감한 영역으로 간주되어 오랫동안 논외에 있었지만, 지난 10여년 볼로냐 프로세스 진행과정에서 유럽의 고등교육은 사실상 유럽차원의 정책영역에 포함되었다. 유럽연합 국가들이 국제화 · 세계화의 조류 속에 자국 대학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유럽차원의 공고한 협력체계 구축에 공을 들였고, 이제는 개별 행동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각국의 대학정책은 긴밀하게 연결되었다. 유럽연합 국가들의 대학교육정책은 유럽차원의 고등교육정책과 맥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유럽연합 국가들은 예외 없이 시장성 있는 실용학문 확대, 졸업생의 취업률 향상, 학생이동과 공동학위제와 같은 국제교류 확대, 교육과 연구개발과 혁신의 유기적 연대라는 유럽연합의 고등교육정책의 기조를 자국의 대학교육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수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오정은(2008). "EU집행위원회의 볼로냐 프로세스 참여: 유럽고등교육정책의 유럽화," 『유럽연구』, 제 26권, 제 2호, pp. 317-336.

오정은(2009). "유럽연합 교육정책의 현황과 전망," 『민족연구』, 통권 제 39호, pp. 69-86.

Corbett, Anne(2003) "Ideas, Institutions and Policy Entrepreneurs: towards a New History of Higher Education in the European Community," European Journal of Education, Vol. 38, No. 3, pp. 315-330.

Croché, Sarah(2006) "Qui pilote le processus de Bologne," Éducation et societés, No. 18, pp. 203-217.

The Gallup Organization, Survey on Higher Education Reforms: Survey among teaching professionals i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n the 27 Member States, and Croatia, Iceland, Norway and Turkey, Flash Eurobarometer Series No. 198(Luxembourg: European Commission, 2007)

Lorenz, Chris(2006) "Will the Universities Survive the European Integration? Higher Educational Policies in the EU and in the Netherlands before and after the Bologna Declaration," Sociologia Internationalis, No. 44, pp. 123-151.

Pepin, Luce(2007) Histoire de la coopération européenne dans le domaine de l'éducation et de la formation. Luxembourg: Communautés européennes.

Trondal, Jarle(2002) "The Europeanisation of Research and Higher Education policies: some reflections," European integration online papers, Vol. 6, No. 12. (http://eiop.or.at/eiop/texte/2002-012.htm).

"Joint declaration of the European Ministers of Education," The Bologna Declaration(1999년 6월 19일)

"Towards the European Higher Education Area," Prague Communiqué(2001년 5월 19일).

"Realising the European Higher Education Area," Berlin Communiqué(2003년 9월 19일).

"The European Higher Education Area – Achieving the Goals," Bergen Communique(2005년 5월 19-20일).

"Towards the European Higher Education Area: responding to challenges in a globalised world," London Communiqué(2007년 5월 18일).

"The Bologna Process 2020 – The European Higher Education Area in the new decade," Leuven/Louvain-la-Neuve Communiqué(2009년 4월 28-29).

"On the European Higher Education Area," Budapest-Vienna Declaration(2010년 3월 12일).

오바마정부의 개혁의 핵심은 '대학교육'

글_ 류미경[1] 미국 고등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

미국은 교육개혁을 통해 국가의 위기에 대처하려는 경향이 있다. 1960년대 세계 최초의 스퍼트닉 인공위성이 소련에 의해 발사되었을 때나, 80년대 일본이 새 경제강국으로 부상하였을 때 미국은 대규모 교육개혁을 시도하였다. 오바마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경제정책 못지않게 교육개혁에 대규모 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경제회생'을 뛰어넘는 '미국의 회생'이라는 그의 야심찬 개혁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역사를 통해 보면 미국은 교육개혁을 통해 국가의 위기에 대처하려는 경향이 있다. 1960년대 세계 최초의 스퍼트닉 인공위성이 소련에 의해 발사되었을 때나, 80년대 일본이 새 경제강국으로 부상하였을 때 미국은 대규모 교육개혁을 시도하였다. 이와 유사한 상황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지금의 위기는 여러 가지 원인에 근거하고 있는데, 우선 글로벌 경제시대에 맞는 고급인력이 부족하다는 미국 기업들의 불만과 새로운 경제적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또한 오랜 이라크전쟁으로 인해 악화되어 온 국민의 여론, 급기야 2008년 가을 금융경제의 파산으로 미국이 1930년대 경제 대공황에 버금가는 경제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미국의 국제적 위상에 대한 적신호가 켜졌다.

역사상 최악이라고 할만 한 경제적 · 정치적 여건을 부시 정권으로부터 물려받으며 취임한 오바마 대통령이 금융기관 구제, 주택경기 부양 등 시급한 경제회복정책에 초점을 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경제정책 못지않게 교육개혁에 대규모 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경제회생'을 뛰어 넘는 '미국의 회생'이라는 그

1) The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에서 선정한 '미국 고등교육의 차세대 주자 10인'으로 선정되었다. 이 글은 저자의 교육과학기술부 발간 이슈 페이퍼(2010년 1월)를 보완한 것임.
저자는 미국 고등교육기관 협의체인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에서 고등교육정책 연구소 부소장으로서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대학 교육정책을 자문하고 연구하고 있다. 최근 저서(Minorities in Higher Education 2010)는 미국 교육의 최대의 난제인 소수민족의 교육 불평등 문제를 분석하였다.

글로벌 경제시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지식' 이다. 교육은 더 나은 삶을 보장해 주는 필수조건이다. 지금 우리보다 교육에 앞서 가는 국가가 내일의 경쟁에서 우리를 압도할 것이다.

의 야심찬 개혁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후 최초의 신년 국회연설을 통해 교육선진화 의지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In a global economy where the most valuable skill you can sell is your knowledge, a good education is no longer just a pathway to opportunity? it is a pre-requisite. The countries that out-teach us today will out-compete us tomorrow.
- President Barack Obama, Feb.24, 2009
[글로벌 경제시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지식' 이다. 교육은 더 나은 삶을 보장해 주는 필수조건이다. 지금 우리보다 교육에 앞서 가는 국가가 내일의 경쟁에서 우리를 압도할 것이다.]

국가재건을 목표로 삼고 있는 오바마 정부의 교육개혁 지원은 역사상 전례가 없는 수준이다(약 $100 billion). 더욱 중요한 점은 과거의 교육개혁안이 초·중등교육 위주였던 것과 달리 오바마 정부의 교육개혁의 핵심은 대학개혁에 있다.

특히 오바마 정부의 교육자문팀은 미국교육의 위기를 국민들에게 설득하기 위해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교육지표를 인용하였다.[2] 즉, 미국의 장년층 세대(55-64세)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교육 수혜율을 가지고 있지만, 젊은 인구층(25-34세)의 수혜율은 10위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 앞으로 닥칠 미국의 위기를 반영하고 있다는 내용이 요지이다. OECD 교육지표는 현재 미국사회에서 교육의 문제가 논의될 때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교육통계이고, 오바마 정부는 상위권 국가 중의 하나인 한국을 자주 언급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의 목표는 한 마디로 2020년까지 OECD 평가의 대학교육 수혜율에서 세계 정상의 위치를 탈환하는 것이다. 현재 1위인 캐나다의 대학교육 수혜율이 56%인 것을 감안해서 일부 전문가들은 60%로 미국의 목표를 세우기도 하는데,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수량적 목표에 집착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내실 있는 대학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개혁내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분명한 점은 미국 역사에서 지금처럼 대학교육 개혁 논의가 국가적 차원에서 활발하였던 전례가 없다.

그렇다면 오바마의 개혁안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 간단히 말해서 국민들의 대학교육 수혜율을 확대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오바마 정부의 전략을 두 가지 영역으로 크게 구분할 수

2)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2009, Education at a Glance, Paris,France: TheAuthor.

있는데, 대학 교육기회의 확대와 교육성과의 제고(Improving Access to and Success in College)이다.

I. 대학교육 기회의 확대와 균등화

미국에서도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교육기회나 성취결과에 격차가 크다. 특히 교육성취 결과가 저조한 부류는 대부분 빈곤층이거나 흑인 또는 히스패닉 등 유색인종 학생들인데,[3] 학계에서는 이들의 저조한 대학 진학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즉, 학업능력이 중·고등교육 과정에서 뒤처지거나(academic factor), 대학교육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financial factor)이다. 물론 소수민족은 대부분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가지는 경향이 있지만, 오바마 정부는 특히 후자의 문제가 비교적 단기간에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이 영역에 초점을 두고 있다.

1. 빈곤층 대상 장학금제도 확충

매년 이어지는 대학 등록금 인상 파동으로 정부나 국회 그리고 일반대중은 대학(특히 주립 4년제 대학)들이 어떻게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또 등록금이 인상되는 만큼 학생들이 받는 교육수준도 향상되고 있는지, 한마디로 계속되는 등록금 인상이 정당한 것인지 문제제기를 해오고 있다.

대학등록금이 연속해서 인상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주정부 지원의 축소로 대학기관의 등록금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2001년 경제 침체이후 대부분의 주정부가 재정적자에 시달려 왔는데 그 피해로부터 회복되기도 전에 닥친 2008년의 경제위기는 극심한 주 정부 재정적자를 초래하였다. 주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주립대학들의 타격은 전례가 없는 심각한 수준이지만 대학에 입학하려는 학생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서 부족한 재정을 등록금 인상으로 부분 충족하고 있는 추세이다.

오바마 정부는 등록금 인상으로 가장 피해가 많을 저소득층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빈곤층 대상의 장학금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Pell Grants의 수혜 액수를 최근 확대시켰고 매년 물가인상률 이상으로 장학금 수혜액을 증폭시킬 계획이다. 학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크게 환영받고 있는 이 방침은 학생 개인당 최대 수혜액을 $5,350으로 올리게 되는데, 이는 거의 30년 만에 처음 보는 수준의 증가폭이다. 평균 가정 연소득이 $40,000 이하인 학생들이면 거의 모두 이 장학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교육비용 세금혜택제도의 확충

등록금을 포함해서 기숙사, 책, 교통비 등 기타 대학비용을 개인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세금혜택제도(Education Tax Credit)는 1998년에 처음 시행되었는데, 오바마 정부가 이를 확대하여 최대 $2,500까지 4년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허용하였다. 이 제도는 주로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Pell Grants의 혜택을 받을 만큼 빈곤하지는 않지만 대학비용을 모두 감당할 만큼 넉넉하지도 못한 중산층 가정의 학생들에 대한 제도적 배려인 것이다. 또한, Pell Grants는 학부 학생들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교육비 세금혜택제도는 대학원생들에게도 적용된다.

3. 학자금 융자제도의 개선

그동안 연방정부의 보호 하에 일반 은행들이 연방정부의 교육융자 프로그램(Federal Family Education Loan Program: FFELP)을 운용하여 많은 수익을 올려 왔다. 또 최근 몇 년간 융자제도 운용에 있어서 은행과 일부 대학

3) 대학 적령인구인 18-24세 인구 중 대학에 재학 중인 비율에서 인종간 격차가 크다. 2008년의 통계를 보면, 아시안 63%, 백인 45%, 흑인 34%, 그리고 히스패닉 28%이다(Ryu, M., 2010, Minorities in Higher Education 2010, Washington, D. C.: AmericanCouncilonEducation).

현재 미국에서 가장 고심하고 있는 교육문제는 대학 졸업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어서 오바마 정부의 관심이 이것에 집중되어 있다. 미국대학이 양적으로 팽창하고 학생들의 배경이 다양해지면서, 4년 교육과정을 4년에 마치는 전통적인 모델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과의 유착비리가 밝혀져 사회적 비판을 받았다. 오바마 정부는 FFELP 프로그램을 전면 폐지하고 연방정부가 직접 학자금 융자제도를 운영한다는 획기적인 정책을 시작하였다. 오바마 정부는 이 프로그램의 폐지로 절감되는 비용이 약 $87 billion이라고 추정하고, Pell Grants를 확대하는 데 필요한 추가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4. 학자금 지원 신청과정의 간소화

장학금이나 교육비 융자를 신청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비효과적이라는 비난이 계속되어 왔다.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저소득층이나 유색인종 학생들의 대학진학 의욕이 낮은 이유 중의 하나가 대학비용에 관련된 것인데, 이러한 배경의 학생들은 특히 장학금이나 학자금 융자제도에 대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부족하고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신청서류(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Financial Aid: FAFSA)는 연말 세무보고 만큼이나 복잡해서 주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이 학자금 신청을 포기하거나 대학진학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특히 저소득 소수민족 가정에 많이 몰려 있어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오바마 정부는 장학금과 융자제도 신청서류와 과정을 대폭 간소화하여 2010년 7월부터 적용한다. 오바마 정부는 또한 대학이 학자지원금 예상 액수를 개별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주어서, 본인들의 대학교육 비용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였다.

5. 국군 장병 교육비용 지원

이라크 전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복귀하는 전역 장병들이 사회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실상 대학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가 2009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인이 주립대학을 선택하는 경우 비용이 전액 보조되고 사립대학을 지원하면 그 주의 주립대학 비용만큼 보조를 받을 수 있다(일부 사립대학에서는 주 정부 지원액에 상응하는 추가지원을 제공한다). 제2차 대전 직후 이러한 목적의 제도가 처음 시행되었는데(G.I. Bill), 미국이 대학교육을 대폭 확장하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오바마 정부의 지원책은 그 혜택의 규모가 더욱 확대된 것이어서 사회적으로 호응이 높다.

Ⅱ. 대학교육의 성과 제고

현재 미국에서 가장 고심하고 있는 교육문제는 대학 졸업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어서 오바마 정부의 관심이 이것에 집중되어 있다. 미국대학이 양적으로 팽창하고 학생들의 배경이 다양해지면서, 4년 교육과정을 4년에 마치는 전통적인 모델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더구나 학생들의 대학 간 전·편입(Transfer)이 매우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 대학에 입학해서 교육과정을 마쳐 그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4년제 대학에 입학한 학생 가운데

세 명 중 한 명은 2개 이상의 대학에 적을 두는 것으로 밝혀졌다. 물론 학생들의 기관 간 이동은 대학졸업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2년제 대학 입학생들이 4년제 편입을 통해 학사학위를 이수할 확률은 처음부터 4년제 대학에 입학한 동료들에 비해 매우 낮다.

현재 4년제 학사과정에 입학한 학생이 6년 이내에 졸업하는 비율이 60%에 그치고 있어서,[4] 오바마 정부는 졸업률 제고가 가장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그리하여 "대학 졸업 개혁안"(The American Graduation Initiative)이라고 불리는 새 제도를 통해서 오바마 정부는 2년제 전문대학(Community Colleges)에 집중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전문대학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 대학 신입생의 절반 정도가 4년제 대학이 아닌 전문대학에 입학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대학을 개선하지 않고는 미국의 대학교육의 수혜율을 제고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오바마 정부는 2020년까지 전문대학 졸업생 수를 5백만 명 추가시킨다는 것이 목표이다. 현재 전문대학 졸업생 수는 매년 70만 명 정도인데, 10년간 매년 50만 명이 더 배출되어야 하는 셈이다. 전문대학 학생들의 졸업률은 4년제 대학생들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이다(60% 대비 36%). 전문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빈곤층, 유색인종, 성인 학생들이기 때문에 졸업률을 제고하는 것은 4년제 대학에 비해 당연히 더욱 어려운 과제이다.

오바마 정부는 또한 주정부의 교육개혁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원래 대학교육 운영의 책임은 각 50개주 정부에 있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직접 대학을 통제하기 보다는 간접적으로 주정부를 통해 개혁안을 권장하려는 목표로 최근 "Race to the Top"이라는 $4 billion 규모의 50개 주 경합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5] 연방정부 교육부는 다른 주에 개혁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주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계획인데, 그 선정의 준거를 네 가지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아래에 소개한 바와 같이 네 가지 평가영역 중에서 교육의 지방자치제 원칙 때문에 반대가 심해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시행될 수 없었던 학생 개인의 학업성취 데이터 시스템 수립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생의 교육성취를 평가하는 접근방식이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전체 교육제도를 망라하는 총괄적 방식이라는 점, 그리고 더 나아가 취업시장간의 연계까지도 고려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첫째, 대학에 진학해서 글로벌 경제가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데 성공적일 수 있도록 중·고등 교과과정의 질을 제고하고 정기적인 학생평가제도를 시행한다(즉 전체 교육 시스템을 통틀어서 교과과정과 평가의 기준이 통일된 기준 하에서 연계되게 하는데, 최종 교육결과의 목표는 글로벌 경제시대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에 둔다).

둘째, 학생들의 성취도를 평가하는 데이터 시스템을 수립해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와 행정가들에게 교수학습효과를 향상시키고 학생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계속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기 위한 인센티브와 보상제도를 시행한다.

넷째, 특별히 학업성취도가 낮은 문제 학교들을 중점적으로 지원, 개선한다.

두 번째 기준인 개별 학생 정보시스템 구축은 수년간 미국 교육계가 논쟁을 벌여온 사항인데, 특히 한국교육계에 시사한 바가 많다고 판단하여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다.

4) 4년제 학사과정의 졸업률을 기준으로 하는데, 입학생 수 대비 6년 안에 졸업하는 학생 수로 계산된다. 미국 학생들의 4년 이내 졸업률이 저조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6년 졸업률로 평가기준이 변화 되었는데, 최근에는 8년으로까지 연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5) www.ed.gov/programs/racetothetop/index.html

오바마 정부는 또한 주정부의 교육개혁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원래 대학교육 운영의 책임은 각 50개주 정부에 있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직접 대학을 통제하기 보다는 간접적으로 주정부를 통해 개혁안을 권장하려는 목표로 최근 "Race to the Top" 이라는 $4 billion 규모의 50개 주 경합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Ⅲ. 학생정보 시스템 구축

지난 10여 년간 미국 교육개혁 논의 중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것 중의 하나가 학생 개인의 교육경력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마치 모든 시민이 주민등록 번호를 소유하게 하여 개인의 경제적 · 사회적 상황을 정부에서 관리, 추적할 수 있게 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다. 개별적으로 부여된 학생 고유의 번호를 토대로 개인의 전체 교육경력, 즉 입학, 전학, 또는 졸업 상황과 같은 기본 정보에서부터 학과목 성적 등 구체적인 정보를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 총괄적으로 수집하여 학생들의 교육성과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개선하는 데 사용하려는 것이 기본 취지이다.

대부분의 교육기관에서 기본적인 학생정보는 이미 수집하고 있다. 단지 교육기관 간 학생정보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이 교육기관 간을 이동할 때 개별 학생들의 교육성취를 진단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정보들이 중도에서 손실되게 된다(예컨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 그리고 주 경계선을 넘게 될 경우, 즉 타 주로 이사를 가서 새로운 학교에서 교육을 계속 받게 될 때).

미국정부가 개별 학생들의 교육경력 데이터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다. 그동안 미국 대학생들의 학업능력 수준이 낮고 중도탈락자가 많아서 졸업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대학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것을 입증할 만한 학생수준의 데이터가 부재한 상황이라서 연방정부는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대학교육의 결과를 평가하고 결국 학생들의 대학 졸업률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모색하려는 취지에서이다. 미국 대학 신입생들 중 평균 20-30%는 기초학력이 부족해 입학 첫해에 대학에서 제공하는 기초학력 과목들을 이수해야 한다. 이로 인한 폐해는 점점 커지고 있다. 대학이 별도의 교수진을 고용해서 기초학력 강좌를 운영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뿐만 아니라 대학교육의 본래 기능이 변질되고 있다. 신입생은 대학 진학에 부풀었던 기대와 다르게 고교과정을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중도포기를 하기 쉬운데, 입학 첫 해에 학생의 중도탈락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보충교육(Remedial Education)이라고 할 수 있다.

기초학력 부족 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는 학생의 잘못이 아닌 제도적인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즉 교육기관 간 정보교류의 부재로 인해, 예컨대 중등학교에서 사용되는 학업 기준과 대학이 설정하는 기준 간에 격차가 있는데, 역사적으로 두 기관 사이에 협력이 부재하여 왔기 때문에 기준의 격차를 제도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결국 피해는 학생에게 돌아가게 된 것이다.

50개 주정부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주지사들의 협의체(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를 주축으로, 고등학교와 대학이 모두 인정하는 공통 교과과정과 평가제도(Common Core State Standards & Assessments)를 수립하는 데 현재 48개 주가 참여하고 있고, 지난 6월에 역사상 최초로 초 · 중등교육 공통 교육과정의 준거가 발표되었다.

학생 정보 시스템 구축의 노력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Data Quality Campaign(DQC)이다. 이는 학교 간, 교육 지역구 간, 교육체제 간, 교육부와 기타 정부 부처 간(노동부 등), 그리고 서로 다른 주정부 간에 그동안 별도로 수집해 오던 개인정보를 통일된 시스템으로 연계해야 하는 상당히 복잡하고 방대한 작업이다.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지식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대학과 고등학교가 협력해서 기준을 설정하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명확하게 인식시켜 줌으로써 대학진학 시에 필요한 수준의 교육성취를 고등학교 과정에서 달성하게 한다는 취지이다.

이 운동의 일환으로서 초·중등 학교와 대학 간에 학생정보 시스템을 연계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앞서 지적한 대로, 오바마 정부의 Race to the Top 경합 프로그램이 특별히 이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정보시스템 구축과 연계를 위한 노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 개선안은 Spellings 교육부 장관이 임명한 개혁자문위원회의 제안에 포함된 것이었으나, 개인의 사생활 보호권을 이유로 그리고 교육 지방자치제를 따르는 미국에서 연방정부가 주도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반론에 따라 중도에서 탈락된 것이었는데, 오바마 정부에서 주 정부의 경합 프로그램 평가기준의 하나로 포함시켰다는 것은 교육정책이 데이터를 준거로 해야 한다는 연방정부의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라고 보겠다.

학생 정보 시스템 구축의 노력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Data Quality Campaign(DQC)이다.[6] 지난 2005년부터 비영리단체들을 중심으로, 2011년까지 전체 50개 주가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전체 교육제도를 연결시키는 학생 개별의 Longitudinal Data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전개되어 왔다. 이는 학교 간, 교육 지역구 간, 교육체제 간, 교육부와 기타 정부 부처 간(노동부 등), 그리고 서로 다른 주정부 간에 그동안 별도로 수집해 오던 개인정보를 통일된 시스템으로 연계해야 하는 상당히 복잡하고 방대한 작업이다.

Connecticut, Maine, Washington 주 등의 실제 사례를 보면 교육전문가가 아닌 입법자들이 주도가 되어 짧은 시간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즉 이러한 취지의 주 의회법을 새로 만들어서 모든 교육기관과 주 정부기관 간에 개인의 정보를 연계시키고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한 것이었다. DQC의 2009년 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불과 몇 년 만에 괄목한 성과를 이룬 것으로 보이는데, 몇몇 예를 소개하고자 한다.[7]

- 50개 주 가운데 성공적인 데이터 구축에 필요한 10가지 기본요소를 모두 갖춘 주가 11주이다. 2005년에는 단 한 주에서도 이 준거를 충족하지 않았다.
- 10개 기준 중 절반 이상을 충족시킨 주가 48개 주이다.
- 총 30개 주에서 고등학교 졸업생 중 대학에서 보충교육(Remediation)이 필요한 비율을 확보하고 있다. 2005년에는 단 2개 주에서 이 정보를 수집하였다.
- 총 49개 주에서 입학, 중도탈락, 졸업에 관련된 학교

6) www.dataqualitycampaign.org
7) www.dataqualitycampaign.org/files/DQC_11-19.pdf

학생정보 시스템은 한국에서도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별히 장기적인 인재정책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더욱 필요하다. 교육정책 입안과정이 데이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은 문제 진단이나 처방은 주먹구구식의 행정이 되기 쉽다.

수준이 아닌 학생 수준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인 정보, 즉 과목 이수, 평가시험 성적 등을 학생 수준의 데이터로 수집하고 있는 것은 아직 23개 주에 불과하다.

- 총 49개 주에서 학생 정보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시험하는 기구를 설치하였는데, 이는 2005년 19개 주에 비해 대폭 확대된 것이다.

현재, DQC는 직업시장의 정보까지 연계하여 데이터 시스템의 범주를 확대하는 한편(이를 P20/Workforce Pipeline라고 함), 수집된 정보가 교사의 교수학습 평가나 교육정책가들의 정책결정과정에 실제로 사용되도록 정보이용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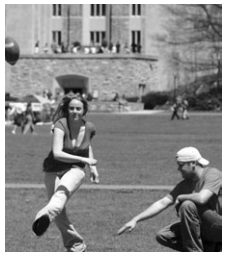
이러한 학생정보 시스템은 한국에서도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별히 장기적인 인재정책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더욱 필요하다. 교육정책 입안과정이 데이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은 문제 진단이나 처방은 주먹구구식의 행정이 되기 쉽다. 특별히 한국 상황에서 교육부와 다른 정부부처 간의 데이터 연계를 구축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 중의 하나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병폐인 대학졸업자의 실업 문제라고 본다. 전공분야(또는 비전공분야) 취업률, 초기 이직률, 평생교육 참여율, 사내 재교육의 내용 등등 대학교육과 노동시장 간 연계성에 관련된 기초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부터 국가의 인재양성 종합계획이 시작되어야 한다.

최근 한국에서도 대학 자율화정책을 확대 시행하면서 성과업적에 따른 정부의 차등 재정지원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사실상 대학을 평가하는 기준들이 매우 미흡해 보이는데에는 필요한 정보의 부재가 원인일 수도 있다. 예컨대, 성공적인 대학기관을 판별하는 기준이 지나치게 Input 중심(예컨대, 학생 대 교수 비율, 외국인 교수 비율)이거나 지나치게 단순한 양적지수인 경향이 있다. Output 지표의 대표적인 것이 졸업생의 취업률이다. 그러나 일선 대학에서 취업률이 집계되는 과정을 보면 정확성이나 신뢰성에 큰 제한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현재 학생단위의 총체적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미국 정부와 비영리단체들의 노력을 보면서, 한국이 글로벌 경제시대에 부합할 인재정책을 수립하는 데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부재한 것은 아닌가 자문하게 된다.

Ⅳ. 대학의 책무성 제고를 위한 기타 개혁안

최근 미국 대학들은 책무성 위기에 처해 있다. 전체 미국 대학생 인구의 80%를 교육시키고 있는 주립대학들은 특히 그러하다. 해마다 학생 수는 증가하지만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대학운영비는 반대로 줄어들고 있어서 일종의 이중고에 처해 있다. 더구나 대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주도하는 교육개혁이 대학교육에 초점을 맞추게 된 것은 불과 최근 몇 년간에 일어난 새로운 움직임이다. 한마디로 국가발전과 직결되는 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미국 정부는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추세이다.



학기관은 책무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변화를 갈망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부시 정권 말기에 크게 고조되었는데, 2008년 여름에 개정된 고등교육법(The Higher Education Opportunity Act of 2008)은 미국사회에서 현재 대학의 책무성 요구가 어떠한 수위에 달하고 있는지를 가늠케 하는 단적인 예라서 오바마 정부개혁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중심으로 법안의 주요 사항을 소개하려 한다.[8]

1. 교육비

연방정부 교육부의 학자금 지원을 받는 대학기관들[9]로 하여금 해마다 등록금을 보고하게 한다. 그 중 등록금 인상률이 상위 5%에 속한 대학은 별도로 자체 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상의 이유를 설명하고 차후 등록금 안정화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설명하게 한다. 교육부는 이 대학 순위 리스트와 보고서를 일반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모든 대학의 웹사이트에 예상되는 대학비용을 추정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Net Price Calculator)가 제공될 것을 의무화한다. 대학비용의 추정은 당해년도 뿐만 아니라 차후 몇 년간에 걸쳐 제시되어야 한다.

한편, 주 정부의 주립대학 운영비 지원 수준이 일정하지 않아 대학 등록금 인상의 원인이 되는 악순환을 개선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주정부의 대학재정 지원 수준을 매년 보고하게 하여 만약 최근 5년 평균치에 미달하게 되면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주에 대한 재정지원 프로그램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한다. 주정부의 재정지원 수준이 평균치로 회복될 때까지 불이익이 계속된다.

2. 대학평가 인정

각 대학에서 학생들의 학업결과(Learning Outcomes)를 측정해 공개해야 하는 것이 대학 평가인정 심사의 새로운 준거가 되었다. 그동안 연방정부와 대학 그리고 대학 평가인정기구들 사이에서 팽팽한 접전을 벌여온 이 문제는 결국 연방정부가 학생의 학업결과를 측정하는 구체적 준거를 규정하는 것을 금지하였는데, 그 대신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평가준거를 수립 시행하되 평가인정 기구가 설정한 표준기준에 부합되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학생의 학업결과를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과 도구의 개발을 위해 전문가의 논의가 수년간 계속되어 왔다. 아직도 전문가들 간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지만, 최근 일부 대학들에서 자발적으로 선택, 시행하고 있는 평가도구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National Survey of Student Engagement, Collegiate Learning Assessment등이 있다.(특히 CLA는 OECD의 Assessment for

8) www.ed.gov/policy/highered/leg/hea08/index.html
9) 이를 일컬어 Title IV participating colleges and universities 라고 한다. 모든 연방 정부의 규제는 이 대학들에 국한하여 적용된다.

Higher Education Learning Outcomes 프로그램에서 채택된 측정도구이다.)

마지막으로, 새 고등교육법은 대학평가인정기구들로 하여금 각 대학의 평가인정 심사 결정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일반인들에게 공개할 것을 의무화하여 대학의 책무성을 판단하는 정보를 일반대중이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V. 맺음말

올해 초부터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오바마 정부의 대학교육 개혁안이 어떠한 배경에서 태동되었고 개혁안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주도하는 교육개혁이 대학교육에 초점을 맞추게 된 것은 불과 최근 몇 년간에 일어난 새로운 움직임이다. 연방정부 교육정책의 기본 틀이라고 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은 보통 4-5년에 한 번씩 개정되는데, 가장 최근의 개정법은 무려 5년이나 지연이 된 것이다. 지연이 된 이유 중의 하나는 역사상 전례가 없는 수준의 많은 개혁조항을 포함하였기 때문인데, 대부분 대학기관의 책무성을 염두에 둔 정부의 규제적 성격이 강한 것들이다. 한마디로 국가발전과 직결되는 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미국정부는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추세이다.

대학 내부에서는 이러한 추세를 매우 조심스럽게 관망해 오고 있었으나, 오바마 정부의 전폭적인 교육지원 정책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대학이 처한 재정난과 사회적 신뢰의 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듯하다. 특히 전문대학들은 오바마 정부의 특별지원으로 예년에 없이 사기가 고조된 듯하다. 그러나 오바마 개혁 목표의 성취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이다.

필자가 볼 때 현재 개혁의 움직임이 고무적인 이유는 대학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높아진 것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협력관계가 부재하였던 기관과 단체들 사이에서 개혁의 노력을 연계하고 있다는 점이 특별히 고무적이다. 왜냐하면 초중등 교육기관과 대학 사이에서, 비영리 교육지원 단체들 간에, 서로 다른 주 정부 간 또는 주 정부와 연방 정부 간, 그리고 교육부와 다른 정부기관 간에 인적 물적 그리고 데이터 시스템을 연계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최근에 이처럼 개혁운동이 광범위해지고 있는 데에는 경제위기에 처하여 의기소침해져 있는 대학들에 대한 적절한 응급조치를 선택한 오바마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재정적 지원이 큰 몫을 하였다. 미국의 국제적 위상의 위기를 또 한 번 현명하게 사용한 덕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특성이 있다.

위기상황에서도 가장 쉽고 빠른 길만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책가들이 새로운 정책을 고려하고 수립할 때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초로 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연방정부는 고집하고 있고 또 주 정부와 대학기관에까지 요구하고 있다. 미흡한 자료 또는 부정확한 자료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기적 안목에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흔히 국지적이거나 계속성이 없는 교육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 특히 기관 간 연계가 자의적 타의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은 새로운 변화이다.

올해 11월로 예정된 중간선거는 오바마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를 재평가하고 그동안 오바마 정부가 추진해 온 야심찬 대학교육 개혁안들의 귀추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추측으로 이 곳 워싱턴 정가에서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교육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정치적 의지가 밑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은 어느 나라이고 마찬가지이다.

대학 자율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역할

이기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 고려대학교 총장

I. 서론

오늘날 우리 대학은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대학 간의 경쟁은 이제 국경을 넘어 국제적 경쟁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에 따른 질적 제고의 문제와 대학의 본질적인 기능에 대한 원론적인 질문들이 대학사회 안팎에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대학의 자율성 확대와 경쟁력 문제가 부각되면서 조속히 해결해야 할 다양한 현안과 과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국가의 경쟁력을 담보하고 있는 대학이 국가와의 관계에서 규제와 지시에 의한 수직적 관계에서 탈피하여 자율성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수혜자와의 관계에서 상호 호혜적이면서도 책무성을 가지고 실천해야 할 과제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과 현실 속에서 학문의 순수성과 실용성의 문제를 조화롭게 이루어내야 할 현안 등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이들 문제들을 효율적이면서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 지배구조와 행정조직을 선진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국외적으로는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전반에 걸쳐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무한경쟁의 시대에 우리 대학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대학혁신을 통하여 국제화시대에 걸맞은 수준의 통용성과 호환성을 지녀야 한다. 우리 대학들이 다양성과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개별 대학들이 지닌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특성화하고, 학문적 개방성과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또한,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그곳에 가능한 재원과 자원을 집중 투입해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교수들의 전문성과 연구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대학 자율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수행해야 하는 역할에 대하여 정부의 고등교육정책과 대학현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교협이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Ⅱ. 정부의 고등교육정책과 대학의 현실

지식기반사회를 맞이하여 사회 전반에 걸친 화두 중에 하나는 경쟁력 제고라 할 수 있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래사회 전망을 바탕으로 내적인 변화와 혁신, 그리고 소통과 융합이 전제되어야 한다.

국내외 기관들이 조사한 국내 대학의 경쟁력 지수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한국의 고등교육 경쟁력 수준은 그다지 높게 평가받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원인은 다양하게 분석해 볼 수 있다. 즉, 경쟁국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정부의 재정지원, 자율화와 개방화, 그리고 국제화 추세에 뒤따라 주지 못하는 각종 규제, 국제적 수준(global standard)에 뒤처진 교육역량과 연구능력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대학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와 대학의 자기반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자율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각종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학 자율화 차원에서 대입전형계획을 대교협에 이관하고, 대학입학사정관제와 같은 대학입시 선진화방안을 도입하였으며, 대학교육의 수요자를 위한 정보공시제 정착 및 자율적인 질 관리를 위한 대학자체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학기관평가인증제 등을 도입하여 제3자에 의한 기관인증을 통한 고등교육의 질을 관리하고자 하고 있다.

둘째, 선택과 집중의 차원에서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사업 등을 통한 "연구 잘하는 대학"에 대한 집중 지원과 함께, 대학 학부교육의 질과 경쟁력 제고를 통해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우수 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을 2008년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기존의 「교육역량 강화 지원」사업과 더불어「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잘 가르치는 대학"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것은 그 동안 대학의 주된 관심사였던 학생을 "잘 뽑는 경쟁"에서 학생을 "잘 가르치는 경쟁"으로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교육보다는 연구에 더욱 적극적이던 대학과 교수 사회가 학생교육에 더 큰 관심과 투자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대학 선진화방안의 하나로써 대학구조개혁의 추진이다. 대학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대학들은 학과 통폐합, 행정시스템 개선 등을 포함한 대학혁신 및 대학구조조정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와 함께 정부에서도 다양한 행 · 재정 지원을 통하여 정책적으로 대학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정부 주도에 의한 구조개혁은 이미 세계 주요국들에서도 대학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안이다.

변화와 개혁의 대상인 된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의 현황이 어떠한지 간략하게 살펴보면 한국 대학의 현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학은 특수 목적을 가지고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을 제외하고, 고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대학 수는 2010년 5월 현재 201개 4년제 대학이 있으며, 이중 국공립대학이 42개(일반대 27개, 교육대 10개, 산업대 5개), 사립대학은 159개(일반대 152개, 산업대 7개)이며, 이들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회원대학이다.

이를 국공립과 사립으로 구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대학수의 79%, 학생 수의 75%, 교원수의 75%, 직원수의 67% 가량을 사학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 프랑스, 독일을 포함한 OECD 국가들 대부분은 국가가 고등교육을 책임지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사립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31% 수준으로 국공립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나, 한국과 일본만이 사학의존도가 70%를 넘고 있다.

위의 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에 있어 사학의존도가 높으면서도 정부의 재정지원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대학은 시시각각 발전하는 학문의 수준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 실험실습 장비를 적기에 교체하는 등 세계적인 변화 속도에 보조를 맞추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 실제로 우리나라 1인당 고등교육비는 8,564달러로 OECD 국가평균 12,336달러의 69.4%에 그치고 있고, 고등교육비의 정부부담은 23.1%로 OECD 국가평균 72.6%와 비교해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고등교육예산은 GDP 대비 0.6% 수준으로 OECD 국가평균 1.1%의 반 밖에 되지 않으며, 이 예산의 대부분도 국공립대에 대한 지출이고,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한국의 대학들과 OECD 국가의 대학들과 비교하고, 경쟁력을 얘기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이다. 또한 재정지원도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통제와 각종 규제는 대학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고, 규제개혁에 대한 대학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은 것이 현실이다.

Ⅲ. 대입선진화를 위한 입학사정관제의 안정적 정착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최대 화두는 창의적 인재 육성이다. 국가 간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이하여 주요 선진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에서는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가 차원의 정책 개발과 재정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교육에 관해 말할 때마다 한국처럼 하자고 하는 말을 종종 들을 수 있다. 이는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는 한국의 교육열을 말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현실은 어떠한가? 양적인 팽창에 따른 질적인 확보가 미흡하다는 문제와 주입식 암기교육과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문제가 있으며, 대부분의 교육전문가나 국민들도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학교교육의 질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므로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기존의 정보와 지식을 새롭게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잠재력을 가지

고 있으며, 사고력, 문제해결력 및 창의력 등과 같은 고등 정신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다.

또한 금년으로 도입 4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진형 대입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된 입학사정관제는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것으로 지필위주의 시험이나 암기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전형자료를 심사하여 학생의 성적뿐만 아니라 잠재력과 발전가능성 등 다양한 능력과 소질을 평가하여 입학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한 학생들을 합리적으로 배려하거나 특수한 소질이나 업적을 가진 학생을 보다 다양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선발하는 데에도 목적을 두고 있다.

입학사정관제는 우리 사회에 팽배해 온 학벌주의, 성적지상주의로 인한 지나친 대입경쟁을 해소시키기 위해 도입한 선진형 대입제도라고 할 수 있다. 입학사정관제는 시험성적만 보고 당락을 결정하는 단편적인 전형이 아니라, 성장환경, 생활태도 등 학생의 특성을 구성하는 제반 요소와 함께 잠재력과 발전가능성을 심도 있게 평가하는 선진적 · 합리적인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입학사정관제는 대학마다 설립목적, 교육이념, 비전 등에 의해 학생선발이 갖는 의미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대교협에서는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입학사정관에게는 보편적인 윤리성이나 책임감을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서류평가나 면접에 대한 교육, 고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등 전문적인 교육훈련과 직무연수를 지속적으러 실시해 이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경험을 축적해 가고 있다.

입학사정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고교-대학이 모두 노력해야 한다. 우선, 고등학교에서는 교육방식 개선을 위한 노력과 함께 학교교육이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하고, 동시에 기존의 소모적 사교육비 부담이 보다 발전적인 교육투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공교육을 살리고 오히려 사교육을 줄이는 하나의 방안이 되리라고 기대한다. 이와 함께 대학에서도 학생부의 게재내용을 중요한 기초자료로 사용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이를 위해 고교에서 학생부를 충실하게 작성하게 되면 사교육이 침범할 수 없는 시스템이 갖추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하는 대학들은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해온 학생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전형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획일적인 스펙으로 길들여진 인재가 미래의 경쟁력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알 것이다. 창의적인 인재육성에 대학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므로 대입자율화의 일환으로 도입된 입학사정관제의 정착을 위하여 대학 스스로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 이제는 개별 대학들이 뽑은 학생을 잘 키우기 위한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Ⅳ. 대학과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대교협의 역할

정부의 대학자율화 조치로 대학입시 관련 업무가 2008년 대교협으로 이관되면서, 정부는 대입자율화의 마지막 단계인 3단계 대입 완전자율화는 2012년 이후, 즉 2013학년도 이후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대학의 학생선발권 자율화 기조와 중등교육 정상화가 균형을 이루는 기조 위에 대학, 고교, 대교협에 대한 지원을 통해, 3단계 자율화가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대교협이 대학과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즉, 국내 대학 간 자율협의체인 대교협이 급변하는 고등교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대교협의 사업들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사회를 선도하며, 새로운 세기에 걸맞은 대학의 미래상을 구축하고, 대학 및 대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지난 4월 8일 대교협 회장 취임 이후,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대학은 자율을 생명으로 하며, 자율 속에서만 학문의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학에 대한 각종 규제와 제한을 풀어 우리의 대학들이 자율과 사회적 책무성을 바탕으로 마음껏 창의를 발휘하면서 큰 발전을 이루도록 하겠다.

둘째, 선진형 대입제도인 입학사정관제도를 정착시키도록 하겠다. 학생선발에 있어 1-2점의 점수 차이보다는 인성과 덕성, 그리고 창의성과 잠재력을 위주로 학생을 선발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참 인재를 키움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

셋째, 대학의 경쟁력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지금까지 우리 대학이 짧은 시간동안 급속하게 발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양적인 팽창에 따른 질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아 세계적인 기준에 비추어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 연구 및 교육 역량의 제고와 시설 인프라의 혁신, 그리고 국제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 우리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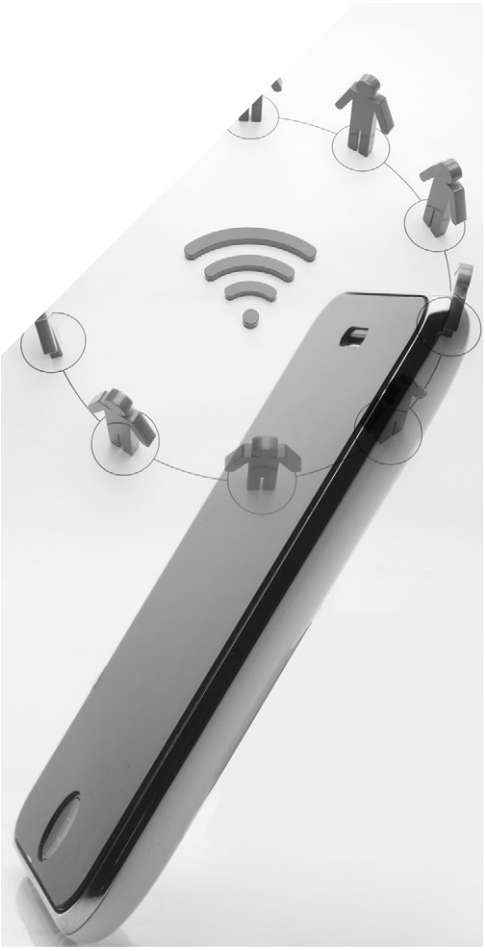
넷째, 국내 대학간은 물론 해외 대학 및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본격적인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다. 대교협이 주관해온 세계대학총장포럼 및 각종 국제세미나를 통해 아시아와 미국을 포함한 외국의 대학교육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다섯째, 학교, 학부모, 교직원, 학생 등 교육 이해당사자들이 협심하여 대학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서로 간의 대화를 유도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다. 대교협에 설치되어 각계각층의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는 교육협력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소통과 화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

여섯째, 대학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인프라인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한국의 대학 현실을 고려할 때,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은 필수적이다.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고등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학 재정의 총량을 늘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근거 법률을 제정해 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의무지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교협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사학진흥법 제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요청하고 있으며, 공청회 개최를 통한 의원입법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 대교협의 위상은 높아질 것이고, 역할은 더욱 중요해 질 것이다. 대학자율화 조치에 따라 정부로부터 이관된 대입전형업무에 대한 엄격한 입시관리, 새로운 평가시스템 도입에 따른 자율적 질 관리 체제를 대학들이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평가인증을 통하여 국제적 호환성을 가질 수 있는 대학교육이 되도록 해야 한다.

대학의 자율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구심체로서 대교협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자율에 따른 책임을 다함으로써 대학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대학자율화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하여 발생되는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도록 성심을 다해 노력하겠다.



스마트폰의 교육적 아이콘

– apps, social network, and advanced technologies 현황과 전망[1)]

글_ 임 걸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I. 들어가며

최근 스마트폰이 사회적 관심을 받으면서 스마트폰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각종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으며, 관련 산업도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특히 2009년 말 우리나라에 아이폰(iPhone)이 보급되면서 시작된 스마트폰 열풍은 전체 휴대폰 사용자의 1% 미만이었던 스마트폰 사용자 비율이 2010년에 약 10%의 점유율을 보일 것으로 다수의 사업자 및 언론매체가 예상하고 있으며, 삼성경제연구소는 '모바일 빅뱅과 기업경영의 미래' 보고서를 통해 2011년에는 국내 휴대폰 사용자 5명중 1명이 스마트폰을 보유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같이 집중된 관심의 대상인 스마트폰이 향후 교육의 장에서 '교수자' 와 '학습자' 들에게 보편화된 도구가 될 것임은 명료하며, 스마트폰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이 교수학습의 매체로서 수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활용방법 및 전략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필수적으로 따라야 한다. 특히 스마트폰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기술은 최신 테크놀로지의 총아로서, 교육적 적용을 위한 면밀한 이해와 분석이 요구된다.

1) 이 글은 다음의 글들을 편집하여 재구성하였다. 임걸(2010). 마이크로블로그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교육적 활용방안.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 논문지, 5(2), 113-122. ; 정수정, 임걸, 고유정, 심현애, 김경연(2010). 스마트폰의 교육용 어플리케이션 동향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11(2), 203-216. ; 임걸(submitted). 스마트폰 최신 기술동향과 교육적 활용가능성 탐색.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 논문지.

스마트폰 기술을 활용하여 교육현장에서 적용한 기존의 사례들 중에는 주로 온라인 사회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된 것들이 눈에 띄는데, 마이크로블로그를 활용함으로써 수업에서의 의사소통이 증가했다는 보고들이 있다. 국내의 경우 스마트폰의 교육적 활용사례를 찾아보기 매우 힘드나, 2010년 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KT와 양해각서를 체결,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을 지급하고 학습관리체제(Learning Management System: LMS)를 활용하여 스마트폰을 교육현장에 도입하게 되었다. 또한 필자는 2010년 3월 IT 업체와의 연구계약을 통해 고려대학교 "원격교육활용론" 강좌에서 학습자들에게 스마트폰을 무상으로 지급하여 다양한 방면의 교육효과를 검증할 수 있었다. 스마트폰의 보급추세와 교육적용 가능성을 가늠할 때, 향후 스마트폰의 교육적 활용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스마트폰 교육용 어플리케이션 기능 논의, 사회네트워크 기능의 활용, 그리고 첨단 테크놀로지 기반 스마트폰의 교육적 적용 등과 같은 이슈를 전망해 볼 수 있다.

Ⅱ. 스마트폰 교육용 어플리케이션 현황

필자는 공동연구진과 함께 스마트폰 교육용 어플리케이션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유료 또는 무료로 판매되고 있는 교육용 어플리케이션 중 다음의 기준을 통하여 주요한 프로그램들을 선정하였다. 첫째, 아이폰 한국 앱스토어의 '교육' 카테고리에 정식 등록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 중 2010년 4월 기준으로 다운로드 순위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유료 및 무료 어플리케이션. 둘째, 같은 방식으로 아이폰 미국 앱스토어에서 선정된 어플리케이션. 셋째, 애플사에서 발표한 'Rewind 2009: APPs' 에서 '2009 베스트 어플리케이션' 으로 선정된 교육용 어플리케이션. 넷째,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에서 추천한 교육용 우수 어플리케이션. 이중 복수 선택된 어플리케이션을 제외하고 총 85개의 아이폰기반 교육용 어플리케이션이 분석을 위해 선택되었다. 우선, 교육용 어플리케이션의 활용 유형에 따라 반복연습형, 도구형, 개인교수형, 자료제시형, 게임형, 시뮬레이션형, 평가형, 문제해결형 등으로 분류하여 그 결과를 살펴보았다.

선정된 교육용 어플리케이션들의 분류 결과는 〈표 1〉과 같이 콘텐츠를 반복해서 제시하는 반복연습형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도구형, 개인교수형, 게임형 등의 순서로 유형별 분류의 결과가 나타났다. 한편, 분석대상이었던 교육용 어플리케이션을 상호작용의 세 가지 유형, 학습자-콘텐츠간, 학습자-교수자간, 학습자-학습자간에 의해 분류해 보았다. 그 결과 학습자-콘텐츠간 상호작용의 유형은 단독으로 분류가 가능하였으나, 학습자-교수자간, 그리고 학습자-학습자간 상호작용 유형은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상호 통합하여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2〉과 같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용 어플리케이션의 상호작용 유형에 따른 분류는 크게 두 가지 양상을 띠고 있었다. 학습자-콘텐츠간의 상호작용만을 주로 지원해주는

〈표 1〉 교육용 어플리케이션의 활용 유형

유 형	빈 도	비율(%)
개인교수형	15	17.6
반복연습형	28	32.9
시뮬레이션형	4	4.7
게임형	11	12.9
문제해결형	0	0.0
자료제시형	11	12.9
평가형	1	1.2
도구형	15	17.6

유형과, 학습자-콘텐츠간의 상호작용과 더불어 학습자 - 교수자간 및 학습자-학습자간의 상호작용도 가능한 유형이다. 주로 학습자-콘텐츠간의 상호작용만을 지원하는 유형 즉, 스마트폰을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은 학습자가 혼자 학습내용을 공부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유형은 전체 85개중 81개로 약 95.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기반의 상호작용성을 통한 협력적 학습 등의 가능성을 활용하고 있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Ⅲ. 사회네트워크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

스마트폰의 여러 기능 중 많은 사용자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은 사회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이다. SNS는 교육적으로 많은 함의를 갖고 있으며 필자가 연구지원을 받은 수업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여 의사소통의 확대, 사회적 실재감(social presence)의 증가, 정의적 만족감 증대 등의 다양한 효과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해당 수업에서 활용되었던 사회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 주는 어플리케이션 몇 가지를 소개한다.

1. 개인 간 의사소통 어플리케이션

1대 1 기반의 문자 또는 사진 등을 전송할 수 있는 메

〈표 2〉 교육용 어플리케이션의 상호작용 유형 결과

상호작용 유형	빈 도	비율(%)
학습자-콘텐츠간	81	95.3
학습자-콘텐츠간 + 학습자-교수자간 + 학습자-학습자간	4	4.7

whatsapp 화면 M&Talk 화면

[그림 1] 개인 간 의사소통 어플리케이션 예

신저 어플리케이션은 상호간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해 유용한 도구이다. 아이폰 유료 어플리케이션 유명 목록의 상위에 있는 'WhatsApp' 은 단문 서비스(Short Message Service : SMS)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고 스마트폰 상에 등록되어 있는 상대방과 실시간으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또한 아이폰 사용자들은 그림, 비디오 및 오디오 등의 멀티미디어 서비스(Multimedia Messaging Service : MMS)를 제한 없이 주고받을 수 있다. WhatsApp은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지 않아도 메시지가 도착하면 알림음과 함께 팝업창을 띄워 이를 알려준다. 또한 국내기반 서비스인 'M&Talk' 역시 무료로 단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2010년 4월 현재 12만 명의 사용자들을 보유하고 있다.

2. 다자간 의사소통 어플리케이션

1대 다수를 기반으로 하는 의사소통 어플리케이션으로는 트위터 어플리케이션인 'TwitBird' , 그리고 '파랑새' 등이 있다. 트위터는 140자 내의 문자기반 온라인 호스팅 도구로서 저자의 프로파일 페이지와 '팔로워(followers)' 로 알려진 구독자들에게 내용이 전송되는 시

TwitBird 화면 파랑새 화면

[그림 2] 다자간 의사소통 어플리케이션 예

스템을 가지고 있다. 트위터는 전 세계적으로 그 사용자와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facebook 등과 더불어 전 세계 SNS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트위터는 리트윗(Retweet: RT)의 기능을 바탕으로 정보의 확산이 가능하여 다자간의 의사소통 범위가 확산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트위터는 향후 교육영역에서 행정적, 정의적, 인지적 목적으로의 활용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논의해 볼 수 있다.

3. 협력적 의사소통 어플리케이션

협력적 의사소통 어플리케이션은 기본적으로 다자간

스프링 노트 Forums Pro Blackboard Learn

[그림 3] 협력적 의사소통 어플리케이션 예

의사소통 어플리케이션의 속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다수의 협동 또는 협력적 작업을 통해 의견을 구성해 나가는 어플리케이션이다. 대표적으로 '스프링노트' 나 'Forums Pro', 'Blackboard Learn' 등이 있다. 이들 어플리케이션은 비교적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으나, 그 특성상 강력한 교육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우선 '스프링노트' 는 위키(Wiki) 기반의 협력작업 어플리케이션이다. 데스크탑(desktop) 기반의 소프트웨어와 연동되는 '스프링노트' 는 개인 및 그룹노트를 작성하여 그룹 매니저가 원하는 누구든지 공동기반의 내용을 작성, 수정, 편집, 삭제할 수 있다. '스프링노트' 는 웹 2.0의 특징을 적용하였는데, 학습자들이 공동으로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상호간 참조 및 의견교환 등의 학습활동이 이루어지므로, 이를 통해 협동 또는 협력학습이 온라인상에서 가능하며, 수업전략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협력학습도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Forums Pro' 역시 게시판(Bulletin Board) 형태의 온라인 토의가 가능하도록 기능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서 학습참여자 다수의 사고과정을 트래킹(tracking)함으로써 반성적 사고를 촉진시킬 수 있다. 'Blackboard Learn' 은 온라인 학습운영체제인 'Blackboard' 의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다양한 학습정보를 체험하고 온라인 토의를 진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SNS 어플리케이션은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활용하여 온라인 학습에서 강조되고 있는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극히 일부 어플리케이션을 제외하고는 학습목적으로 개발되었다기 보다는 사용자간 사회적 네트워킹을 주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므로 다양한 형태의 교수-학습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모바일 학습을 최적으로 구현시키는데 도

움을 주는 상호작용적 교육용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기존 어플리케이션 분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등의 선결조건이 요구된다.

Ⅳ. 스마트폰 기술발전 동향과 교육 활용 전망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기술은 최신 테크놀로지의 집적판으로서 그 발전속도가 비약적이다. 2010년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pple Worldwide Developers Conference(WMDC)에서는 애플사의 아이폰4가 발표되면서 스마트폰 기술의 단계가 더욱 진화되었다. 구체적으로, 영상통화, 고화질 동영상 촬영 및 편집, 그리고 자이로스코프 기능 등은 교육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크게 갖고 있다.

1. 영상통화 활용 원격교육 및 화상회의

와이파이(Wi-Fi) 기반의 오픈 스탠더드 영상통화는 기존의 원격교육 형식과 내용에 새로운 영향을 줄 수 있다. 사실 영상통화 기능은 이미 3G 이동통신 서비스와 함께 시작되었다. 그러나 출시 3년이 지난 현재 국내의 경우 10% 또는 그 미만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영상통화를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처럼 영상통화는 초반의 기대와는 달리 큰 주목을 끌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영상통화가 성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들은 비교적 저해상의 화질에도 불구하고 비싼 요금을 지불해야 하거나, 사적인 통신수단이라는 이동전화의 특성상 본인의 얼굴을 노출하면서 통화하는 서비스가 어필하지 못했기 때문 등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최신 스마트폰에서 구현되는 영상통화 기능은 와이파이 기반의 무료라는 큰 특징을 갖는다. 무료로 송수신되는 영상통화는 사용자들이 적극적으로 영상통화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교육현장에서도 특정한 장소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되었던 원격교육(distance education)이나 화상대화(video conference)의 범위를 극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

또한 와이파이 지역은 현재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므로 영상통화의 확산은 교육의 형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와이파이 지역의 확대는 국가나 주차원 또는 민간에서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뉴욕시의 경우 NYCWin(New York City Wireless Network) 계획을 바탕으로 2009년 5월 뉴욕시의 와이파이 영역을 구축하였으며, 홍콩에서는 GovWiFi(Government WiFi Programme)를 통해 2010년 3월 현재 도시의 380개 주요망에 와이파이를 개통시켰다. 우리나라의 경우 와이파이 지역이 다양한 영역에서 늘어나면서 연말에는 약 5만개 지역에서 구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와이파이에서 사용이 가능한 영상통화 기능은 학습자들이 장소에 제약받지 않고 원하는 곳에서 상호간에 연결되어 원격교육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특정한 집체교육 형식의 원격교육이 아니더라도 학습자가 선호하는 장소에서 접속하여 원격교육의 내용과 대상에 접근할 수 있다.

2. 멀티미디어 활용 교육

스마트폰 상에서 사용자들이 손쉽게 고화질의 비디오를 촬영하고 편집할 수 있다는 특징은 양질의 자료를 학습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준다. 특히 이러한 자료가 스마트폰을 통해 널리 확산되어 활용될 수 있다. 즉, 스마트폰에서 촬영한 내용은 이메일 또는 SNS 어플

학습자원의 생성이 교수자에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에게도 주어지므로 보다 참여적이고 적극적인 학습활동의 전개가 가능하다. 나아가, 교수자와 학습자의 의사소통과정에 있어서 텍스트나 사진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손쉽게 동영상으로 작성하여 전송할 경우 의사소통의 확장적 향상이 이루어진다.

리케이션을 통해 다양한 학습자와 즉각 공유할 수 있다. 특히 고화질의 동영상은 기존의 텍스트 또는 사진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정보의 전달 양이나 방법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데, 학습자들이 스마트폰 상에서 쉽게 촬영하고 편집, 전송, 교환함으로써 학습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다. 이와 유사한 전례로는 사용자들이 직접 촬영하여 온라인상에서 동영상을 공유하는 UCC(User Created Contents)를 활용한 교육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런데, 기존에 UCC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별도의 캠코더나 저해상도 및 전송 제한 등이 있는 휴대폰 동영상 기능이 활용되었다. 그러나 스마트폰에서 구현되는 고화질의 비디오 촬영 및 편집, 전송 기능은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게 된다. 따라서 UCC를 활용한 멀티미디어 기반 교육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다. 또한 전송된 비디오 파일은 스마트폰의 특성을 활용할 경우 공동지식 형성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즉, 유투브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파일이 게재될 경우 다양한 학습자들의 피드백과 의견을 공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문제해결학습(Problem Based Learning), 구성주의적 학습(constructivism) 방법을 통한 지식과 정보의 습득이 가능하다. 이는 웹 2.0에서 추구하는 참여적 수업방식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학습자들이 온라인 또는 모바일 LMS상에서의 지속된 토의(threaded discussion)를 통해 학습과정을 진행하면서 주요한 학습의 매개체로 동영상이 활용되거나, 지식과 정보를 수반한 매체로서의 동영상 활용 등이 논의된다. 이때 학습자원의 생성이 교수자에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에게도 주어지므로 보다 참여적이고 적극적인 학습활동의 전개가 가능하다. 나아가, 교수자와 학습자의 의사소통과정에 있어서 텍스트나 사진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손쉽게 동영상으로 작성하여 전송할 경우 의사소통의 확장적 향상이 이루어진다. 특히 기존 교육용 어플리케이션들이 대부분 교수자와 학습자 또는 학습자간 상호작용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방적 지식전달의 형태임을 감안할 때, 고화질의 동영상 촬영 및 수월한 편집 기능은 의사소통을 촉진시켜 학습의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3. 증강현실 및 게임기반학습

자이로스코프 기술의 스마트폰 적용에 따라 증강현실과 게임, 그리고 이를 활용한 게임기반 학습(Game-Based Learning: GBL)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게임기반학습의 교육적 효과는 이미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실천전략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게임기반학습의 영역은 순수한 게임영역에 비해 그 콘텐츠와 기술적용이 비교적 느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이로스코프를 활용한 게임 어플리케이션이 등장하긴 하였으나, 게임기반학습 영역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러한 시도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게임기반학습이 지나치게 단순하거나 흥미롭지 못하다는 불만을 해소하고 학습의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일반 사용자들이 누리고 있는 게임에서의 첨단기술 및 콘텐츠를 게임기반학습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된 교육적 활용 현황은 이미 가상현실을 활용한 문제해결중심의 게임기반학습 등이 등장하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새로운 시도가 있으며, 향후 스마트폰 기술을 활용한 게임기반학습의 전망이 밝다.

특히, 자이로스코프 기술이 결합된 게임은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 AR)을 활용했을 경우 활용 범주가 확대된다. 계보경은 "증강현실기반 학습에서 매체특성, 현존감, 학습몰입, 학습효과의 관계 규명"이라는 2007년 박사학위논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증강현실의 교육적 활용 의미를 강조하였다. 첫째, 감각적 몰두 및 현존감 강화를 통한 직관적이고 체험적인 학습을 지원한다. 둘째, 실세계와 가상세계의 결합을 통한 실제적이고 구성주의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셋째, 실물형 조작방식에 의한 의도적, 능동적 학습수행을 도와준다. 넷째, 면대면 기반의 협력학습 환경이 강화된다. 증강현실 활용학습의 한 예로서는 MIT 대학의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작된 "Mystery at the Museum"을 들 수 있다. 이는 문제해결학습을 위한 증강현실 시뮬레이션으로서, 생물학자, 기술자, 탐정 등으로 이루어진 역할분담을 통해 학습자들이 단서를 수집하면서 범죄를 해결해 가는 과제를 가지고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갖고 있다. 스마트폰 상에서 자이로스코프를 활용한 증강현실이 기술적으로 고도 집적화된 스마트폰에서 구현이 가능하게 되면, 증강현실의 특징을 개별학습자들이 손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즉, 기존에는 증강현실기반 학습을 위해 일체형 방식 등의 별도의 도구가 요구되었으나, 스마트폰 내에서 구현되는 증강현실은 학습대상자들이 즉각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유비쿼터스 환경을 바탕으로 한 증강현실 기반 학습이 가능하다. 즉, 면대면 협력학습도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증강현실 학습체제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학습자들도 온라인으로 연결된 상태에서 증강현실을 활용한 실물적 몰입학습이 가능하게 된다.

V. 나가며

이상과 같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교육적 활용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스마트폰에서는 교육에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음은 물론, 선진화된 기술로 교육적 적용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글에서는 스마트폰의 교육적 활용을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및 기술의 교육적 적용을 위한 요구분석, 설계 및 수업전략 탐색 등의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스마트폰 기술동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실천할 수 있는 연구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IT 전문가와 교육자들의 융합된 노력이 효과적이다. 셋째, 교육의 장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위한 이해와 노력이 요구된다. 현실적으로 휴대폰 반입 또는 활용이 규제되고 있는 학교현장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인식전환과 더불어 스마트폰을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교육전문직 인사제도 개선, 전망과 과제

글_ **박영숙** 한국교육개발원 학교컨설팅평가연구본부장 · 수석연구위원

Ⅰ. 교육전문직 인사제도의 개선배경 및 경과

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개혁정책(대학입시, 학교 자율화 · 다양화, 사교육비 경감, 공교육 정상화 등)이 추진되면서 교육현장 지원 중심의 높은 교육지도력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교육전문직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 개편작업이 추진되면서 역할 재정립과 선발 및 전직 절차를 비롯한 인사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교육전문직의 역할에 대해서는 단위학교 교수 · 학습 지원과 컨설팅 지원 중심으로 재정립되어야 하며, 현장 지원 중심의 역할에 적합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인재가 선발되도록 인사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교육비리와 연계해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인사제도 개선방안의 수립을 권고 받은 바 있어(국무총리실 '10.4.20, 국민권익위원회 ' 10.4.21), 교육전문직 인사제도 개선은 국가수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부상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전문직 인사제도 개선방안 추진계획' 을 발표('10.3.17)하고 개선 관련 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개선작업의 일환으로 정책연구(과제명 : 교육전문직 인사제도 개선방안 연구)가 수행 중에 있고,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와 정책토론회가 7월중에 실시된 바 있으며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보완 중에 있다.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해 교육전문직의 역할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하고, 인사제도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일부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쟁점화 되고 있어 쟁점을 풀어 가는 과정에서 논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하에서는 교육전문직 인사제도의 개선에 관해 논의 중인 방안과 쟁점, 향후 추진일정 및 과제 등에 관해 기술하고자 한다.

Ⅱ. 교육전문직 인사제도의 개선 방향 및 방안

교육전문직 인사제도의 개선방향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가 제시되었다[1)]

첫째, 교육전문직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직종을 통합

1) 이하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책월례정책토론회(2010.7.20)에서 발표한 "교육전문직 인사제도 개선(안)"의 내용을 토대로 제시함

한다. 지역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개편됨에 따라 교육전문직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재정립하고, 단위학교 자율 운영에 적합한 지원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장학직과 연구직을 통합한다.

둘째, 교육전문직 선발제도를 강화하고 투명성 ·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 객관식 필기시험 제도를 개선하고 역량평가를 도입하는 등 선발절차를 강화한다. 아울러 외부 위원 50% 참여를 의무화함과 동시에 충원계획 수립과 예고제를 도입한다.

셋째, 전직제도의 합리성 · 공정성의 강화이다. 전문성을 강화하는 합리적인 전직제도를 운영하고, 전직에 따른 특혜소지 최소화로 공정성을 강화한다.

넷째 능력 · 성과중심의 평가체제를 구축한다. 교육전문직의 업무에 부합하는 평가체제를 구축하고 우수 성과자 인센티브 체제를 구축한다.

다섯째 임용 전 · 후 연수 확대로 전문성을 강화한다. 교육전문직 선발 후, 임용 전에 6개월 이상의 사전연수 기간을 도입하고, 직무수행 관련 각 단계별 필수 연수과정을 도입한다.

이상의 개선방향을 구현하기 위한 세부 개선방안은 10가지로 제안되었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에 관해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개선방안 1 : 교육전문직의 역할 재정립 및 직무기준 개발

교육전문직의 역할이 관리 · 감독, 행정 업무 중심에서 정책 기획, 학교 컨설팅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교육전문직의 직무구조를 장학 중심으로 개선하고, 직무영역과 직무기준을 개발하도록 한다. 불필요하거나 관행적인 업무는 축소하고, 행정업무 지원인력 배치 등 세부방안을 마련한다.

2. 개선방안 2 : 장학직 · 연구직 직종 통합

장학사(관)는 교육행정기관, 연구사(관)는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기관에 근무하게 됨으로써 업무가 구분되는 것 같으나 실제 업무수행에서는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업무 영역이 통합되어 가는 추세를 감안할 때 직종을 통합해 인사운영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통합을 추진한다.

3. 개선방안 3 : 객관식 필기시험의 폐지 및 역량평가 도입

〈표 1〉 교육전문직 인사제도 개선방안 개요

인사영역	개선지향성	개선방안
직무 및 직종	직무기준 개발 직종 통합	방안 1 : 교육전문직의 역할 재정립 및 직무기준 개발
		방안 2 : 장학직, 연구직 직종 통합
선발 · 임용	선발제도 강화 전형방법 개선	방안 3 : 객관식 필기시험 폐지 및 역량 평가 도입
		방안 4 : 전형절차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전직	합리성 및 공정성 강화	방안 5 : 전문성을 강화하는 합리적인 전직제도 운영
		방안 6 : 전직에 따른 특혜 소지 최소화
평가 · 승진	능력성과 중심의 평가체제 구축	방안 7 : 교육전문직 별도의 평가기준 개발적용 및 승진 소요기간 조정
		방안 8 : 우수 성과자 인센티브 체제 구축
연수	임용 전 · 후 연수 확대	방안 9 : 임용전 사전연수 확대
		방안 10 : 단계별 심화 연수 실시

객관식 필기시험에 대해서는 시험공부에 집중해야 하는 부담과 시험과목과 업무수행 간의 관련성 미약 등의 문제가 있어 객관식 필기시험을 폐지하고, 서류전형 후 1차 전형절차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업무수행과 연계한 과제중심의 주관식 논술과 정책보고서 작성 등의 방법으로 대체한다. 1차 전형에서는 역량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교육전문직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들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보완하고, 평가의 공정성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해 외부평가자 비율을 50% 이상 유지하며, 평가자 연수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높인다.

4. 개선방안 4 : 전형절차의 투명성 · 예측 가능성 제고

임용과정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교육행정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임용요건, 임용 절차 및 과정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임용 자격요건, 전형위원회 외부평가자 비율(50% 이상), 재전직 요건 및 절차, 채용 계획 수립 및 예고제(1년 전) 등을 중심으로 관련 규정을 마련한다.

5. 개선방안 5 : 전문성을 강화하는 합리적인 전직제도 운영

교육전문직 역할 수행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장기간 전문직 업무에 전념하도록 전직제도를 개선한다. 전직은 현장 중심의 정책수립과 교육정책의 현장정착을 위해 제한적으로만 허용한다. 교육전문직의 교장 · 교감 전직 가능 근무기간은 2년에서 4년으로 강화하며, 장학사(관) 각 직급에서 교원직(교장 · 교감)으로의 전직은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

6. 개선방안 6 : 전직에 따른 특혜소지 최소화로 공정성 강화

현재 공개전형 절차 없이 시행되고 승진 경로로 활용되고 있는 교장 · 교감의 교육전문직으로의 전직 시 역량평가 등 공개채용 절차 실시를 의무화한다. 교감경력 2년 이상 등 지원자격을 제한하고, 교육전문직의 교장으로의 전직 가능 근무기간을 4년으로 강화하여 현직 교사 출신 교감의 교장 승진 소요 연수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아울러 교감 · 교장 재직 시 특정분야 고성과자에 대해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7. 개선방안 7 : 교육전문직 업무에 부합하는 평가체제 구축

교감과 동일한 기준과 양식으로 평가하는 체제를 개선하여, 교육전문직에 적합한 별도의 평가기준을 개발 · 적용한다. 현행 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 연수성적, 가산점 등의 구성요소를 교육전문직의 직무에 부합되도록 조정하고 직무성적과 관련이 미흡하거나 경력과 중복되는 가산점은 축소한다.

전형절차	현재	개선
서류전형	• 서류심사 (교육경력, 연수이수점수, 최종학위, 연구발표실적 등)	• 학교장, 동료교사 추천서 • 학업성취도 평가자료 • 활동계획서
1차 전형	• 1차 객관식 필기시험 • 2차 주관식 논술	• 주관식 논술 • 정책보고서 작성 • 전문기관 위탁 시행
2차 전형	• 면접 및 현장실사	• 정책기획 역량 • 수업 · 학교컨설팅역량 • 현장 조정 · 소통역량 등

[그림 1] 교육전문직 선발 전형절차의 개선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 최저 승진 소요 연수를 현행 2년 이상에서 4년 이상으로 조정한다. 교육전문직의 역량은 직무수행 실적과 자기평가기술서 등의 평가자료를 토대로 진단하며, 역량개발을 위한 연수 요구를 수렴하는 과정으로 평가 방법과 절차를 구안한다.

8. 개선방안 8 : 우수성과자 인센티브체제 구축

장학관 내부승진 비율을 확대하고 성과 중심의 승진제도를 정착시킨다. 외부 전입과 내부 승진 비율을 조정하고 예고제를 도입한다. 고성과자에 대해서는 승진을 우대하고 성과급 지급 관행을 정착시킨다. 장학사-장학관-수석장학관 등 다단계 직급체제의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장기적 인사방안을 마련한다.

9. 개선방안 9 : 임용 전 사전연수 실시

교사직에서 교육전문직으로 전직 후 담당 직무내용과 교육행정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임용 전 일정기간의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임용 전 직무연수는 3개월 이상의 집합연수와 3개월 수습기간으로 6개월 간 운영한다. 연수 프로그램은 교육정책 및 직무 관련 강의, 교육청 실습, 기업체 실습, 현장방문, 수습기간 등 다양한 활동으로 편성한다.

10. 개선방안 10 : 단계별 심화연수 실시

단계별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승진 및 과장 보직자에 대한 사전연수를 강화하고, 교육전문직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유지 · 관리하기 위해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연수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Ⅲ. 교육전문직 인사제도 개선 관련 쟁점

교육전문직 인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몇 가지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 쟁점내용은 장학직과 교육연구직의 통합여부, 선발전형에서 필기시험 폐지여부, 전직 및 재전직 요건 강화여부, 선발자격에 경력기준 제시여부로 집중된다.

첫째, 장학직과 교육연구직의 통합여부에 관해서는 통합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통합이 필요하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업무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점과 업무융합이 가속화되는 점을 근거로 주장한다. 통합이 불필요하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직종에 따른 직무와 기능이 다르므로 함부로 통합할 수 없다고 보고 지금도 기관별로 어느 정도 업무가 구분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통합을 우려한다.

둘째, 선발전형에서 객관식 필기시험의 폐지여부에 관해서는 필기시험 준비에 따른 부작용 해소라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고는 있으나 필기시험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는 관점에서 폐지보다는 보완론이 제기되고 있다. 폐지해야 한다고 지지하는 관점에서는 필기고사 내용이 업무수행과 밀접한 연관이 없고, 교사 임용고사때 한번 검증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수행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중심으로 전형내용이 대체되어야 하고, 전형절차도 전문기관에 위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셋째, 선발 자격요건에서 교육경력 기준의 필요여부에 관해서는 경력기준 10년을 중심으로 논란이 있다. 10년 이상의 경력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시도별로 적용되는 경력기준이 대개 10~18년 정도로 되어 있어 법적 기준인 5년 보다 과도한 실정이므로 현 실정에 맞게 10년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반면 자격 기준 제시를 반대하는 관점에서는 자격요건은 시 · 도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본다.

넷째, 전직 제한여부에 관한 논의의 초점은 전직 제한요건의 강화에 주어진다. 제한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고 주장하는 관점에서는 전직이 중임 제한과 승진에 따른 근무 연수를 채우는 절차로 활용되고 있어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에서 제한요건의 강화를 요구한다. 반면 전직 제한을 우려하는 관점에서는 제한으로 인해 전문직 지원 인력이 감소될 수 있고, 현장과 괴리된 교육정책의 수립으로 교육정책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Ⅳ. 향후 추진 전망과 과제

금번에 추진되는 교육전문직 인사제도 개선정책은 특정 영역에 국한되는 부분적 개선이 아니라 인사제도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전면 개선이라는 특징이 있다. 혹자는 교육비리 근절의 관점에서 인사제도 개선을 다루는 것이라며 방어적으로 인식하기도 하지만, 이번 개선정책에서 지향하는 분명한 방향성은 교육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하여 단위학교 지원 중심으로 교육전문직의 역량을 증진시킨다는 점과 교육전문직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선발 · 임용하는 시스템을 확립한다는 점이다.

다양한 교육개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정책의 현장 착근을 유도하는 교육전문직의 역량은 매우 중요한 요건이다. 교육전문직에게 기대되는 핵심역량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아직은 논의가 미흡하지만, 교육전문직의 역할 재정립, 직무기준 개발, 교육전문직에 맞는 별도의 평가기준 개발 등에 관한 개선방안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점차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역량의 개념이 인사제도에 도입되어질 경우 선발전형과정에서 객관식 필기시험이 폐지되는 것이고,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현장 적합성 높은 다양한 전형방법이 적용되어질 것이다.

임용 전후 연수 확대라는 개선방안에 대한 기대도 높다. 프랑스에서 운영되는 '장학관훈련센터(Institution for Inspectors' Training)' 에서처럼 장학사 선발 후 1년간의 연수과정을 거쳐 배정되는 국가수준의 연수시스템은 임용 전 수습과정이란 점을 감안할 때 직무수행능력 제고, 현장 적합성 높은 전문성 촉진 등의 성과가 기대되므로 적극적으로 적용해봄직하다. 프랑스의 연수과정은 교육부와 지방정부와의 협력 관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관점으로 편성되며, 교과부와 출신 교육청, 배정될 교육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수습 근무하는 프로그램의 운영 성과가 높다.

인사제도 개선방안에 관해서는 쟁점사항에 관한 검토 보완작업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경과과정이 요구되는 일부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적용시기를 검토한 후 시행하게 될 예정이다. 인사제도 개선방안과 추진시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향후 지원되어야 할 몇 가지 시급한 과제가 부각되고 있다.

무엇보다 교육전문직의 직무기준 개발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장학직과 연구직의 통합논의를 선결해야 할 것이며, 직무 영역과 내용을 구조화한 후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수렴과정과 합의과정이 요구된다. 또한 임용 전후 연수 확대 방안 측면에서는 임용 전 연수 프로그램 개발뿐만 아니라 임용 후 직무수행에 필요한 주기적인 연수 프로그램 개발이 후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과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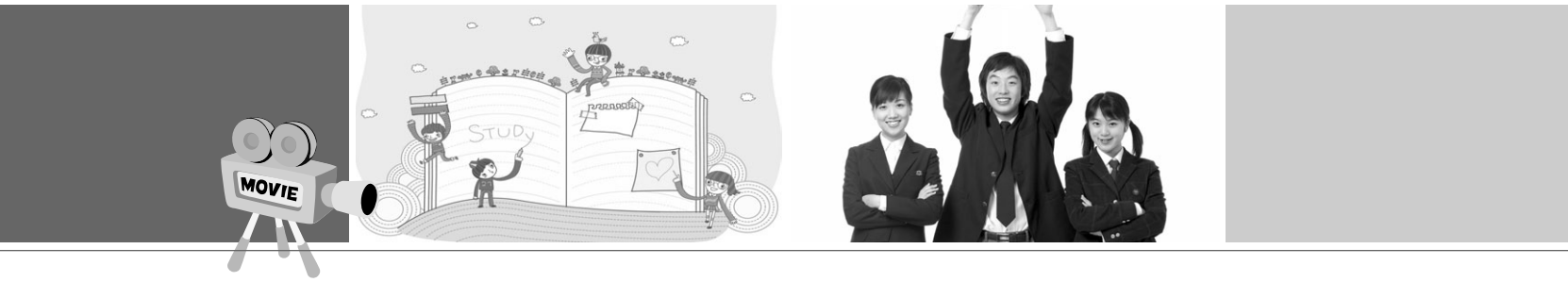
아울러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전문 양성과정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요구도 높아 신속히 논의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교육전문직을 선발하여 임용하는 경로 이외에 핵심역량을 기준으로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경로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양성과정과 연수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국가수준의 장학전문지원센터설치방안을 검토해봄직하다. 마지막으로 개선방안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관계 법령의 개정과 법령 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탈북학생들에게 맞춤교육 제공하는 디딤돌학교
안성 삼죽초등학교 · 한겨레중고등학교

글_ 신효숙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특임센터 학교지원팀장

우리 사회는 탈북주민 2만 명 시대를 맞이하였다. 최근 북핵 문제 및 천안함 사태로 인해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그런데 남북관계의 개선이나 통일문제를 거론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냉각된 국내외 분위기 속에서도 탈북주민들은 매년 2, 3천 명씩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지리적 통일, 정치적 체제 통일은 먼 미래 일임에도 불구하고 남한 사람과 북한 출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정신적 · 심리적 통합 연습은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학교와 교실 안에서 당면한 현안이 되어가고 있다.

탈북청소년들은 부푼 꿈과 희망을 안고 우리 사회와 학교로 들어오지만 곧 바로 탈북자에 대한 남한사회의 편견, 학업 따라가기, 심리 정서적 적응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학교 중도탈락률이 2007년 10.8%에서 2009년 4.9%로 떨어지고 있지만 남한 학생들의 탈락률과 비교해볼 때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중도탈락에는 탈북청소년들의 북한 및 제3국에서의 경험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무런 고민 없이 웃고 마냥 뛰어 놀아도 좋은 어린 나이에, 탈북청소년들은 북한을 탈출, 제3국을 경유해 남한까지 목숨을 건 여정을 겪었다. 북한 안에서는 기아에 허덕여야 했으며, 탈출과정에서는 수많은 인권침해와 수년간 끊임없



는 공안의 감시를 피해 다녀야 했다.

남한 입국에 성공한 탈북학생들은 성장기에 굶주리다 보니 발육이 원활하지 않고 여러 가지 질환을 가지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생존을 위한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고, 체포 구금이 이어지면서 심리적으로도 큰 상처를 입었다. 특히 학교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학령은 높은데 학력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이는 17살인데 초등학교 졸업장이 없거나, 19살인데 중학교 졸업장이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 중에서 제 나이에 편입하여 학령과 학년이 동일한 경우는 45%이고 학령과 학년의 차이가 1년은 30%, 2년은 16%이며 심지어 7년이나 8년의 격차도 보이고 있다.(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통계) 그래서 탈북학생들에게는 그들의 몸과 마음, 학력을 맞춰줄 특별한 학교가 절실한 실정이다. 바로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학교가 안성삼죽초등학교와 한겨레중고등학교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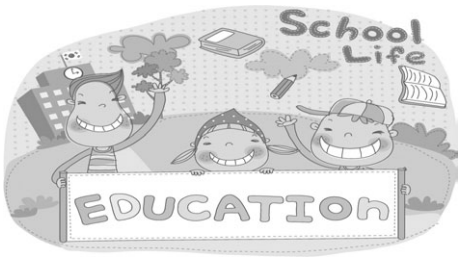
탈북학생들에게 '맞춤교육' 제공하는 안성삼죽초등학교

탈북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삼죽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연령대의 탈북 어린이들이 대부분 거쳐 가야 하는 최초의 학교이다. 탈북주민들이 남한에 들어오면 안성에 있는 하나원에서 남한사회 적응교육을 받게 된다. 하나원 재원기간 동안에 미취학부터 초등학교 연령대의 어린이들은 인근에 있는 삼죽초등학교에서 3개월간 위탁교육을 받고 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139기 841명의 학생들이 이 학교를 거쳐 갔다. 학교는 2009년 3월부터 2012년까지 3년간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지정한 '탈북 유·초등학생 입국초기 교육지원 방안 연구학교'로 지정됐다.

탈북어린이들을 위한 삼죽초등학교의 프로그램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남한사회 초기 적응교육 프로그램이면서 최초의 남한 학교 경험을 제공하는 곳으로, 이 학교의 경험이 이후 정착지 정규학교에서의 성공적 재학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학교는 통합교육과 분리된 특별교육을 적절히 조화시키고 있다. 총 10개 학급 중 탈북학생들을 위한 특별학급은 저중고 학년 3개 학급으로 편성하였으며, 현재 유치원생 15명을 포함해 총 35명의 탈북학생이 재학 중이다. 오전에는 원래 다니던 학력에 맞춰 남한학생들과 일반학급에서 하루 4시간씩(총 16-20시간) 공부하고, 점심을 먹고 난 뒤에는 특별학급에서 탈북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총 18-22시간)을 이수한다.

삼죽초등학교의 특별학급 프로그램의 특징은 통합교과다. 탈북학생들은 3개월의 초기 적응교육기간에 한국사회 및 학교에 대한 기본 이해를 해야 하므로 과목을 하나씩 나눠 듣는 것이 아니라 국어, 도덕, 사회과를 중심으로 한 '우리는 하나' 등의 통합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다. 학년별로 각 1권씩 총 6권으로 구성된 교과서는 학교생활, 예절생활, 민속놀이, 남북 언어 및 문화, 취미생활,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구성돼 있다.

탈북학생들은 대부분 소학교 중퇴나 중국 소학교 중퇴자가 많다. 그래서 입교자의 20-30%가 한글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 연령에 따라 일괄적으로 학년을 나누기가



쉽지 않다. 한글을 모르는 경우 교사가 오전시간을 활용해 과외교사처럼 일대일로 한글을 가르쳐 주고 있다. 또한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아이들을 위해 매주 2시간씩 전문 강사가 진행하는 미술치료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연구부장 이종오 선생님은 "미술치료가 아이들에게 좋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 탈북 어린이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삼죽초등학교는 일반학급에 탈북어린이들이 함께 수업을 받도록 해서 아이들끼리 친숙하게 어울리도록 유도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남한사회에 동화되도록 돕는 것이다.

월 2차례 목요일에는 남한의 여러 가지 문화를 겪어볼 수 있는 체험학습을 진행한다. 학교는 또 연 5회에 걸쳐 1박2일씩 협력학교 남한 가정에 탈북어린이를 보내 홈스테이를 실시해왔다. 삼죽초등학교 조명순 교장선생님은 "이 프로그램이 탈북 어린이들에게 대단히 중요하고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최근 천안함 사건이후 홈스테이 프로그램은 잠정중단된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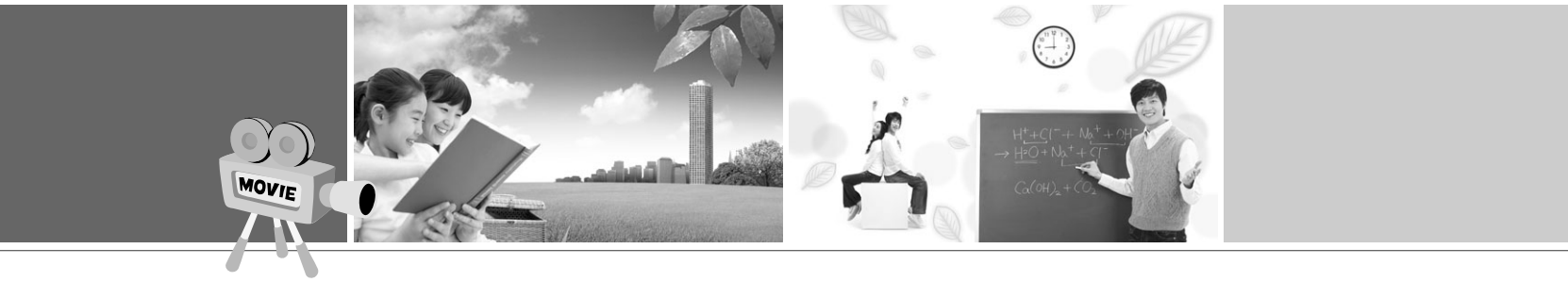
김태완 한국교육개발원장은 "3개월로 교육프로그램을 종료해야 하는데, 학생들이 남한사회에 제대로 적응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선생님은 "3개월은 대단히 짧다. 6개월이나 1년은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면서 "다른 기관 시스템과 맞물려 있어 교육기간을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다. 교과에 뒤처지거나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은 학교뿐 아니라 하나센터 등 다른 기관들이 공조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조 교장선생님은 "탈북 아이들이 일반학생들과 접촉할 기회를 가지고 통합교육을 받으면서 남한사회에 잘 적응하는 편"이라며 "삼죽초등학교 교사들은 중요한 교육을 맡고 있다는 책임감이 있고, 일반 학생들은 탈북 어린이들에게 익숙해서 잘 대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선생님은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면서 다만 "학교 자체에서 교육프로그램 계획을 세우고 만드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센터 등이 교육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개발해 주고 교사가 이에 대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측은 "수준별 다양한 교재 개발은 물론 교직원 연수나 워크숍 등 인적 물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탈북학생들을 위한 '디딤돌학교' 한겨레중고등학교

2000년대 초반 탈북청소년의 정규 중고등학교 취학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고 그마저 재학생의 중도탈락률이 30%를 훨씬 넘어서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활발히 모색되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은 개인적으로 또는 민간교육시설에서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취득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였다. 정부는 탈북청소년들이 남북한 간의 교육문화의 차이, 긴 탈북기간으로 인한 심리 정서적 부적응 및 수업 결손 등으로 일반학교에 적응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2006년 3월에 특성화학교인 한겨레중고등학교를 설립하였다. 2010년에 현재 총 84명을 졸업시켰으며, 173명이 재학 중이다.

학교의 설립 목적은 탈북청소년들이 남한의 일반 정



규학교로 편입하기 어려워할 경우에 적응을 지원하고 학력 결손을 보충함으로써 제도권 교육으로의 편입을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무연고 청소년이나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청소년, 학령과 학력 간의 차이가 심한 청소년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짧게는 2개월에서부터 장기적으로는 2년까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을 일정 기간 교육시킨 후 일반학교로 전학 또는 진학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디딤돌 학교' 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한겨레중고는 탈북학생만을 대상으로 중등교육과정에 해당하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중 특징적인 것이 학년별 반편성이 아닌 수업반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다. 탈북학생들은 학력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학령과 학력 등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학급, 학기(3학기, 또는 4학기) 등을 조절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인 학력은 없는데 나이가 많은 경우, 학력수준을 봐가면서 학령을 조정, 일반학교로 보내기도 한다. 또는 학령을 맞추기 위해 1년에 2개 학년 정도를 올리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 이 때문에 한겨레중고에서는 일단 연령에 맞춰 학생을 학급에 배치하고 집중적으로 학력을 보충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심리 정서적 안정을 높여주기 위해 기숙형 학교를 운영하면서 특성화 교과를 가르치고 있다. 음악치료, 놀이치료, 마음영성 공부 및 상담 지도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많은 탈북학생들을 위해 보건복지부 파견 의사가 일주일에 두 차례 중증 정신적 장애를 치료하고 있다. 교사들도 심리치료사 과정을 2년 동안 배워 학생들의 마음을 살피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교에는 행정적 학급단위의 담임과 별도로 10여명이 공동으로 숙식하는 기숙사별 세대담임이 있다. 이들 세대담임은 24시간 학생들과 공동생활을 하면서 가장의 역할과 함께 학업을 증진시켜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겨레중고에 들어오는 탈북학생들은 17-20세 사이가 가장 많을 정도로 학령이 높은 편이다. 대부분 취약계층들로 남한으로 들어오는 입국경비 때문에 부채가 많은 편이다. 이 때문에 학교는 학생들의 진로지도와 취업에 주력하고 있다. 탈북자에 대한 남한사회 일부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취업이 잘되지 않는 현실을 극복하자는 것이다. 학교의 노력 덕분에 최근 한겨레중고 출신자들의 취업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대학 진학률은 61% 가량 된다.

김태완 한국교육개발원장은 "탈북학생의 학교 중도탈락률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에 각각 10% 정도일 정도로 높은 상황에서 이들의 적응을 다방면으로 도와줄 디딤돌 학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곽종문 한겨레중고 교장은 "탈북학생들의 현실에 맞게 학교의 특성을 인문계뿐만 아니라 전문학교로도 스위칭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탈북학생들은 기초교육, 심리정서, 거주환경이 불안정해 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탈북학생들을 위한 디딤돌학교로서, 무연고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안전망으로서, 한겨레중고등학교의 이러한 실험적 시도들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기를 기대해 본다.

교육전문 사회적 기업, 행복한학교재단의 방과후 수업

글_ 박관규 한국일보 정책사회부 기자

서울지역 일부 초등학교에는 새로운 형태의 공교육 실험이 진행 중이다. 학교마다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교육전문 사회적 기업인 '행복한학교재단' 이 관리 · 운영하고 있다. 벌써부터 이 프로그램은 맞벌이 주부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행한 지 한 학기 밖에 안됐지만 확대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것이다.

행복한학교재단은 학생과 학부모를 만족시키기엔 교육내용이나 강사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를 지원해 학부모들의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 내실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학원가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현장체험활동 및 토론 창의교육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제공하며 저학년과 맞벌이 가정 학생에게는 교육뿐 아니라 보육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야간과 주말에도 프로그램을 운영해 숙제지도 및 도시락 등을 챙겨준다.

“공교육 내실화에 앞장선다”

7월 10일 오후 서울 성산초등학교 2학년 3반 교실. 10명 남짓한 1학년 학생들이 옹기종기 모여 창의력독서라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 중이다.

하지만 다른 독서 수업과 달리 교실이 떠들썩하다. 아이들은 정규 수업이 끝나 약간은 따분할 만도 한데 서로서로 의견 발표에 열성이다. 언뜻 보면 마치 웅변대회장 같다. 김지연 교사가 〈똥 벼락〉이란 동화책 캐릭터가 그려진 그림판을 들고 “욕심쟁이 김 부자는 왜 똥 벼락을 맞았을까요”라고 묻자 “도깨비가 혼내 줬어요” “심술 때문이에요” 등 다양한 답변이 쏟아진다. 엉덩이를 의자에 반쯤 걸친 채 김 교사의 질문에 목청껏 답하는 아이들, 수업을 놀이처럼 즐기고 있다. 학기 초 수줍음이 많아 아이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했던 이서연(가명)양도 손을 들고 “돌쇠에게 못되게 굴어서 그래요”라고 자신만의 생각을 답한다.

김 교사가 정답을 가리고 있던 표지를 그림판에서 떼어 내려 하자 떠들썩했던 교실에 순간 고요함이 감돈다. 숨죽이는 순간도 잠시, 정답이 나타나자 이내 아이들은 저마다의 생각과 비교해 가며 김 교사와 대화를 시작한다. 대화식 수업 방법을 독서 수업에 적용한 것으로 학생 수가 적어 가능한 일이다.

이 학교는 서울시와 SK그룹 등이 모여 설립한 행복한 학교재단에 위탁해 3월부터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국어, 과학 등 교과과정에 대한 보충 · 심화 학습은 물론이고 창의력독서, 미리 보는 체험 활동, 지도로 떠나는 지리 여행, 지구촌 문화 탐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학생 수도 한 반에 15명 미만이라 교사가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귀 기울일 수가 있다.

이 방과후 학교에서는 밤늦게 퇴근하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 저녁때까지 아이를 봐 주는 돌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날도 오후 5시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모두 마친 서연이는 돌봄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신관 2층 보육실로 향했다. 서연이는 맞벌이 부모 자녀라 어머니가 일을 마치고 올 때까지 이곳에서 지낸다. “서연이 왔니, 수업은 재미있었니,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냈고….” 보육담당교사가 어머니처럼 아이들을 챙긴다. 하루 일과를 들어 주고 고민을 상담해 주는 것도 보육담당

국어, 과학 등 교과과정에 대한 보충 · 심화 학습은 물론이고 창의력독서, 미리 보는 체험 활동, 지도로 떠나는 지리 여행, 지구촌 문화 탐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학생 수도 한 반에 15명 미만이라 교사가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귀 기울일 수가 있다.

교사의 몫이다.

김진향 성산초교 교장은 "워킹 맘이 늘고 있지만 아이들을 믿고 맡길 만한 곳을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풍성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아이들도, 엄마들도 행복하게 만드는 게 행복한학교다"고 말했다.

사회적 바람으로 태어난 '행복한 학교'

행복한학교는 서울시와 SK그룹, 시내 여성인력개발기관 운영 단체(NGO) 20곳이 함께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올해 1월 출범했다. 서울시는 체계적인 학생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과 강사 양성 관리를, SK는 학교경영을 맡는다. 첨단 IT 서비스 제공과 대학생자원봉사단 지원도 SK의 몫이다. 여성인력개발기관들은 강사 양성 및 교육콘텐츠 개발을 담당한다.

행복한학교는 방과 후 부모퇴근시간까지 보육사각시간의 공백을 메우고, 강사의 질을 높이는 그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이다. 또 사교육비 부담도 줄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는 특기과목 위주여서 보육 및 학습 돌봄 서비스가 부족하고, 강사는 보수가 적어 교육내용이나 학습수준이 학부모의 요구 수준에 못 미친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기업 및 시민단체와 손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양초교 동산초교 송정초교 양천초교 등 12개 학교가 시범 참여하고 있으며 2학기에는 20개교, 2012년에는 160여개교로 참여 학교를 늘릴 예정이다.

행복한학교는 특기적성과목 위주의 기존의 방과후학교와 달리 3가지 신개념에 따라 운영된다. 초등학생에게 필요한 특기 적성, 일반 교과, 보육 프로그램을 포괄하는 '울타리 교육(Total Edu-care Program)', 전 학년에 걸친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인 '꾸러미 교육(Package Edu Program)', 개별과목을 수준별로 반을 편성해 실시하는 '낱개교육(Class Edu Program)'이 그것이다.

가장 차별화한 기능은 초등학교 저학년과 맞벌이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울타리교육이다. 방과후학교가 끝나고 학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4~6시간 동안 숙제 지도, 놀이 수업, 준비물 챙기기 등을 해 준다. 아이가 귀가할 때는 학부모와 연락해 상황을 알리고 필요할 때면 보육담당교사가 집까지 아이를 데려다 주는 동행 귀가 서비스도 제공한다. 꾸러미교육과 낱개교육은 각각 학원 종

가장 차별화한 기능은 초등학교 저학년과 맞벌이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울타리교육이다. 방과후학교가 끝나고 학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4~6시간 동안 숙제 지도, 놀이 수업, 준비물 챙기기 등을 해 준다. 아이가 귀가할 때는 학부모와 연락해 상황을 알리고 필요할 때면 보육담당교사가 집까지 아이를 데려다 주는 동행 귀가 서비스도 제공한다.

합반과 단과반을 생각하면 된다. 비용은 주 20시간 수강 기준으로 16만5,000원. 사설학원 수강료가 평균 45만원인 데 비해 싸고 30만 원 정도를 받는 다른 방과후 학교에 비해서도 저렴하다.

이한승 행복한학교재단 경영기획본부장은 "보육까지 책임지는 행복한학교는 수업 이후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머물 수 있도록 양질의 놀이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느냐가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증된 우수교사가 학생들 지도

행복한학교재단이 파견하는 교사는 학교검증만 거친 그동안의 방과후학교 교사와는 차이가 크다. 재단이 책임지고 양성한 우수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교사는 재단 공동 설립자인 서울 시내 여성인력개발기관 운영 단체 20곳이 직접 키워 낸 1만1,200여명의 강사진 가운데 선발해 보낸다.

교사자격증을 가진 교과담당강사진뿐 아니라 일정한 교육을 거쳐 선발된 특기적성과목 강사, 집단행동 강사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교사경력을 보유했지만 경력이 단절된 주부들을 재교육시키는 서울시의 장롱 자격증 되살리기 사업으로 양성한 교과 강사들도 활용한다.

재단은 일단 보내진 교사들도 다각적인 시스템으로 검증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맡길 수 있다. 특히 개강 후 심사리스트를 통해 교사에 대한 개별 점검을 해 전반적인 수업내용을 평가하고 수강생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도 실시한다. 그리고 이런 사후 관리 결과를 토대로 교사 재계약 여부가 결정된다.

교사에게는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해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방과후학교 교사는 임시 위촉직이라 양질의 수업이 힘들었던 게 사실이었다. 그러나 행복한학교에선 여성인력개발기관 소속의 파트타임 정규직으로 전환돼 안정적 일자리를 갖게 됐다. 서울시는 5년간 방과후학교 교사뿐 아니라 학습돌보미와 사무직 등 7,400여개의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행복한학교는 학원가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현장체험 활동 및 토론창의교육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명예교사도 적극 활용한다. 〈가방을 들어 주는 아이〉의 저자 고정욱 작가, 〈수학의 유혹〉 저자 강석진 박사, 〈10대를 위한 자기경영 노트〉를 지은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장, 지휘자 정명훈씨, 가수 마야, 〈먼나라 이웃나라〉 저자 이원복 덕성여대 교수, 이혜정 요리전문가, 마술사 이은결씨 등 사회 저명인사가 모두 명예교사다. 지난 어린이날에는 초등학생 93명이 명예교사들과 강원 횡성군 숲체원으로 1박 2일 캠프를 떠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복한학교를 방과후 학교의 선도적 모델로 발전시켜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여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